

연구보고서 2016-44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이삼식 외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출산을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계봉오 국민대학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협 하와이대학교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6-44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이 삼 식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법신사

가 격 9,000원

[집필진]

세부 과제명	참여 기관	연구진
(연구보고서 2016-001-01)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효진 전문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01-01-1)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우석진 교수(명지대학교) 최윤진 전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001-01-2) 노동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노동 연구원	윤자영 교수(충남대학교)
(연구보고서 2016-001-01-3)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이길제 책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김준형 교수(명지대학교) 윤창원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01-01-4) 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영지 연구위원(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21+) 동제연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지원 위촉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01-01-5) 보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육 진흥원	서문희 원장(한국보육진흥원) 양미선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기숙 팀장(한국보육진흥원)
(연구보고서 2016-001-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성 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국민대학교) 김영미 교수(연세대학교)
(연구보고서 2016-001-01-7) 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사회학회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필숙 연구위원(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심규선 연구위원(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01-01-8)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경제추적 연구소	이상협 교수(하와이대학교) 이철희 교수(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서울대학교)

발간사 <<

한국 사회의 경우, 2001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이 현재까지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들의 출산 행태의 합으로서 저출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조건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에 대한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조언을 제공해 준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그리고 본 원의 이상림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15
제1절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7
제2절 거시 사회 환경과 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4
제3절 기본 분석틀	38
제3장 출산율 변동 추이와 특징	41
제1절 결혼 수준 변화	44
제2절 출산 수준 변화	49
제4장 교육과 출산	57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59
제2절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74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89
제5장 노동시장과 출산	93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95

제2절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06
제3절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17
제6장 주택과 출산	119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주택과 출산 간 관계	121
제2절 개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28
제3절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 거시-미시 연계	138
제7장 보건과 출산	141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건과 출산 간 관계	143
제2절 개인의 보건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161
제3절 보건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91
제8장 보육과 출산	19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육과 출산 간 관계	197
제2절 개인의 보육정책 이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20
제3절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30
제9장 성 평등과 출산	23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237
제2절 개인의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51
제3절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56

제10장 가족가치관과 출산	261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263
제2절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70
제3절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75
 제11장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77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종합 논의	279
제2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87
 참고문헌	311

표 목차

〈표 3-1〉 미혼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연령과 50세 미혼율	49
〈표 3-2〉 5년 기간별 합계출산율(TFR)과 출생아 수 변화	51
〈표 3-3〉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53
〈표 4-1〉 기초 통계량	66
〈표 4-2〉 품목별 교육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분류	67
〈표 4-3〉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72
〈표 4-4〉 학령기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74
〈표 4-5〉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질적 접근의 면담 내용	75
〈표 4-6〉 미혼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76
〈표 4-7〉 예비 신혼부부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78
〈표 4-8〉 유자녀 부모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79
〈표 5-1〉 교육 수준별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기준)	96
〈표 5-2〉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중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율	103
〈표 5-3〉 휴가제도 사용 종료 이후 1년 시점 동일 직장 고용 유지율	104
〈표 5-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0
〈표 5-5〉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1
〈표 5-6〉 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3
〈표 5-7〉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114
〈표 5-8〉 첫째아 출산 상관확률효과 모형	115
〈표 5-9〉 임금 근로 여성의 휴직제도 여부와 첫째아 출산	116
〈표 6-1〉 주택 보유 의식	122
〈표 6-2〉 혼인율 결정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123
〈표 6-3〉 출산율 결정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124
〈표 6-4〉 패널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125
〈표 6-5〉 주택이 조혼인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고정효과 모형	126
〈표 6-6〉 주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확률효과 모형	127

〈표 6-7〉 신혼부부의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	128
〈표 6-8〉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월평균 주거 비용	129
〈표 6-9〉 신혼부부의 자녀 수별 월평균 주거 비용	129
〈표 6-10〉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평균)	130
〈표 6-11〉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131
〈표 6-12〉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환경이 자녀 수에 미친 영향: 다중 회귀 모형	135
〈표 6-13〉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연기 결정에 미친 영향: 로지스틱 회귀 모형	137
〈표 6-14〉 신혼부부의 자녀 유무별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연기 결정에 미친 영향: 로지스틱 회귀 모형	138
〈표 7-1〉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149
〈표 7-2〉 산모의 출산 시 연령 분포	150
〈표 7-3〉 여성의 생식건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모형에 포함된 변수	163
〈표 7-4〉 기혼 여성(15~49)의 생식건강이 출생아 수(CEB)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164
〈표 7-5〉 심층 면접 참여자 현황	165
〈표 7-6〉 임신 및 출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범주화	169
〈표 8-1〉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보육 아동 수, 2015	199
〈표 8-2〉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199
〈표 8-3〉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2016년 기준)	200
〈표 8-4〉 보육료 지원이 t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214
〈표 8-5〉 양육수당 지원이 t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216
〈표 8-6〉 양육수당 지원이 t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218
〈표 8-7〉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 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영향	219
〈표 8-8〉 연구 모델 모형 적합도	222
〈표 8-9〉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 전체	222
〈표 8-10〉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전체 가구 대상)	223
〈표 8-11〉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전체 가구 대상)	225

〈표 8-12〉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1자녀 가구 대상)	226
〈표 8-13〉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1자녀 가구 대상)	227
〈표 8-14〉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2자녀 가구 대상)	228
〈표 8-15〉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2자녀 가구 대상)	229
〈표 9-1〉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다수준 분석	247
〈표 9-2〉 거주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다수준 분석	249
〈표 9-3〉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생아 수 간 관계: 포아송 회귀분석	254
〈표 9-4〉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산 의도 간 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출생아 수 2명 이하)	255
〈표 9-5〉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산 의도 간 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출생아 수 통제)	256
〈표 10-1〉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	269
〈표 10-2〉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272
〈표 10-3〉 자녀 수별 결혼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273
〈표 10-4〉 자녀 수별 자녀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274

그림 목차

[그림 2-1] 콜만(Coleman)의 거시-미시-거시 모형	18
[그림 2-2] 국가의 정책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	19
[그림 2-3] REPRO project의 기본 모델	21
[그림 2-4] 출산 결정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 적용	22
[그림 2-5] 인구 변화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RAND Europe의 개념틀	23
[그림 2-6]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과 건강 이슈	32
[그림 2-7]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 모형	33
[그림 2-8] 본 연구의 기본 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40
[그림 3-1] 결혼 건수와 초혼인율 변화	45
[그림 3-2] 초혼 건수와 초혼 비율 변화	46
[그림 3-3]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 변화	47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 변화	47
[그림 3-5]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변화, 1990, 1995, 2000, 2005, 2010	48
[그림 3-6]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1970~2015	50
[그림 3-7] 연령별 출산율 변화	52
[그림 3-8]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5	53
[그림 3-9] 1966~1970년 코호트 기혼 여성의 초혼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55
[그림 3-10]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별 평균 출생아 수(연령 표준화)	56
[그림 4-1] 초등~고등 교육까지 민간에서 지출하는 GDP 대비 교육비 비율, 2013	62
[그림 4-2]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부담 및 민간 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2012	63
[그림 4-3] 지역별 교육비 추이	67
[그림 4-4]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69
[그림 4-5] 지역별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70
[그림 4-6] 교육 문화 구조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91
[그림 5-1]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97

[그림 5-2] 대학 졸업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98
[그림 5-3] 고등 교육을 받은 35~44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 2013	99
[그림 5-4] 주요국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15	100
[그림 5-5]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2015	101
[그림 5-6]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106
[그림 5-7] 노동시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118
[그림 6-1]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 및 전세 가격 종합 지수(2015.12=100)	122
[그림 6-2]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130
[그림 6-3]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의 부모 동거 여부	132
[그림 6-4] 주택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거시-미시 영향 관계	140
[그림 7-1] 여학생의 첫 월경 시작 평균 연령	144
[그림 7-2] 남녀 학생의 첫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	145
[그림 7-3]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 및 성교육 수혜율	146
[그림 7-4] 성관계 경험자 중 여학생의 임신 경험률 및 인공임신중절 시술률, 남녀 학생의 성 매개 감염성 질환 경험률	147
[그림 7-5] 25세 이전에 초혼한 비율 추이, 여성 기준, 1990~2015	149
[그림 7-6] 출산 순위별 산모의 출산 시 평균 연령	151
[그림 7-7] 기혼 여성 난임 진단 비율(2009, 2012, 2015)	152
[그림 7-8] 연령별 비노생식기계 질환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3
[그림 7-9] 연령별 임신·출산 및 산욕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3
[그림 7-10] 연령별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4
[그림 7-11] 연령별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155
[그림 7-12] 연령별 진료실 인원	156
[그림 7-13] 연도별 기혼 여성의 임신 소모 횟수	158
[그림 7-14] 기혼 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별 임신 소모 횟수, 2015	158
[그림 7-15] 모성 사망비 및 태아 사망률 추이	159
[그림 7-16] 산모 연령별 모성 사망비 추이	160

[그림 7-17] 산모 연령별 태아 사망률 추이	161
[그림 7-18] 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193
[그림 8-1] 보육료 혜택 지수의 추이, 2000-2015	205
[그림 8-2]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추이, 2010-2015	208
[그림 8-3]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른 연구 모형	220
[그림 8-4] 2012년 경로 모형(1자녀 가구 대상)	226
[그림 8-5] 2012년 경로 모형(2자녀 가구 대상)	229
[그림 8-6]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34
[그림 9-1]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서 가정하는 성 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관계	238
[그림 9-2] 성 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른 출산율 변화 패턴	241
[그림 9-3] 남녀 임금 격차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250
[그림 9-4] 남녀 인식 차이와 여성의 성 역할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251
[그림 9-5] 성 평등 수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59
[그림 10-1] 주된 가임기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266
[그림 10-2]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	268
[그림 10-3]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가치관 분포	270
[그림 10-4]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76
[그림 11-1]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결혼·출산 행태 간의 인과관계도	287
[그림 11-2]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288

Abstract <<

Paradigm Shifts in Family Policy on Changes i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

Korea has experienced lowest-low fertility since 2001. In identifying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ertility decline, many micro-level approaches have been made with the focus on changes fertility behaviors among individuals and couples. However,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fertility changes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still less attempt has been mad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in which individual-level behavior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tructural changes in fertility levels and pattern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Korea's low fertility situations from a macro-micro-macro perspective, this study identifies the macro-level conditions related to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macro-level conditions include societ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health, policy (childcare), gender equality and values. This study addresses how these macro level conditions are associated with micro-level fertility intention and behavior.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aradigm shifts in policy approaches in ways to raise Korea's fertility level.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들의 출산 행태의 합으로서 저출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조건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시적 접근은 주로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개인(가구)의 상황이나 여건을 도출하는 것으로, 저출산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사회 환경 내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의 거시적 원인과 개인의 미시적 원인에 대한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 약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인구와 가족의 변화와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현상과 함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개발은 도시의 산업 자본과 농촌의

4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과잉 인구가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가족계획사업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입은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부부의 출산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한정된 가족 자원을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신분 상승 욕구 등으로 인하여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높아진 교육열로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 교육 참가는 남성의 전유물에서 점차 벗어나 여성에게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는 과거의 일인생계부양자가구에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IMF 외환 위기 등 경제 위기를 계기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 불안정이 증가한데다가 고학력화의 산물로 '3D' 일자리 기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역으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한 데다가 개발 시대의 산물로 부동산 투자를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는 전세금과 월세금마저 상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현상과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가치관은 점차 결혼을 부담스러운 사회제도로 여기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면에는 전통적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

회구조적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출산 수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교육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요소 타파,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변용에 적합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서열화 방지 및 교육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고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제로는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차별 타파를 통한 교육-고용 간 연계 도모, 성차별 불식,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선순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 관념을 부추기는 공급 중심에서 주택의 주거 관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배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는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를 위한 자금 지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공급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추어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한국 사회에서 만혼과 만산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생식건강 문제

는 청소년기부터 만연하는 등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출산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을 “언제 출산해도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혼 시기를 전제로 하는 출산뿐만 아니라 법률혼 외의 출산까지도 포함하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 새로운 지향성을 가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수요자(일반 국민), 공급자(보건의료기관), 제도(정부) 삼자 간의 노력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는 생식건강 관리 및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급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생식건강 관련 인프라(정보 체계 구축, 교육 제공, 사회 인식 전환, R&D 투자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공급 중심에서 다양한 선택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공급(양적, 질적)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담보할 수 없다. 출산과 연계하여 성 평등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미시적 차원의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보건, 돌봄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 불식, 가족 내에서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 등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높은 성 평등 실천은 사회적 생산은 물론 가족의 재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주요 용어: 저출산 원인, 거시-미시 접근, 패러다임 전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금세기에 들어 한국 사회는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저출산 현상(low fertility syndrome)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이며, 초저출산 현상(lowest low fertility)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은 유럽 사회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OECD 국가들 중 초저출산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국가는 13개 국가이다. 이들 중 10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국가는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5개국이며, 대부분은 현재 초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났다(OECD, 2016).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2001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 현상이 현재까지 15년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인구학적 지표들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 지속은 미래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내수 시장 위축, 경제 성장 둔화 등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보장 지출 증가, 병력 자원 부족 등을 야기할 것이다(이삼식, 최효진(편), 2014).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출산율 변동 추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에 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치권, 학계, 언론 기관 등에서 정책의 한계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저출산 현상 지속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해 왔다. 현상학적으로는 경제 위기, 주택 가격 상승 등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출산율 변동 추이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김두섭, 2007; 오창섭, 최성혁, 2012; 김민영, 황진영, 2016).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경우 사회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접근은 미흡했다는 한계성이 노정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미시적 수준의 개인 또는 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수준 또는 향후 출산 의향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밝히는 시도를 하여 왔다(정혜은, 진미정, 2008; 정은희, 최유석, 2013; 민현주, 김은지, 2011; 서정연, 김한곤, 2015). 그러나 미시적 접근을 통한 출산 결정 요인 파악은 주로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개인(가구)의 상황이나 여건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들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사회 환경 내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출산율 수준은 개인의 출산 행위 결과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미시적인 원인과 사회의 거시적인 원인을 연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도 출산율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거시-미시 간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환경이 개인들의 출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거시-미시 간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논의하였다. 연구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근간이 되는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외국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한국 사회에서 출산과 연관성을 가진 거시적인 사회 환경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기본적 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을 설정하였다.

제3장은 거시-미시 연계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출산 동향과 그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4장부터 제10장까지는 거시 사회 환경별로 거시-미시 연계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거시적인 사회 환경으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성 평등, 가치관 등을 포함하였다. 각각에 대해 거시적 환경을 진단하고, 그러한 거시적 환경이 개인(가구)의 상황(여건) 변화를 유발하여 출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거시-미시 연계 결과들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지금까지 연구들 대부분은 개개인 또는 개별 가구가 처해 있는 상황(일반 특성)이 출산에 대한 선호도와 더 나아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미시적인 접근은 개인이나 개별 가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적 분석의 결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지나치게 개인 또는 개별 가구의 미시적인 욕구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거시-미시 연계 접근(macro-micro perspective approach)을 적용한다. 이는 거시적 사회 환경 내에서 개개인들이 미시적 출산 행위와 관련 있는 장애 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거시적 사회 환경이 개인의 미시적 출산 의사 결정(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거시-미시 연계 접근은 단계적으로 시도한다. 우선, 거시 사회 환경 부문별로 거시-미시 연계 접근을 시도하여 출산과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한다. 다음으로 관련성이 큰 거시 사회 환경 부문들을 서로 연계시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거시 사회 환경은 사회구조, 문화, 가치관, 정책 등을 망라한다.

거시-미시를 연계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거시 사회 환경 부문별 속성, 자료 유용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선 거시 사회 환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론 고찰, 선행연구 고찰, 국가나 지역 단위의 통계를 이용한 기술 분석 방법 등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거시 사회 환경이 개인 또는 개별 가구의 상황(micro-conditions)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상황이 출

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사례 조사, FGI 등)와 양적 연구(회귀분석, 경로분석, 패널분석 등)를 적용한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거시 사회 환경이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으로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가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협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 환경은 다양하므로 어느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 사회 환경 부문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을 독립적인 연구팀으로 구성하였다. 각 연구팀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워크숍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팀 간 의견을 교류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전체 연구 과정에 걸쳐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의견들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제1절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2절 거시사회 환경과 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제3절 기본 분석틀

제1절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간 많은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의 추가 출산 의향이나 실제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친 미시적 요인을 분석하거나, 거시 자료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출산율이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 국가의 출산율 변동에 대한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 미시적 분석만 혹은 거시적 분석만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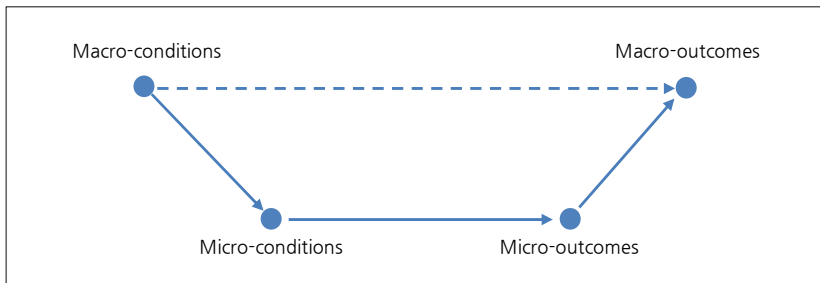
거시적 차원에서 출산율은 국가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즉, 미시 단위에서의 출산 결과의 합이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출산율 변화는 개인들의 행위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은 해당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 맥락적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예로 한국에서 1997년 발생한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 위기는 결혼율과 출산율에서의 변화를 가져 왔다. 거시적 차원으로서 국가의 경제 위기가 개인 혹은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다시 개인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의 의사 결정들의 총합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소자녀화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거시-미시 연계에 대한 관점의 부재는 암묵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의 변

화에 모든 개인들이 동일한 형태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거시적 맥락의 변화는 개인들의 특성 및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들의 출산 의사 결정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유럽에서 거시-미시 연계 접근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e, 2012; Matysiak and Vignoli, 2011).

Coleman(1990)은 제도나 조직, 집단의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거시 수준의 요인들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기보다 조직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거쳐 거시적인 사회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aub, Buskens, and Van Assen, 2011). 그는 좋은 이론적 설명은 미시-거시 연계와 관련하여 거시적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미시적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미시가 다시 거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이재혁, 2014).

[그림 2-1] 콜만(Coleman)의 거시-미시-거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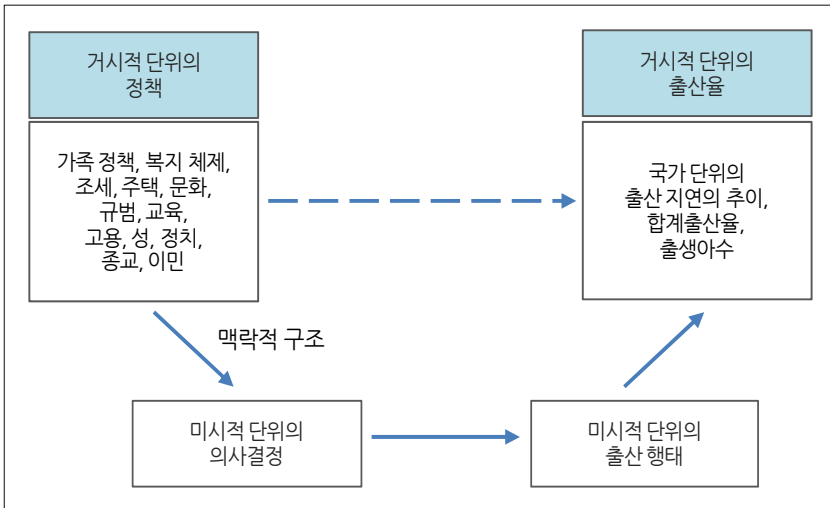


자료: Raub, Buskens, and Van Assen(2011, p.3). Micro-Macro Links and Micro-foundations in Sociology.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5:1-25.

이러한 콜만(Coleman)의 모형에 근거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가의 출산을 변화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Mills(2015)는 네덜란드의 출산율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제도, 문화적 규범 및 가

치가 거시 혹은 미시적 차원의 출산율을 변화시키는 선행 요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아동수당 및 보육 등의 가족 정책, 주택, 성 규범 등의 거시적 차원의 정책 및 문화적 규범이 개인들의 출산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시적 차원의 과정들의 합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출산율이 나타나는 패턴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영향 관계들을 [그림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2] 국가의 정책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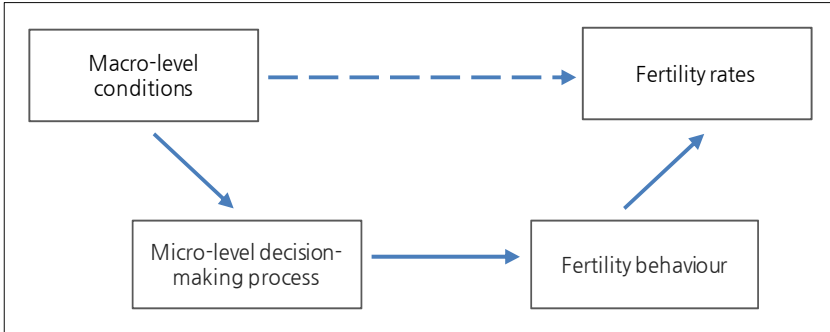
자료: Mills(2015, p.166). Chapter 9. The Dutch Fertility Paradox: How the Netherlands Has Managed to Sustain Near-Replacement Fertility. Rindfuss and Choe(Eds.)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pp.161-188). Springer.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는 이상자녀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들의 희망 자녀 수에 대한 선호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출산 행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차이에 대하여 Chesnais(2000, p.133)는 “가족 정책에 대한 잠재된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 2011). 이들이 수행한 REPRO(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Macro-Micro Perspective) 프로젝트의 주된 특징은 국가의 출산율은 개인들의 출산 행동의 합으로서, 출산율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거시적 환경이 개인들의 출산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들의 출산 행동은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출산의 합이 해당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이 된다. 이들 관계를 고려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출산율과 관련된 사회, 문화, 경제, 제도적 상황(경제 상황, 가족가치관의 변화, 현대 의료 기술의 발전,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여성 고용,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분석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또는 부부의 출산 의향, 가치관, 신념 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들 관계에 대하여 거시-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 REPRO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다학제적 접근, 협동 연구
-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
-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
- 개인의 출산 의향과 행태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
- 개인 차원의 자료와 거시 자료 통합
- 국가 비교 관점을 적용하여 맥락적 상황에 대해 연구
- 중요 요인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 사용
- 계획된 행위 이론에 적합한 패널 자료 등 다양한 자료 활용
- 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

[그림 2-3] REPRO project의 기본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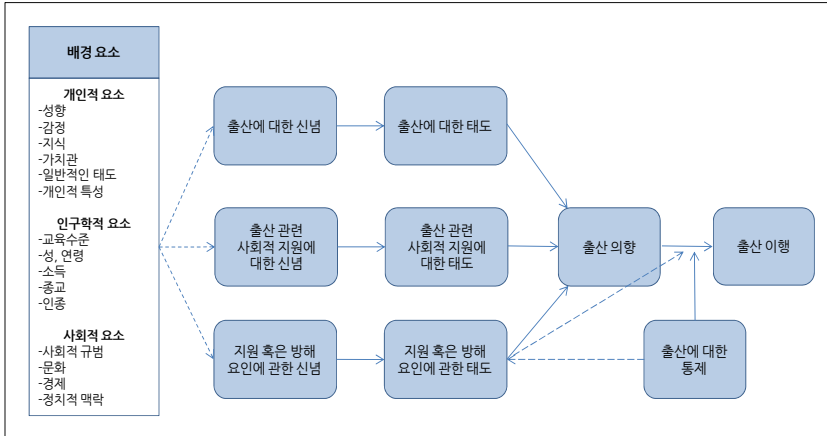


자료: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 p.17).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REPRO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 과정이다. Ajzen and Klobas(2013)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토대로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출산 의향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는 행동적 신념(behavior beliefs)으로서 자녀를 갖는 것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신념이고, 두 번째는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s)으로서 준거가 되는 개인 혹은 집단에서 기대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신념이 개인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지각된 통제 신념(control beliefs)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Ajzen and Klobas(2013)는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을 확장하여 [그림 2-4]와 같은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22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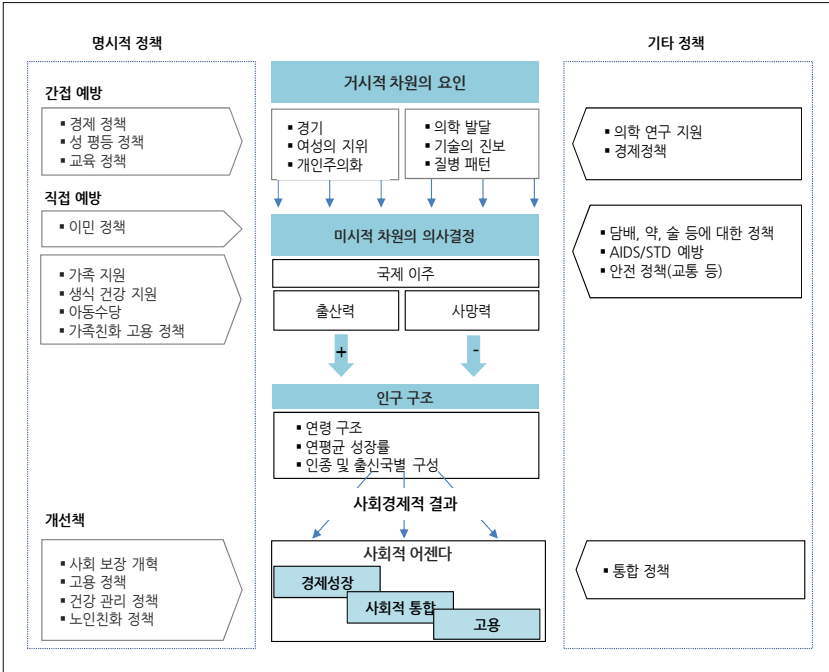
[그림 2-4] 출산 결정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 적용



자료: Ajzen and Klbias(2013, p.206). Fertility Intentions :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한편, 유럽(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Grant et al.(2004)은 정부 정책, 거시적 차원의 환경(경제 상황, 의학 진보, 기술 발전 등) 및 가구 차원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모형에 의하면 인구의 자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녀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에는 미시적 차원에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 양육 비용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림 2-5]와 같은 개념틀을 구성하였다.

[그림 2-5] 인구 변화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RAND Europe의 개념틀



자료: Grant et al.(2004, p.3).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Corporation.

Brinton(2015) 역시 콜만(Coleman)의 분석틀을 토대로 초저출산 현상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들의 출산 의도가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시적 조건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성 역할 근본주의(gender essentialism)라는 규범적 조건이 미시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Matysiak and Vignoli(2012)는 가족인구학 연구에서 거시와 미시를 “조화(reconciliation)”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거시와 미시로 양분되어 있었던 기존 경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구학적 결과(예컨대 초저

출산으로의 진입 혹은 이탈)의 기제를 밝히는 새로운 형태의 경험 연구들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거시 사회 환경과 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앞서 거시-미시 통합 접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한 국가의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거시 환경이 개인의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혹은 미시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분야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1. 교육과 출산 간의 연관성

가. 교육과 결혼

교육 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개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성준, 2015;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2005).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고 남성이 가구 생계 부양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과 결혼 가능성 사이에는 정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과 결혼 의향 및 결혼 가능성 간 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활동 참가도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은 의사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높

아졌고, 전통적으로 주어진 가정 내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과 결혼 생활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Caldwell, Reddy, and Caldwell, 1983; Jejeebhoy, 1995). 이에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은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Bracher and Santow, 1998; Diamond, Newby, and Varle, 1999; Basu, 2002;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2005; 류기철, 박영화, 2009; Isen and Steven, 2010; 윤자영, 2012; Requena and Salazar, 2014; 김성준, 2015).

실제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결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비혼 선택을 야기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Isen and Steven, 2010; 윤자영, 2012; Requena and Salazar, 2014; 김성준, 2015). 이는 고학력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할 유인이 감소할 것이라는 베커(Becker, 1981)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성별 분업이 강한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육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할 공산이 크다(Becker, 1985).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결혼 연령의 상승을 야기하지만, 비혼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Blossfeld and Jaenichen, 1992; Goldstein and Kenney, 2001; 민현주, 김현지, 2011). 이는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된 초기에는 높은 교육 수준이 결혼 연령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 및 노동시장 참여가 일반화될수록 이와 같은 경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교육과 출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관련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육비 부담을 들 수 있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2005)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데에는 영유아 보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Becker and Lewis(1974)가 제시한 자녀의 수와 질 간의 상충 관계 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자녀에 대한 비용의 지출을 늘릴 경우 자녀의 수를 줄여야 하고, 자녀를 많이 두게 되면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자녀의 수에 대한 탄력성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출산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Becker, Murphy, and Tamura(1994)와 Mincer(1984) 등은 교육 투자를 통해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성인기에 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인적 자본론의 관점에서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를 교육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교육비 부담이 출산력 감소로 이어지는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Bleakley and Lange, 2009; Murphy, 2010; Murtin, 2009; Becker, Cinnirella, and Woessmann, 2010).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 강한 교육열이 이러한 상충 관계와 관련하여 자녀의 질을 보다 강조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Anderson and Kohler, 2013). 즉, 교

육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음으로써 자녀에게 투입되는 자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김경근, 2016).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 간의 부(-)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 자녀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Anderson and Kohler, 2013).

경쟁 구도 아래에서는 고학력 부모의 교육 투자 양상이 저학력 부모의 교육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Leibenstein(1974)은 부모가 출산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인접한 집단을 준거로 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준거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출산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준경(2012)은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고소득층의 교육 투자 수준을 쫓는 현상을 ‘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집단 추종이 최근 저소득과 저학력 집단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유배우 출산이 전체 출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결과적으로 유배우 기간과 유배우율의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출산력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Basu, 1999; Isen, and Stevenson, 2010; Requena and Salazar, 2014). 고학력 여성의 경우 교육 기간, 직업 탐색 기간 등이 길기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져 그만큼 전체 출산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이

삼식 등, 2005; 민현주, 김은지, 2011). 고학력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2. 노동시장과 출산 간의 연관성

개인의 인생 경로에서 ‘출산’과 ‘경력 추구’ 모두 삶의 지고한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산과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소득 창출을 동반하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생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출산 또한 여전히 성인의 삶에 보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출산과 경력의 관계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에 대한 열망과 모성이라는 의무 사이의 갈등은 출산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킨다. 출산이 초기 경력 추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p.282). 자녀 양육은 장기간의 헌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출산 이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출산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의미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경력을 추구하는 경우 출산과 자녀 양육에 가용한 시간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러한 시간 부족에 대한 기대는 출산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동과 출산의 관계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부모의

경우 생애 우발적 사건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직업적 불안전성을 주부로서의 역할과 부모됨으로의 변화로 보상받는다. 특히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직업적 성취를 통한 사회적 인정을 얻을 기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보상받고자 할 수도 있다(Tolke and Diwald, 2003).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 불안정 고용은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면서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간 국내 많은 연구들에서 노동시장의 특성과 출산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여 왔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류기철, 박영화, 2009; 이삼식, 최효진, (편), 2014). 최근에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서 더 나아가 취업 여성의 직장 유형,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 소득 등 다양한 취업 특성에 따른 차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 특성에 따라 일-가정양립정책의 이용 가능성, 안정성 등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최성혁, 오창섭(2010)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력 단절 위험이 법적·제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식별 전략으로 사용하여 공공 부문 여성과 기타 직종 여성 간 출산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30대에 공공 부문에서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보다 0.6명 정도 추가적으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 여성의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도 출산 행태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비취업 여성에 비해 사무직종 상용 근로와 서비스 판매직 종 임시·일용 근로 등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가정양립제도의 이용 곤란 등으로 첫째아 출산 이행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최효진, (편), 2014). 취업 여성의 월평균 소득과 중

사상 지위도 통계적으로 출산(희망 자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가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름하게 하는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공선영, 2006).

3. 주택과 출산 간의 연관성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큰 장점은 안정성의 확보이다.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하여 임차 가구에 비해 자가 가구의 경우 출산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가격 부담이 크고 자가 소유욕이 강한 사회에서는 주택비와 자녀 양육비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가를 소유한 경우가 오히려 출산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 방향성은 해당 사회의 문화나 주택 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하지만, 주택 점유 형태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삼식, 최효진(2012)에 의하면 자가인 경우에 비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생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상대적으로 억제한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출산과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개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다른 지출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을 억제하거나 연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출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aurin, Hendershott, and Kim(1993)은 주택 임대료가 조사 집단 평균의 2배인 경우에 독립 가구 형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밝혔다. 뉴질랜드의 최근 인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가구의 자녀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and Clark, 2016). Simon and Tamura(2008)는 미국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urvey 자료(1940~2000)를 이용하여 주택 가격과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1940~1970년 기간에 강하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Yi and Zhang(2010)도 Beckerian 모형을 이용하여 1971~2005년간 홍콩의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출산율이 0.45%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지속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출산율이 65%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Yi and Zhang, 2010). 그러나 Hui, Hendershott, and Kim(2012)은 모형과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 출산율이 0.23%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정의철(2012)은 전세 가격이 1,000만 원 증가할 경우 가구형성 확률은 1.3% 감소함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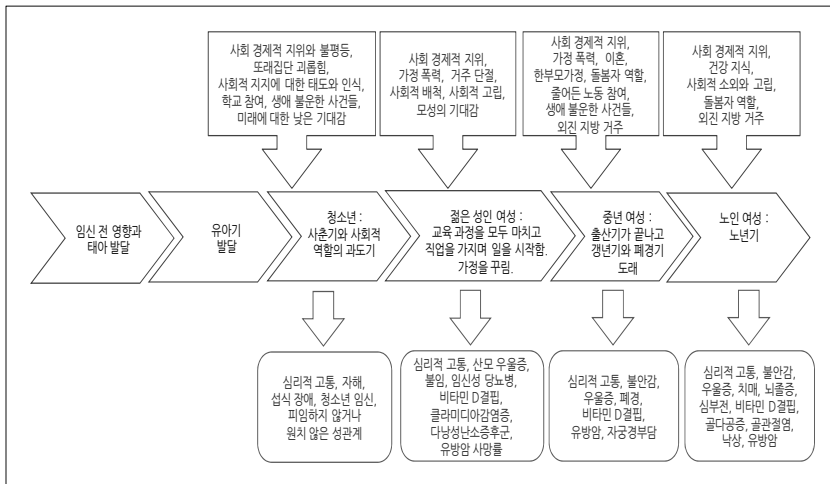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적절한 규모의 주택과 환경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출산을 억제하여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가구원 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Kulu and Vikat(2007)는 스웨덴의 도시 지역에서 주택 유형을 방 1개와 주방으로만 구성되도록 표준화하면서 1인당 주거 밀도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가족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발생하였음을 제시하였다. Ström(2010)도 방 개수가 1개나 2개인 가구의 경우, 방 개수가 많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4. 보건과 출산 간의 연관성

생애주기별로 여성이 직면하는 건강 이슈(health issues)는 단계별로 중복되는 지점도 있지만 상이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

도 다양하다(Steel et al., 2013). 가임기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건강 문제(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산후 우울증, 불임(난임)과 임신성 당뇨, 빈혈 및 성병 등)는 여성 개인의 특성인 학력, 고용 상태, 가족 형성 등과 연관이 있고,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 수준의 영향을 받기도 할 것이다.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건강(생식건강 포함)은 이전 시기인 청소년기 2차 성징 과정에서의 사회적 역할 인식 및 적응(대응) 능력,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림 2-6]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과 건강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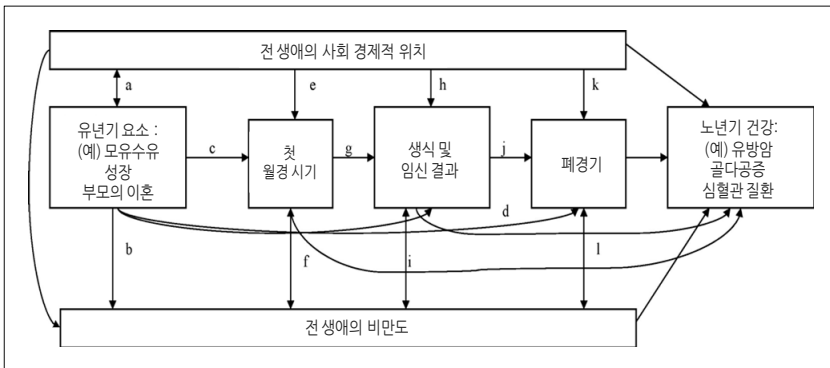


자료: Steel et al.(2013). Women's health in NSW - a life course approach: a rapid review.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CREWH21.

Misra, Cooper, and Kuh(2010)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는 전 생애를 걸쳐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생식건강 및 관련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로 여성의 폐경 시기는 이전 시기(영·유아기 및 임신·출산기)의 모유 정도, 발육 상태, 부모 이혼 등의 생물학적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시기의 개인이 지닌 (가족의)사회·경제적 위치나 신체 체질량 등 건강 상태에 의해 조정되기도 한다. 즉, 유년 시기의 모유 정도, 발육 상태, 부모 이혼 등은 임신·출산기의 여성의 생식건강 및 부인과적 질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나, 이는 다시 폐경 시기 및 이후 노년기 삶의 질에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현시점의 여성이 경험하는 생식건강 상태 및 관련 질환은 이전 생애주기의 생물학적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이 누적된 효과(cumulative effect)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7]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 모형



자료: Misra, Cooper, and Kuh(2010). A life course approach to reproductive health: theory and methods. *Maturitas*, 65; pp.92-97

5. 성 평등과 출산 간의 연관성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는 전통적인 확산 이론을 들며와 성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역동적 관계를 모형화한 다중 평형 모형(multiple equilibria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전통적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양육자 가족의 평형이 여성의 성 역할 변화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평형으로의 이행을 겪게 되는데, 이

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행 초기에는 성 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이행 중기 이후에는 성 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는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고임금 및 전문직 일자리에의 기회가 적고, 저임금 및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에의 기회가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 중심적 생활 양식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대부분이 고학력)의 취업 기회는 적은 반면, 가정 중심적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여성들(대부분이 저학력)의 취업 기회는 많은 이른바 선호-기회의 불일치 상황을 낳게 된다. 이 경우 고학력 여성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거나, 입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 의하면, 전통적 성 역할 분업의 가족 규범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변화(예컨대 여성의 고등 교육 이수의 증가)로 전통적 규범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충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여 타인의 행동 혹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 성 평등주의적인 새로운 규범을 수용한 여성들은 파트너를 만나거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남성을 포함한 인구의 절대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면서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데, 결국 성 평등적 사회로의 이행의 속도는 여성들이 성 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 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

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Arpino, Esping-Andersen, and Pessin(2015, pp.3-4)은 성 평등 의식에 대한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회피(exit)하는 전략이나, 자신의 선호를 단념하거나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여성들 사이에서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Arpino, Esping-Andersen, and Pessin, 2015). 이때 남녀 간 성 평등 인식의 격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은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일 것으로 예측된다.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 pp.18-19)는 성 평등주의 확산이 진행되면 전통적인 집단의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만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확산 이론에 따르면 성 평등주의적인 집단만이 그러한 태도에 수용적인 파트너 집단이 증가함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6.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의 연관성

거시적 수준에서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및 신념의 변화를 가져온다. 가족 관련 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추측된다. 첫째, 코호트의 계승을 통한 전달이다. 이러한 방식은 코호트 대체로도 불리는데 어린 시절의 학습을 강조한다. 각 개인들은 특정한 연도에 출생하여 인격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 역사적 시기에 살게 되고, 이것은 세대별로 다른 규범적 방향성을 만들게 된다(Inglehart,

1981; Alwin and Scott, 1996; Kraaykamp, 2002). 가족 역할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평등주의적 가족 역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의미가 있는데, 성 역할이 평등해짐으로써 여성들이 더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한 가족 역할로 나아가는 코호트 상호간의 발전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가족 관련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동력은 사회구조적 요인이다(Brooks and Bolzendahl, 2004).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발전이 모든 코호트의 태도 변화를 주도한다(Alwin and Scott, 1996; Danigelis, Hardy, and Cutler, 2007). 모든 성인들은 사회구조적인 조건, 즉, 사회 인구적, 경제적, 역사적 발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태도 변화에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Brooks and Bolzendahl(2004)은 구조적 조건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학습을 코호트 내 태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평등한 가족 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의 변화라는 것이다.

7. 보육과 출산 간의 연관성

보육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보육정책들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해 온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보육정책이 추가 자녀 또는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Lappegård(2010)는 노르웨이의 한 자녀와 두 자녀를 가진 가구들을 대상으로 보육·유아 교육비 지원이 추가 자녀 출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후 셋째 자녀 출산이 증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핀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Vikat(2004)의 연구에서는 가족보육수당이

셋째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rr and Guest(2010) 등 일부 외국 대상 연구들에서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의 뚜렷한 효과를 찾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미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하게 추정되었다. 이는 미시 자료를 이용하면서 누락변수와 역인과성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내생성의 문제를 보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외 연구와는 달리 보육료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 대부분은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해 왔다. 서민희, 이해민(2014)은 2009년과 2012년 보육 실태 조사를 이용하여 보육료와 유아 교육비 지원 여부가 추가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보육 실태 조사를 이용한 홍석철 등(2012)과 김정호, 홍석철(2013)의 연구들도 보육료 지원 정책이 다자녀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연구들 사이에서 뚜렷한 결과가 추정되지 못한 것은 국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미시 자료를 이용하면서 내생성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거시 자료를 이용한 몇몇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홍석철 등(2012), 김정호, 홍석철(2013) 등은 연도별 및 시도별 분석을 통해 2001~2010년간 보육료 지원의 확대가 출산율 및 양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시도별 집계 자료를 이용하고 내생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GMM 모형을 사용한 우석진, 송헌재, 김태우(2014)의 연구에서는 보육 예산의 증가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그 크기는 작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제3절 기본 분석들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 간에 단선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는 1975년과 2005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Myrskylä, Kohler, and Billari, 2009). 1975년에 합계출산율과 인간개발지수 간에 분명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했던 반면, 2005년에는 둘 사이에 U 자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비슷한 경향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둘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관찰되고 있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Billari and Kohler, 2004).

이러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은 출산율이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산의 비용과 효용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경제학적 이론이나 이념적·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 모두 이러한 패턴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 변화가 출산의 직접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줄이거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억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 변화와 출산율 간 관계의 역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적 또는 개념적 설명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는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수치적으로 나타난 합계출산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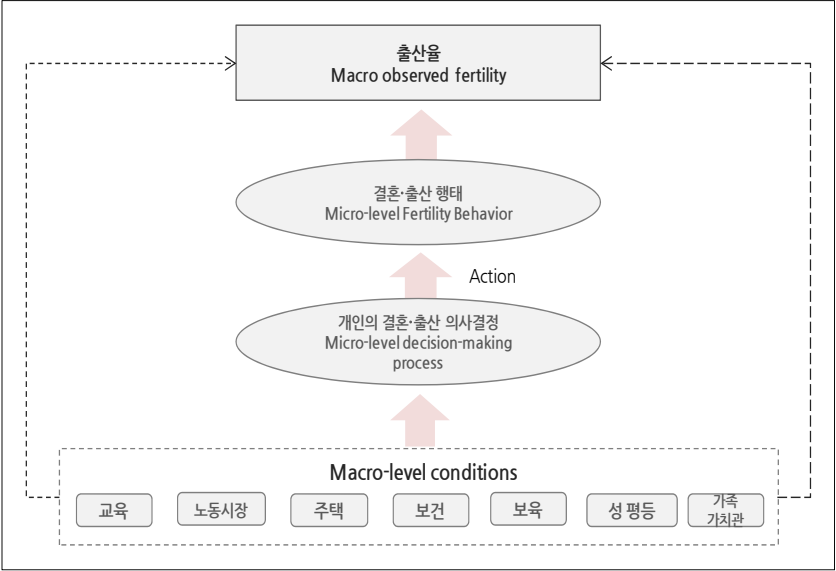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대책들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곤란 등 미시적인 범주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듯이, 지금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의 변화, 더 나아가 그로 인한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미시적인 수준의 출산 의사 결정 또는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 환경을 도출하는 거시-미시 간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에 의해 수행된 REPRO 프로젝트의 모형을 차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출산율은 거시적 사회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나(거시적 접근), 실제로는 거시적 사회 환경이 개인의 출산에 관한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거시-미시 연계), 이러한 개개인의 출산의 합이 사회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거시적 사회 환경은 사회구조, 문화, 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문화(양성평등, 가족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 및 출산 행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향후 출산의향 또는 이미 이루어진 출산의 결과인 출생아 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거시와 미시를 연결시키는 분석틀은 거시와 미시로 양분되어 있었던 기존의 경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에서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0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2-8] 본 연구의 기본 연구틀(basic research framework)



제 3 장

출산율 변동 추이와 특징

제1절 결혼 수준 변화

제2절 출산 수준 변화

3

출산율 변동 추이와 특징 <<

한 국가의 출산율은 개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의 합이며, 이러한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는 거시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의 출산율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과 출산 행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사회 환경의 변화와 미시적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 및 출산 행위 간 연계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거시적인 수준의 출산율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의 출산율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다. 합계출산율은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은 평균 자녀 수로 측정된다.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산출되며, 연령별 출산율은 연령 a세 여성 수를 분모로, 같은 해에 이들로부터 태어난 신생아(live birth) 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된다.

$$TFR = \sum_{a=15}^{49} ASFR_a \dots\dots\dots (3-1)$$

$$ASFR_a = \frac{B_a}{P_a} = \frac{B_a}{P_a^m} \times \frac{P_a^m}{P} = ASFR_a^m \times PR_a^m \dots\dots\dots (3-2)$$

여기에서 ASFR_a은 연령별 출산율(연령 a세), B_a는 a세의 모로부터 태어난 출생아 수, P_a는 연령 a세 전체 여성 수, P_a^m은 연령 a세 기혼 여성 수, ASFR_a^m은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PR_a^m은 연령 a세 전체 여성 수 중 기혼 여성 비율(유배우율)이다.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합계출산율은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로 구성된다. 결국 합계출산율은 얼마나 여성들이 결혼하느냐(유배우율)와 결혼한 여성들이 얼마나 출산(유배우 출산율)을 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혼인 외(unwed)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체 출생아 수의 2%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출산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결혼 역시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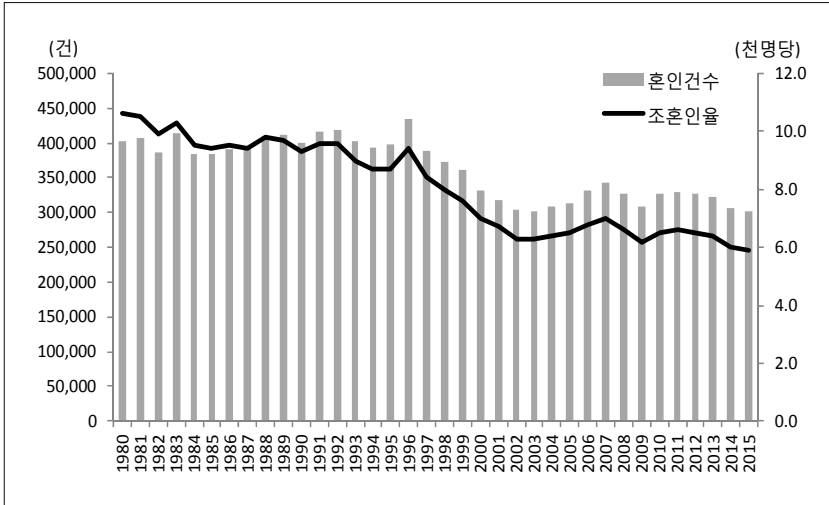
제1절 결혼 수준 변화

1. 결혼 건수와 조혼인율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건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후 결혼 건수는 코호트 효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과거 출산율 변동에 따라 결혼 연령층에 진입한 인구 규모가 시기마다 다른데다가, 결혼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2007년 쌍춘년과 세계 금융 위기(2008~2009) 직후인 2010년대 초에 결혼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을 뿐, 최근까지 결혼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혼인율은 전체 혼인 건수를 총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까지 총인구가 증가하고 결혼 건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조혼인율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총인구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조혼인율은 결혼 건수 추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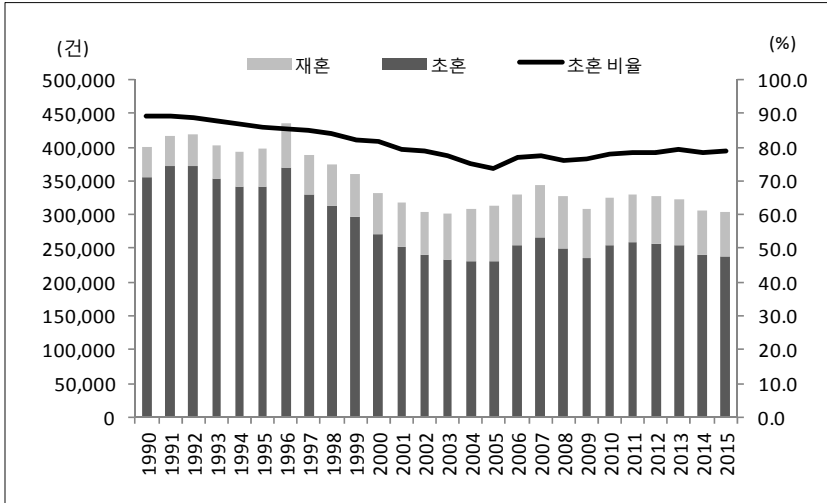
[그림 3-1] 결혼 건수와 조혼인율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결혼. <http://kosis.kr>에서 2016. 5. 16. 인출.

결혼 건수에는 초혼과 재혼(여기에서는 재혼 이상을 의미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초혼 건수가 출산 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혼 건수는 190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전체 혼인 건수 중 초혼 건수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다가 2005년을 저점으로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재혼 증가로 인하여 70%대 후반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결혼 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초혼 건수의 변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3-2] 초혼 건수와 초혼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결혼. <http://kosis.kr>에서 2016. 5. 1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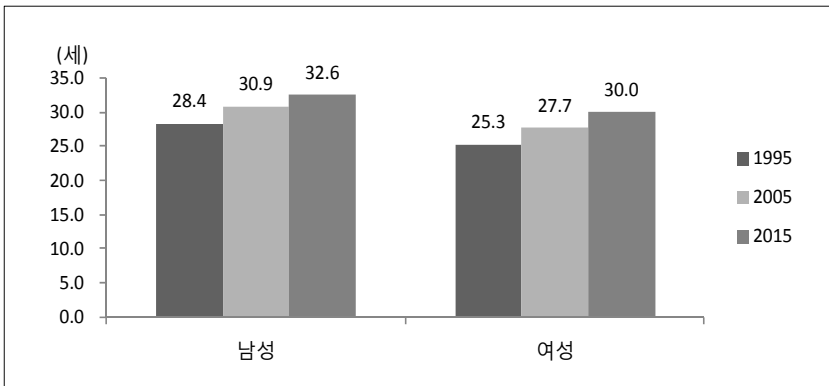
2. 연령별 결혼율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28.4세에서 2015년 32.6세로 지난 15년 동안 4.2세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 1995년 25.3세에서 2015년 30.0세로 같은 기간에 4.7세가 증가하여 증가 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5~2005년간 2.5세, 2005~2015년간 1.7세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1995~2005년간 2.4세, 2005~2015년간 2.3세로 큰 차이가 없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의 결혼 연기 경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추어지면서 연령별 혼인율도 과거 20대에서 높았던 것이 점차 30대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20대 혼인율의 감소 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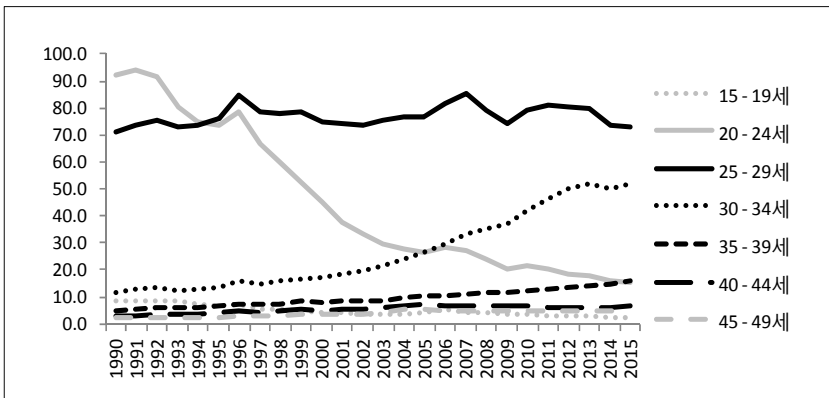
30대 혼인율의 증가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과거 20대에서 결혼이 집중되어 혼인율이 아주 높았다면, 최근에는 결혼 연기 현상으로 인하여 보다 넓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 포기(비혼화) 현상도 모든 연령층에서 혼인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3-3]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결혼, <http://kosis.kr>에서 2016. 5. 16. 인출.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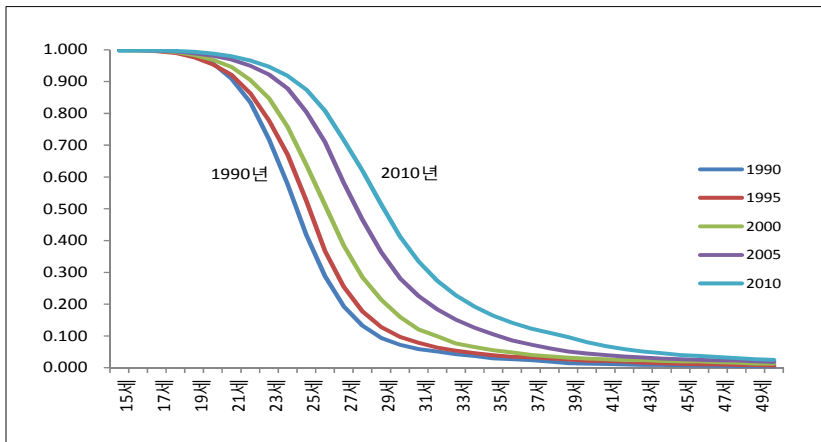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결혼, <http://kosis.kr>에서 2016. 5. 16. 인출.

3. 미혼율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여성 인구 중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비율인 미혼율을 계산하였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은 고연령층일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생애에 걸쳐 대부분 결혼을 하는 보편혼(universe marriage)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시사한다.

[그림 3-5]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 변화,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9. 25. 인출.

그러나 전체 여성 중 90% 이상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연령은 1990년 29세, 1995년 30세, 2000년 32세, 2005년 36세, 2010년 39세 등 빠르게 상승했다. 인구학적으로 50세에 도달한 시점에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을 ‘독신율’로 간주한다. 여성의 독신율은 1990년 0.46%, 1995년 0.73% 등 1% 미만에서 2000년에는 1.31%, 2005년 1.86%, 2010년 2.52%로 빠르게 높아졌다. 과거의 독신화 추세는 앞으로

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그 변화율을 적용해 보면, 여성의 독신율은 2015년 3.8%, 2020년 7.1%, 2025년 10.5%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3-1〉 미혼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연령과 50세 미혼율

	실적치(인구주택총조사)					50세 미혼율(본 연구 예상치)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미혼율 10% 미만이 시작된 시기(세)	29	30	32	36	39	-	-	-
50세 미혼율(%)	0.46	0.73	1.31	1.86	2.52	3.76	7.08	10.49

주: 50세 미혼율은 본 연구에서 추정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9. 25. 인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행태는 결혼 건수가 줄어들어 혼인율이 낮아지고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20대 혼인율이 낮아지고 30대 혼인율이 높아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연기 혹은 포기 현상이 증가하면서 30대 혼인율 자체는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만혼화와 비혼화 경향은 혼외출산 비율이 아주 낮은 한국 사회에서 출산 수준을 낮추는 보다 직접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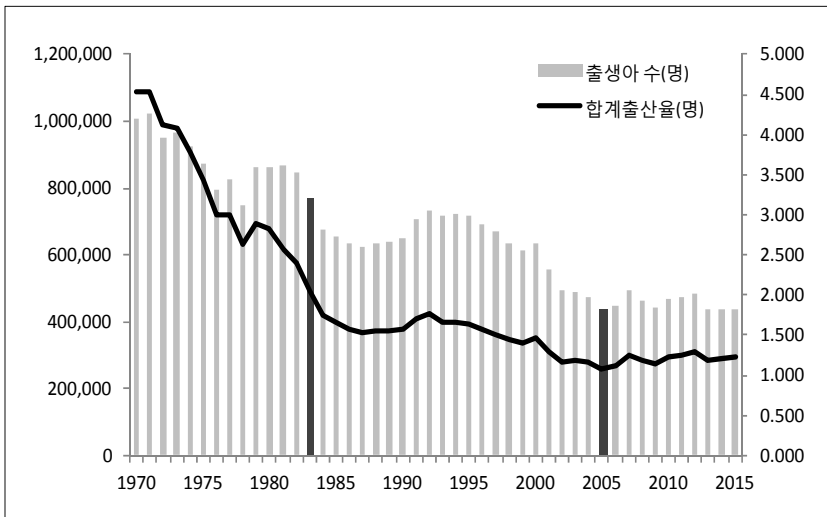
제2절 출산 수준 변화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06명으로 감소하여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에서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1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현상(합계출

산율이 1.3명 미만에서 유지되는 현상)이 2006년부터 시작된 정책적 노력(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낮아진 이후 다소 높아 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3명 이상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6]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변화, 197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출산. <http://kosis.kr>에서 2016. 8. 24. 인출.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 명(정점)에서 2005년 43만 5천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다소 늘어난 43만 8천 명으로 나타났다. 1990~1995년 기간에 출생아 수는 6만 5천 명이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0.064명 증가하였다. 1995~2000년 기간에 출생아 수는 8만 1천 명, 합계출산율은 0.167명 각각 감소하였다. 2000~2005년 기간에 출생아 수는 19만 9천 명, 합계출산율은 0.391명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변화

는 IMF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7년 전후 5년간(1995~2000)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3만 5천 명)와 합계출산율(0.150명) 모두 증가하였다. 2010년도 출산 수준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출산 수준이 가장 낮은 영향으로 이 기간에 출산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0~2015년 기간에는 이전과 달리 출생아 수는 3만 2천 명이 감소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013명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간 변동 방향의 불일치 현상은 가임기 여성 인구(특히 25~34세의 주된 출산 연령층)의 감소 속도가 출생아 수의 감소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요컨대 인구의 규모나 구조가 실제 출생아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보다 출생아 수 규모의 증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3-2〉 5년 기간별 합계출산율(TFR)과 출생아 수 변화

(단위: 천 명, 명)

	연도별 출산 수준						기간별 변동 폭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출생아 수	650	715	635	435	470	438	65	-81	-199	35	-32
첫째	348	346	298	223	235	229	-3	-47	-75	12	-7
둘째	253	308	268	167	182	166	55	-40	-101	15	-16
셋째 이상	48	61	66	41	50	42	13	5	-25	8	-7
TFR	1.570	1.634	1.467	1.076	1.226	1.239	0.064	-0.167	-0.391	0.150	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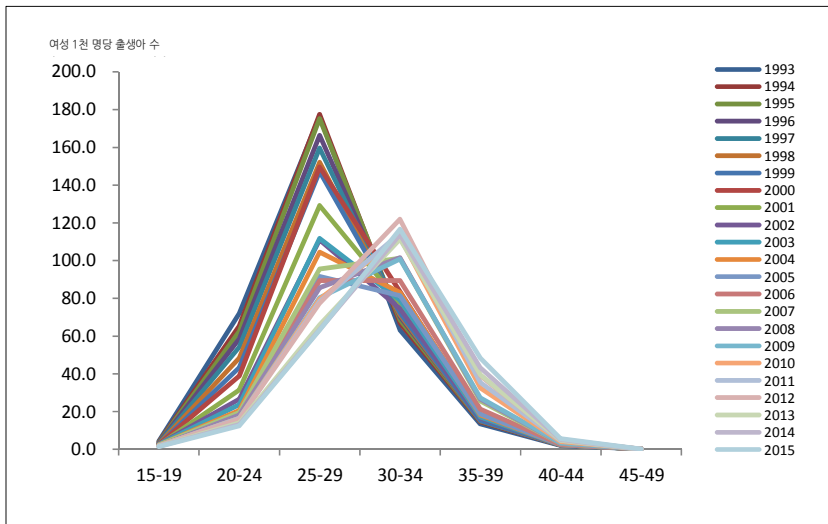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출산. <http://kosis.kr>에서 2016. 8. 24. 인출.

2. 연령별 출산율

만혼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저연령층에서는 감소한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세 출산율과 25~29세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30~34세 출산율과 35~39세 출산율은 빠르게 높아졌다. 그러나 저연령층에서의 출산율 감소 폭만큼 고연령층에서의 출산율 상승 폭이 크지(catch-up) 않으며, 이는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림 3-7] 연령별 출산율 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출산. <http://kosis.kr>에서 2016. 8. 24. 인출.

이와 같이 연령별 출산율이 좌에서 우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출산 당시 모의 평균 연령은 2005년 30.2세에서 2015년 32.2세로 2.0세가 증가하였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출산 시 모의 평균은 2005년 29.1세에서 2015년 31.2세로 2.1세가 증가하였다. 둘째아 출산 당시 모의 평균 연령도 동 기간 31.0세에서 33.0세로 2.0세가 증가하였으며, 셋째아 출산 당시 모의 평균 연령은 33.3세에서 34.6세로 1.3세가 증가하였다.

〈표 3-3〉 출산 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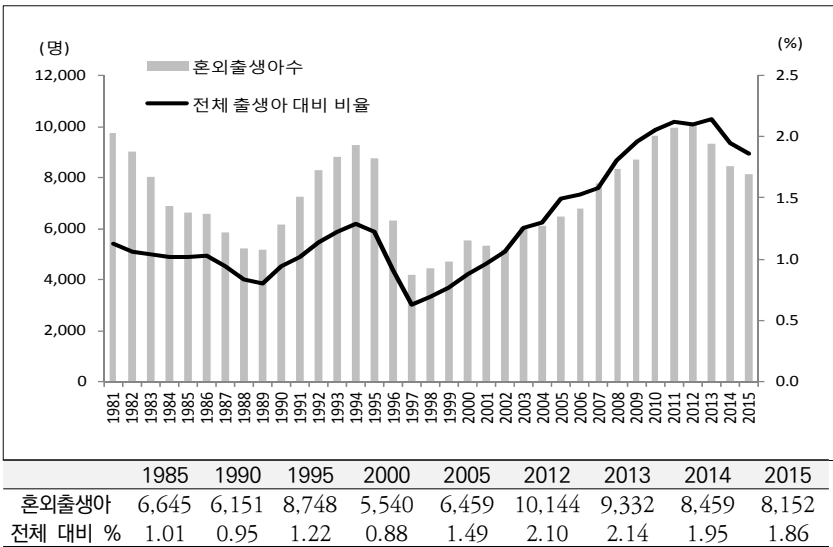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0.2	30.8	31.3	31.4	31.6	31.8	32.0	32.2
첫째아	29.1	29.6	30.1	30.3	30.5	30.7	31.0	31.2
둘째아	31.0	31.7	32.0	32.2	32.4	32.6	32.8	33.0
셋째아	33.3	33.8	34.0	34.1	34.2	34.4	34.5	34.6
넷째아 이상	35.3	35.7	35.8	35.9	35.9	35.9	35.9	36.0

주: 모의 연령 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2016a). 2015년 출생 통계(확정). 2016. 8. 24. 보도자료.

3. 혼외출산율

출생아는 부모의 법적 관계 여부에 따라 ‘혼내’와 ‘혼외’로 구분된다. 전체 출생아 수 중 혼외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혼외출산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3-8〕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출산. <http://kosis.kr>에서 2016. 8. 2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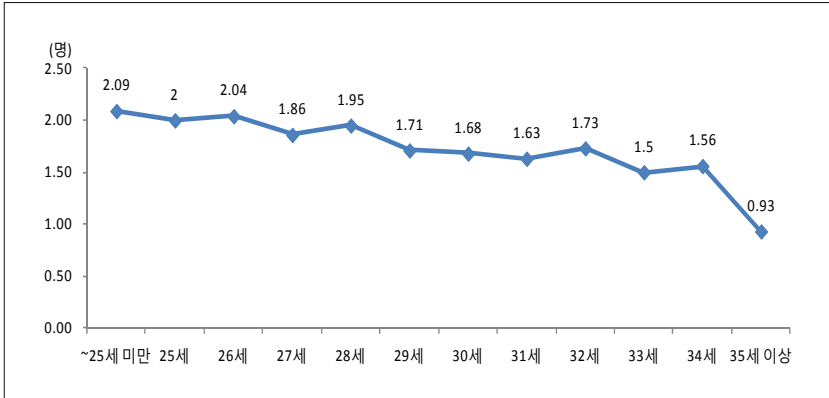
혼외출산율은 1981년 1.12%에서 1989년 0.81%까지 낮아지다가, 1994년에 다시 1.29%로 높아졌다. 이후 1997년에 0.63%까지 낮아진 후 다시 2013년 2.14%까지 높아졌다. 2015년에 혼외출산율은 1.8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혼외출산율은 1~2%의 낮은 수준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에 다소나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4. 여성의 일반 특성별 출산 수준 차이

거시적 사회 환경과 미시적 차원의 개인의 출산 의사 결정 및 행위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에 앞서, 거시 사회 환경에 준하는 여성의 일반 특성별 출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출산 수준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로서 기혼 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 수로 측정하였다. 여성 집단별로 연령 구조가 상이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 표준화(age standardization)를 실시하였다,

우선, 가치관 등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초혼 연령에 따른 출산 수준을 살펴보면, 결혼이 늦어질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기가 늦추어질수록 출산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줄어들고, 유·사산이나 불임의 발생률이 높아져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후 보장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늦게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도 늦게 결혼할수록 자녀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이삼식, 윤여원, 이지혜, 2012).

[그림 3-9] 1966~1970년 코호트 기혼 여성의 초혼 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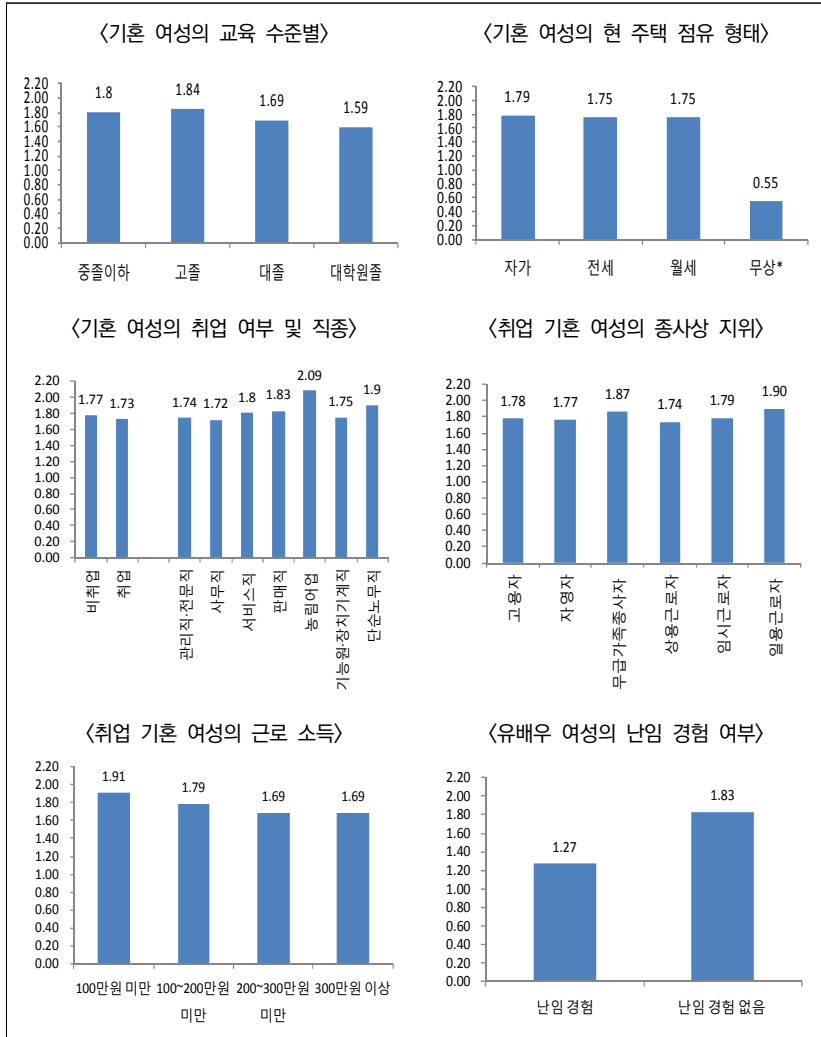


자료: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2015).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임기 기혼 여성(15~49세)의 교육 수준별 평균 출생아 수는 고학력일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의 점유 형태가 불안정성이 클수록 평균 출생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와 난임 경험을 한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27명으로 그렇지 않은 기혼 여성(1.83명)에 비해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 여성에 비해 취업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직이나 사무직인 경우 더 낮게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근로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거시-미시 접근이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단순히 참고를 위해 제시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그림 3-10] 기혼 여성(15~49세)의 일반 특성별 평균 출생아 수(연령 표준화)



주: 현 주택 점유 형태가 '무상'인 경우 사례 수가 30 미만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 4 장

교육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1. 교육 관련 사회·문화적 구조

가. 학력주의

학력주의는 학력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준거로서 기능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Collins, 1979). 학력주의가 강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학력이 능력의 증명으로 간주됨에 따라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직업 지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Meyer, 1977). 선별 가설에서는 학력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을 학교 교육과 학력이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여기는 인식과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라는 인증 기관에서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학력에 따른 임금 및 고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Dore(1976)가 주장한 졸업장 병(diploma disease)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학교가 기존의 사회 계층을 재생산하는 것 외에는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은데도, 학교 교육에서 자격을 인증해 주는 졸업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나친 열망은 사회적으로 과잉 교육으로 인한 불만과 불안정을 키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육이 실제로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지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

는 능력을 확인하고 가정 배경에 따른 계층 재생산에 기여할 뿐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용, 임금, 직업 지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는 특히 대학 진학과 졸업 여부에 따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자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두환, 2015). 이에 따라 과잉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양산에 따라 노동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Baker, 2014).

교육 팽창에 따라 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학교화된 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내 직업 구조가 변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중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장 전반에서 전문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회계, 감사, 기금 조성, 법적 계약, 사회적 책임, 전략적 계획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철저하게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형성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Drori, Meyer, and Hwang, 2006). 과잉 교육과 탈숙련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노동시장 자체의 변화와 교육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및 규범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제한적 기회 구조와 상승 열망의 충돌에 의해

‘불안의 미만(彌滿)’¹⁾이 발휘되고 있다. 기회 구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강렬한 상승 열망이 존재할 경우, 실패나 낙오에 대한 우려는 필연적으로 불안의 미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개발 연대 이후 그간 한국인이 보여 준 삶의 양상 및 심리 상태에 매우 잘 부합된다. 외환 위기 이후에 상승 열망 자체는 적잖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승 열망이 약화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기회 구조가 열악해지면서 불안의 미만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김경근, 2016).

제한적 기회 구조와 이에 기인한 불안의 미만은 교육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교육은 가장 신뢰할 만한 생존 및 상승 이동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안의 미만은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강고한 가족주의의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자녀의 미래나 안녕은 한순간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불안의 미만이 집단 추종(혹은 군집 행동)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교육열로 발현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집단 추종은 주변의 친구, 친지, 동료 학부모의 자녀 교육 관행이나 방식에 자신의 교육 실천을 조율시키면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적게 둔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안녕이나 안전을 두고 일상적으로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부모는 다른 가정의 부모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안의 미만을 경험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김경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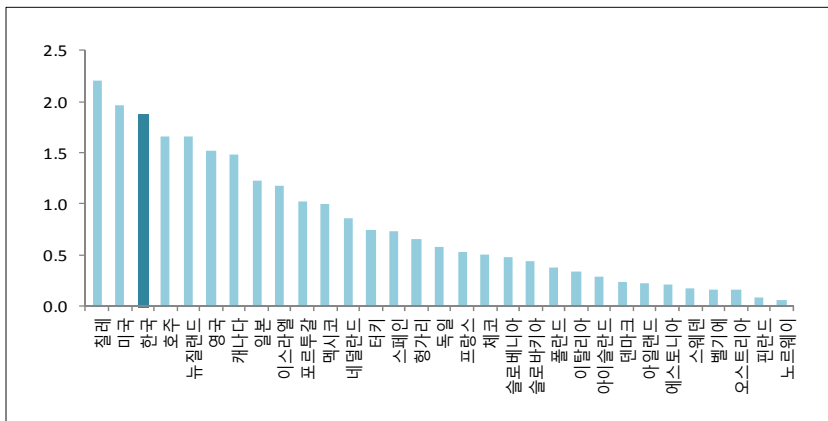
1) ‘불안의 미만’은 한국인의 두드러진 성격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윤희립, 1964),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2.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작동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영역이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 이들 거시적 환경 요인들이 개인(미시)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육에 관한 거시적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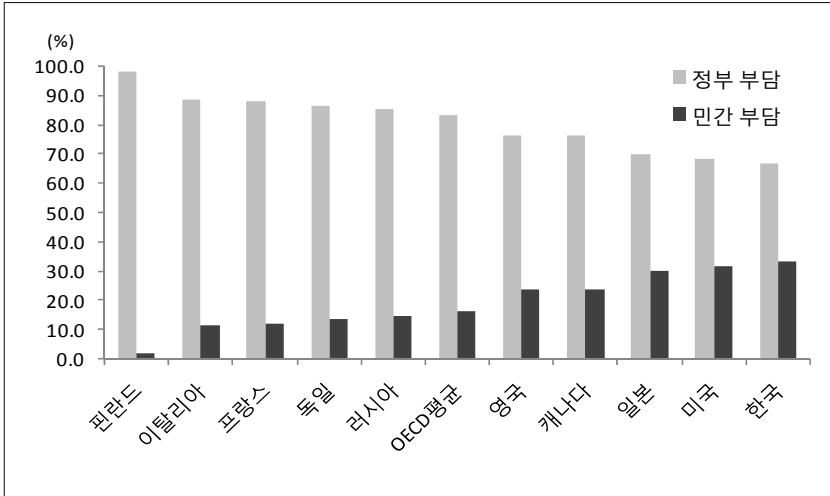
교육에 관한 거시적 요인들은 앞서 보았듯이 학력주의, 교육열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육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 이는 고등 교육으로의 높은 진학을 등에 따라 공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도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지난 30년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 초등~고등 교육까지 민간에서 지출하는 GDP 대비 교육비 비율, 2013



주: 민간 재원은 정부 부담 교육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 재원을 의미.
자료: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그림 4-2]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부담 및 민간 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 2012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Glance 2015.

가. 분석틀

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 Baltagi(2008)의 동적 패널 모형을 사용하였다.²⁾ 출산은 자녀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출산 모형³⁾을 설정하였다.

- 2) 출산율의 경우 출산 행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여성의 출산 결정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문화 및 환경 등의 고정 효과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의 자기 상관과 고정 효과를 동시에 추정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동적 패널 모형이 본 연구에 있어 적절한 추정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 3) 동 모형은 Heckman(1976), Moffitt(1984), Walker(1995), 우석진(2008, 2010), 최윤경, 박진아, 우석진, 배지아(2015)에서 설정하고 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결정 모형의 단순 축약형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f_{i,t} = \Phi(p_{i,t}, Ecost_{i,t}, Y_{i,t}, Z_{i,t}, \xi_i; f_{i,t-1}) \dots\dots\dots (4-1)$$

여기에서 $f_{i,t}$ 는 자녀 수이다. $p_{i,t}$ 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중간재들의 가격 벡터, $Ecost_{i,t}$ 는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다. 교육 비용에는 취학 전 육아 비용, 초·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소요되는 공교육 및 사교육 비용이 해당된다. $Y_{i,t}$ 는 가구 소득이고, $Z_{i,t}$ 는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다. ξ_i 는 자료상으로 관측되지는 않으나 출산 결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 불변 고정 효과(time invaring fixed effect)로 지역의 출산력, 종교, 문화 등을 대표한다. $f_{i,t-1}$ 는 1기 전의 출산 결정이다.

식 (4-1)에 따르면, 시점 t 에 관측된 지역 i 의 출산율에는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품목의 가격인 물가 지수와 그중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의 소득과 특성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출산에 영향은 있으나, 시점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점의 출산 결정은 이전 시점의 출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실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준 모형으로서 OLS(Ordinary Least Square) 모형을 식 (4-2)와 같이 추정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p_{i,t} + x_{r,t}' \beta + u_i \dots\dots\dots (4-2)$$

출산의 자기 상관관계와 고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동적 패널 모형을 식 (4-3)과 같이 설정하였다.

$$y_{r,t} = \sum_{j=1}^{\tau} \rho_j y_{r,t-j} + \alpha p_{i,t} + \gamma z_{r,t} + x_{r,t}' \beta + \xi_r + \nu_t + \epsilon_{r,t} \dots (4-3)$$

$$r = 1, \dots, N, t = 1, \dots, T_r$$

위와 같이 동적 패널 모형은 시차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정 효과 모형 추정 방법을 통해 추정된 추정치가 편향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y_{i,t} = \beta_1 + \rho y_{i,t-1} + X_{i,t}\beta_2 + u_i + \epsilon_{i,t} \dots\dots\dots (4-4)$$

고정 효과 모형 추정을 위해 식 (4-4)를 차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Delta y_{i,t} = \rho \Delta y_{i,t-1} + \Delta X_{i,t}\beta_2 + \Delta \epsilon_{i,t} \dots\dots\dots (4-5)$$

식 (4-5)의 경우 $\Delta y_{i,t-1}$ 과 $\Delta \epsilon_{i,t}$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y_{i,t-1}$ 과 $\epsilon_{i,t-1}$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rellano and Bond(1991)는 Holtz-Eakin, Newey, and Rosen(1988)의 추정 방법을 일반화하였다.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추정 방법은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이용하여 식 (4-5)를 추정한 것이다. Arellano and Bond(1991)의 경우 외생변수(exogenous regressors) 외에 기결정변수(predetermined regressors)도 적률 조건(moment conditions)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결측변수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 결정이라는 것이 식 (4-1)처럼 과거 결정에 따라 동적 함의를 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출산의 시차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 (4-3)과 같은 동적 패널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1985~2014년까지의 광역 자치 단체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교육비 역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지역 내 총생산,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혼인율 등도 고려하였다. 기초 통계량은 아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을 대표하는 변수로서는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을 사용하였다.

<표 4-1> 기초 통계량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산율	348	1.386	0.220	0.879	1.867
교육비	441	0.692	0.273	0.182	1.103
초등 교육비	441	0.549	0.276	0.083	1.056
중등 교육비	441	0.704	0.228	0.204	1.000
고등 교육비	441	0.649	0.284	0.133	1.026
기타 교육비	441	0.734	0.268	0.188	1.220
소비자물가지수	446	76.91	21.92	33.25	110.93
지역 내 총생산	461	14,674.31	10,776.58	1,543.00	63,402.00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256	50.24	4.10	40.80	63.60
혼인율(여성)	409	17.18	4.63	10.30	31.2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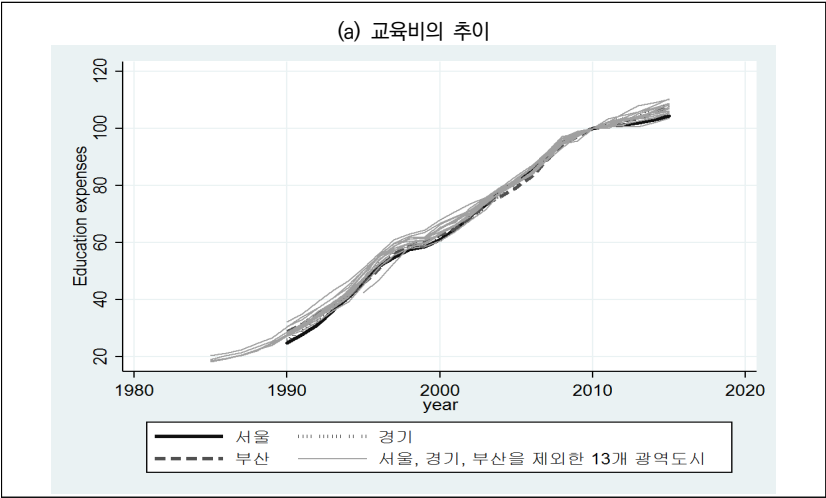
교육비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교육비 외에, 하부 지수로 초등, 중등, 고등, 기타 교육비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는 유치원비를 포함한 납입금이 포함되었다. 중등 교육비에는 중·고등학교 납입금이 포함되었다. 사교육비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학원 및 보습 교육, 성인 교육 및 기타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학원 및 보습 교육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원비, 음악 학원비, 미술 학원비, 운동 학원비, 전산 학원비, 가정 학습지, 이러닝(e-learning) 이용료, 학교 보충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세부 품목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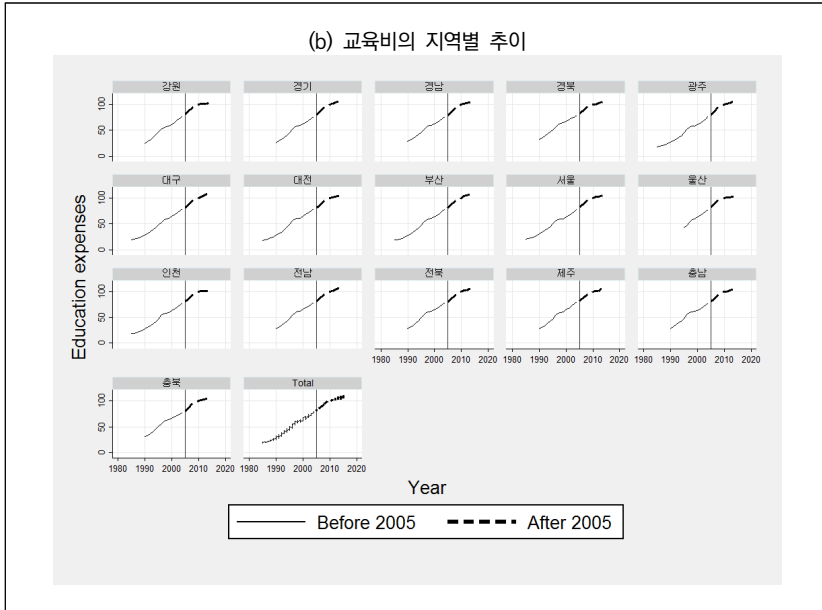
〈표 4-2〉 품목별 교육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분류

품목	세부 품목	
유치원 및 초등 교육	납입금(유치원)	
중등 교육	납입금(고등학교)	
고등 교육	납입금(전문대학,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공립대학원, 사립대학원)	
기타 교육	학원 및 보습 교육	학원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음악 학원비, 미술 학원비, 운동 학원비, 전산 학원비, 가정 학습지, 이러닝 이용료, 학교 보충 교육비
	성인 학원 및 기타 교육	취업 학원비, 외국어 학원비, 운동 강습료

교육비의 지역별 변이는 [그림 4-3]과 같다. 20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0년 초기에는 20~30 수준이었다. 2014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110 정도 지수를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림 4-3] 지역별 교육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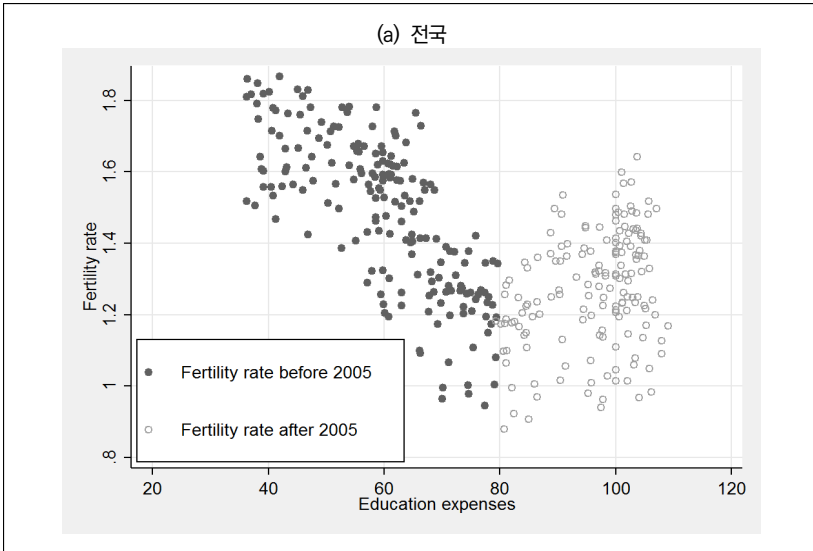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0=100). <http://kosis.kr>

나. 실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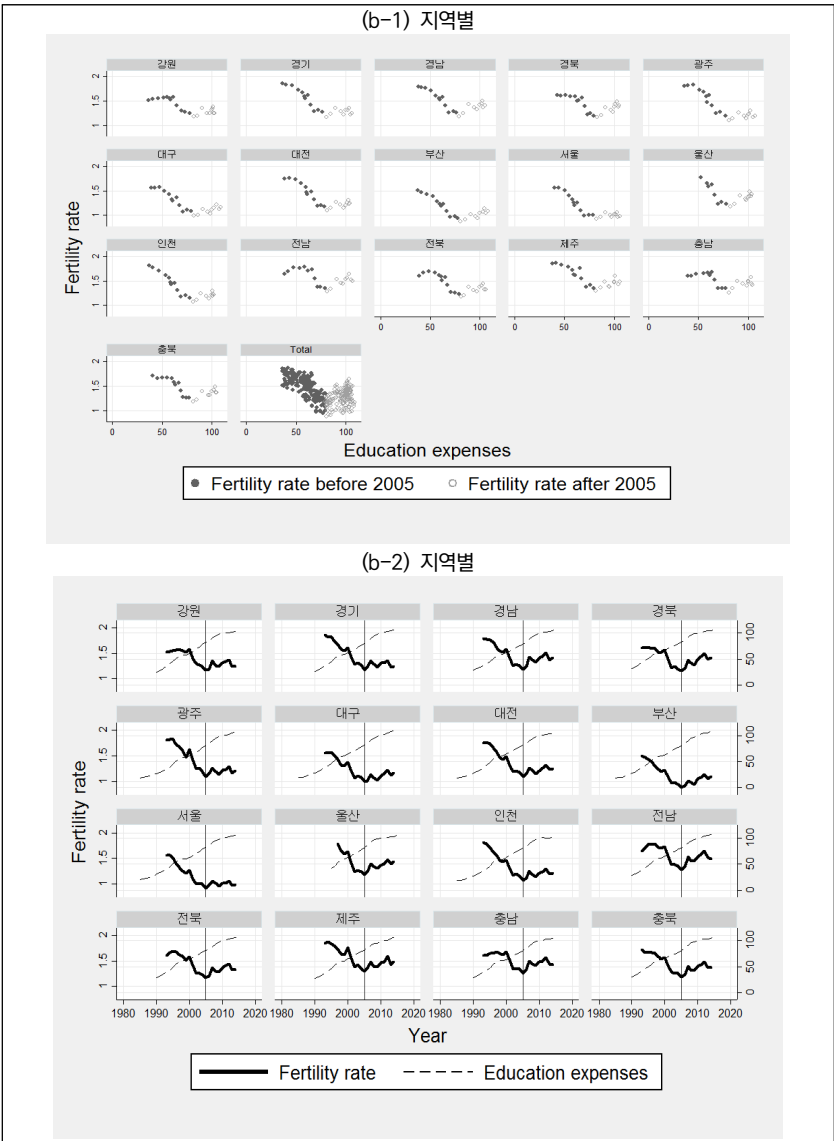
교육비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산포도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그림 4-4).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이전은 실 원으로, 2005년 이후는 가운데가 빈 원으로 표현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이 음(-)의 관계로서 교육 비용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2005년 이후 양(+)의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2005년을 전후하여 두 변수와의 관계가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4]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그림 4-5]는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나,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교육비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에 반해, 2005년 이후에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양(+)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동일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는 2005년 이후에는 교육비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는 없다.

[그림 4-5] 지역별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식 (4-3)을 추정하였다. 식 (4-3)의 추정에 앞서 기준 모형으로 식 (4-2)인 합동 회귀 모형(pooled OLS)을 추정하였다. <모형 1-1>~<모형 1-5>는 합동 회귀 모형을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 1-1>은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종속변수로는 로그 변환한 합계출산율을, 설명변수로는 로그 변환한 교육비, 소비자물가지수만을 포함하였다. <모형 1-2>는 <모형 1-1>에 지역 내 총생산을 수준변수로 포함시켰다. <모형 1-3>에서는 지역 내 총생산을 로그 변환하여 포함시켰다. <모형 1-4>에서는 <모형 1-3>에 교육비와 2005년 이후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포함시켰다. <모형 1-5>는 <모형 1-4>에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혼인율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 <모형 1-5>~<모형 1-7>은 시점 고정 효과를 고려하여 경기 순환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동적 패널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의 고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합동 회귀 모형의 경우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게 추정되고 있다. 탄력성의 크기는 -1.9~-2.8로 매우 탄력적이라고 보여진다. 예컨대 <모형 1-5>의 경우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2.7%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비 이외에 다른 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는 양(+)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나, 그 크기는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탄력성은 양(+)으로서 자녀가 보통재(normal goods)임으로 보여 주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하지만 그 크기는 0.18로 비탄력적이었다.

〈표 4-3〉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합동 회귀 모형					동적 패널 모형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모형 1-6	모형 1-7
1년 전 출산율						0.662 *** (0.0588)	0.524 *** (0.0745)
2년 전 출산율						0.205 *** (0.0678)	
교육비	-1.901 *** (0.343)	-1.971 ** (0.329)	-2.241 *** (0.341)	-2.842 ** (0.345)	-2.711 ** (0.917)	-0.996 ** (0.401)	-1.004 *** (0.389)
교육비 * 교육비 더미 (2005년 이후 1, 이전 0)				0.219 ** (0.0403)	0.109 (1.109)	0.722 ** (0.362)	0.735 ** (0.360)
소비자 물가 지수	0.0162 *** (0.0044)	0.0141 ** (0.0042)	0.0168 *** (0.0042)	0.0182 ** (0.0041)	0.0108 (0.0195)	0.0118 ** (0.0057)	0.0121 * (0.0062)
로그 지역 내 총 생산			0.148 *** (0.0313)	0.166 ** (0.0303)	0.182 ** (0.0240)	0.0614 (0.0669)	0.0457 (0.071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141 ** (0.0018)	-0.001 43 (0.0015)	-0.001 08 (0.0016)
여성 혼인율					-0.0332 ** (0.0051)	0.0143 *** (0.0038)	0.0151 *** (0.0040)
지역 내 총생산		6.93e-06 *** (1.23e-06)					
상수항	1.500 *** (0.107)	1.597 ** (0.104)	0.278 (0.278)	0.348 (0.268)	0.635 (1.361)	-0.415 (0.587)	-0.421 (0.629)
표본 수	348	347	347	347	240	224	224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시간 고정 효과					YES	YES	YES
광역 자치 단체						16	16

* p<0.1, **p<0.05, ***p<0.01

주: 동적 패널 모형에서 () 안은 clustered standard error임.

〈표 4-3〉에서 출산의 시차변수와 지역 내 고정 효과를 고려한 〈모형 1-6〉과 〈모형 1-7〉은 합동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와는 양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다. 출산의 1계 시차변수를 고려한 〈모형 1-6〉에서는 시차변수의 계수가 0.66이었다. 출산의 2계 시차변수까지 고려한 〈모형 1-7〉은 2계 시차변수까지 유의했으며, 1계 시차변수의 계수는 0.52, 2계 시차변수의 계수는 0.21이었다. 이는 한 번 합계출산율이 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시차변수와 고정 효과

를 고려한 동적 패널 모형에서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으며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합동 회귀분석 모형에서 추정된 추정치의 절반 이하이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모형 1-7〉의 경우 교육비에 관한 출산 탄력성은 약 1.0으로 단위 탄력적이다. 즉,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1% 감소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형 1-6〉의 탄력성은 -0.996으로 거의 1에 가까웠다. 2005년 이후 더미와 교육비와의 교차항의 경우 0.735로 추정되었다(모형 1-7).

교육비를 하부 교육비로 구분하여 앞에서의 추정 모형과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4-4〉는 학령기별 추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교육비는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비의 경우 의무 교육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학교 학비의 경우 출산한 자녀의 장래 교육비에 대한 충분 통계량으로 기능할 수 있어 자녀 양육비의 중요한 대리변수가 된다. 사교육비의 경우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교육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가임기 여성에게 전파되지 않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높은 교육비는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2005년 이전에는 그 크기가 작지 않았으나 저출산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작아졌다. 이를 학령기별로 구분해 보면 고등 교육비가 다른 학령기 교육비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표 4-4〉 학령기별 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동적 패널 모형			
	초등	중등	고등	기타
1년 전 출산율	0.588 *** (0.0631)	0.588 *** (0.0651)	0.564 *** (0.0514)	0.539 *** (0.0829)
2년 전 출산율	0.214 ** (0.0845)	0.197 ** (0.0790)	0.227 *** (0.0806)	0.196 *** (0.0715)
교육비	0.0683 (0.111)	-0.0999 (0.202)	-0.380 ** (0.162)	-0.416 * (0.231)
교육비* 교육비 더미 (2005년 이후=1, 이전=0)	-0.0134 (0.135)	0.0928 (0.169)	0.00774 (0.214)	0.460 * (0.255)
소비자물가지수	4.63e-05 (0.00470)	0.00119 (0.00545)	0.00302 (0.00554)	0.00587 (0.00473)
로그 지역 내 총생산	0.0793 (0.0843)	0.0640 (0.0777)	0.0434 (0.0629)	0.0767 (0.075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0.00204 (0.00157)	-0.00190 (0.00165)	-0.00156 (0.00162)	-0.00154 (0.00170)
여성의 혼인율	0.0148 *** (0.165)	0.0166 *** (0.00440)	0.0172 *** (0.00409)	0.0135 *** (0.00455)
상수항	-0.586 (0.726)	-0.431 (0.666)	-0.261 (0.513)	-0.575 (0.670)
표본 수	224	224	224	224
지역 고정 효과	YES	YES	YES	YES
시간 고정 효과	YES	YES	YES	YES
광역 자치 단체	16	16	16	16

* p<0.1, **p<0.05, ***p<0.01
주: 동적 패널 모형에서 () 안은 clustered standard error임.

제2절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분석틀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양적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출산에 대한 교육의 일반적인 경향성 파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질적 접근은 교육이 출산에 미치는 다양한 맥락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혼, 출산 및 양육 당

사자의 인식과 행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적 접근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 의사 결정의 당사자인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5〉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질적 접근의 면담 내용

면담 대상	주요 면담 질문 내용
미혼자	• 개인 배경(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가족 관계 등) • 결혼가치관(만혼과 비혼 사유 포함) • 결혼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교육 수준의 의미 • 결혼 후 자녀 출산 계획 등
기혼자 (신혼 부부, 소자녀 부모, 다자녀 부모)	• 개인 배경(성별, 학력, 직업, 월 소득, 결혼 연수, 맞벌이 여부 등) • 결혼관 및 결혼 과정 • 자녀 계획과 결정 이유 • 자녀 교육관 및 자녀 교육 지원 행위(양육 과정 및 사교육 내용 포함) • 자녀 교육 기대 수준 및 독립 시기 등

심층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과 생애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중심적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간은 일대일 면담 일 경우에 1회당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집단 면담일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유형을 사용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면담 자료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4) 연구자는 1단계로 수집 혹은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질문의 해결을 위한 분석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로 자료 읽기 과정에서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을 매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 전사 자료 파일에 직접 워딩을 하거나 인쇄된 자료에 추가로 메모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단계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자료에서 논리적 일치와 차이를 찾기 위해 코드와 메모를 비교

위한 전략으로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적용하였다.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중 1~2명을 후속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 신빙성,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을 반영하고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준거 기반 선정(criterion based selection)을 기초로 ‘고유 표본 선정(unique sampling)’과 ‘눈덩이 혹은 연쇄적 표본 선정(snowball or chain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미혼자와 기혼자를 섭외할 때, 이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한정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먼저 결혼 이행 과정에 대한 면담 대상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직접 섭외하기도 하였고, 주변 지인들의 사회적 인맥을 활용하여 추천받기도 하였으며, 면담자들이 연구 주제에 적합한 지인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결혼 이행 과정에 대한 면담자로 최종 선정된 미혼자들은 25명이며, 일반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4-6>으로 정리하였다.

<표 4-6> 미혼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출생 연도 (만 연령)	교육 수준	현재 직업	소득 (전체 직업 경력)	비고
미혼1	남	1982(35)	석사 수료	공기업 일반직	3,500만 원(6년)	재혼 가정, 외동/이복 형제, 지방 출신
미혼2	남	1983(33)	대졸	수행비서	3,800만 원(8년)	양친, 4녀 1남, 창업 준비

하고 범주 생성을 위하여 코드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범주들 사이의 지속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주제를 생성한 다음에 최종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글쓰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례	성별	출생 연도 (만 연령)	교육 수준	현재 직업	소득 (전체 직업 경력)	비고
미혼3	남	1985(31)	대졸	IT보안 개발	4,300만 원(6년)	양친 맞벌이, 1녀 1남, 지방 출신
미혼4	남	1988(28)	대졸	벤처 기획 관리	6,500만 원(3년)	양친, 1남 1녀
미혼5	남	1988(28)	대졸	사립고 교사	3,700만 원(3년)	양친, 1녀 1남, 지방 출신
미혼6	남	1990(26)	전문대 졸	요리사	2,100만 원(3년)	양친, 외동
미혼7	남	1991(25)	전문대 졸	항공 물류 관리	2,000만 원(3년)	양친, 1녀 1남
미혼8	남	1994(22)	대재 2학년	대학생 (교육학)	없음	양친, 맞벌이, 2남 중 둘째, 재수
미혼9	남	1995(21)	대재 2학년	대학생 (가정 교육)	없음	양친, 맞벌이, 2남 중 첫째, 재수
미혼10	남	1995(21)	대재 2학년	대학생 (언론 미디어)	없음	양친, 2남 중 둘째, 재수
미혼11	남	1995(21)	대재 2학년	대학생 (영어 통번역)	없음	양친, 맞벌이, 외동, 재수
미혼12	여	1977(39)	박사졸	연구원	6,500만 원(2년)	양친, 1녀 2남, 장녀
미혼13	여	1984(32)	석사졸	IT보안 연구원	4,300만 원(3년)	한부모 가정, 취업모(교사), 2녀 중 첫째
미혼14	여	1984(32)	대졸	대학 행정직	2,900만 원(6년)	양친, 1녀 1남
미혼15	여	1986(30)	석사졸	대학 연구직	3,000만 원(2년)	양친, 2녀 중 둘째
미혼16	여	1987(29)	대졸	대학 행정 사무직	3,000만 원(5년)	양친, 맞벌이, 1남 1녀
미혼17	여	1989(27)	대졸	공립중 교사	3,100만 원(3년)	양친, 맞벌이, 2녀 1남, 쌍둥이 자매 둘째
미혼18	여	1993(23)	전문대 졸	회사원	2,200만 원(3년)	양친, 맞벌이, 2녀 중 첫째
미혼19	여	1993(23)	전문대 졸	대학 행정직	2,300만 원(3년)	한부모 가정, 취업모(식당), 1남 1녀
미혼20	여	1994(22)	전문대 졸	회사원	2,400만 원(3년)	양친, 3녀 중 셋째
미혼21	여	1994(22)	전문대 졸	회사원	1,800만 원(3년)	양친, 맞벌이, 2녀 중 둘째
미혼22	여	1995(21)	대재 4학년	대학생 (영어 교육)	없음	양친, 맞벌이, 1녀 1남, 대학원 준비
미혼23	여	1995(21)	대재 4학년	대학생 (심리학)	없음	양친, 맞벌이, 1남 1녀, 대학원 준비
미혼24	여	1996(20)	대재 3학년	대학생 (국어 교육)	없음	양친, 1녀 1남, 임용 시험 준비
미혼25	여	1995(21)	대재 2학년	대학생 (영어학부)	없음	양친, 1남 1녀, 재수

출산 이행 과정에 대한 면담 대상자는 결혼 연수, 자녀 수 유형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결혼을 2~3개월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결혼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고 출산 이행 과정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미혼자와 기혼자의 연결고리로서 의미 있는 경험과 해석의 도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의 일반적 특성은 <표 4-7>과 같다.

<표 4-7> 예비 신혼부부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학력	직장	소득(연봉)	가족 관계	자녀 계획
신혼1	남	30	대졸	대기업	7,000만 원	양친, 외동	2~3명
	여	30	대졸	대기업	7,500만 원	양친, 2녀 중 첫째	2명, 딸 우선 희망
신혼2	남	30	대졸	대기업	4,500만 원	양친, 2남 중 첫째	무자녀 생각 있음, 2명
	여	29	대졸	대기업	4,000만 원	양친, 1남 1녀	2명, 딸 우선 희망
신혼3	남	32	석사졸	은행	4,600만 원	모친, 외동	2~3명
	여	24	전문대졸	교육 기관	2,200만 원	양친, 맞벌이, 2녀 1남 중 첫째	2명, 아들/딸 희망

유자녀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4-8>에 정리하였다. 유자녀 부모 면담은 주로 주 양육자인 엄마로서 아내인 여성들이 참여하였으며, 다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유자녀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과 교육 실천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자녀 수, 연령, 재학 중인 교육 기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 연수는 10년 이상 부모 6명과 8~9년차 부모 6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또한 부모의 개인 배경으로 학력, 직업, 소득 수준도 고려하였으며, 특히 엄마의 취업 여부와 함께 경력 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포함되었다.

〈표 4-8〉 유자녀 부모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배우자 (연령/학력/직업)	소득 (연봉)	결혼 연수	자녀 수 유형(연령)	재학 기관
유자녀 1	여	45	대졸	결혼 후 퇴사 (회사원)	37/고졸/ 자영업	6,000만 원	11년	딸 1 (9)	초 2 (혁신초)
유자녀 2	여	38	박사졸	상담 교수	38/박사 수료 (미술)/ 프리랜서	5,000만 원	10년	아들 1 (10)	초 3
유자녀 3	여	41	대졸	결혼 후 퇴사 (유치원 운영)	45/대졸/ 대기업	9,000만 원	9년	아들 1 (7)	병설 유치원
유자녀 4	남	45	석사졸	기간제 교사	37/대졸/ 학원 운영	7,500만 원	8년	아들 1 (7)	병설 유치원
유자녀 5	여	46	대학 중퇴	주3일 근무	50/대졸/ 건축업	6,000만 원	9년	딸 2 (8, 7)	초 1, 국공립 어린이집
유자녀 6	여	36	전문대 졸	첫째 출산 후 퇴사 (회사원)	38/대졸/ 회사원	3,800만 원	8년	딸 1(7) 아들 1(5)	국공립 어린이집
유자녀 7	여	36	석사졸	첫째 출산 후 퇴사 (연구직)	39/대졸/ 대기업	8,000만 원	8년	아들 1(7) 딸 1(4)	영어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유자녀 8	여	41	대졸	첫째 출산 후 퇴사 (직장어린이 집 근무)	44/대졸/ 회사원	5,000만 원	14년	아들 3 (14, 13, 11) 딸 1(8)	중 1 초 6, 4, 1 (혁신초)
유자녀 9	남	42	대졸	학교 강사 교육 대학원 재학 중	41/고졸/ 전업 주부 (결혼 후 퇴사)	2,000만 원	12년	아들 4 (13, 11, 9, 7) 딸 1(5)	초 6, 4, 2, 국공립 어린이집
유자녀 10	여	44	고졸	결혼 전 퇴사	44/고졸 (취업 후 전문대졸)/ 자영업	6,000만 원	11년	딸 3 (10, 7, 5)	초 3 민간 유치원
유자녀 11	남	35	대졸	회사원	35/전문대졸/ 둘째 출산 후 퇴사 (회계 사무직)	4,000만 원	10년	아들 3 (9, 5, 3)	초 2, 민간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유자녀 12	여	39	전문대 졸	첫째 출산 후 퇴사 (어린이집 근무)	39/고졸/ 가업 승계 고용 (영업 관리)	2,800만 원	8년	아들 2 (8, 4) 딸 1(6)	초 1,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

2. 분석 결과

가. 학력주의와 결혼

1)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한 결과로서 ‘대학’ 진학은 인지적 능력은 물론 성실함도 보여 주는 객관적 증표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다양한 재능을 망라하는 베이스로서 그 사람의 성실성과 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소질과 적성보다도 우위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이는 공부를 잘한 결과는 대학의 서열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학의 서열 수준과 학교의 평판이 개인의 능력과 인성의 양적, 질적 격차를 가늠하는 잣대로 의미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많이 학벌주의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바꾸지 않을뿐더러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한민국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일단 시선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야 하나? 재는 공부도 잘하니까 담배도 안 피고, 뭐라도 잘할 거고, 뭘 하더라도 빨리 배울 거고.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재가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을 거고, 뭘 하며 뭘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미혼 10)

반면, 같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대학 내 모든 학생들의 능력과 인성을 동질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 안에

도 다양한 학과와 전공이 있으며 비록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좋은 인성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즉,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볼 때 객관적인 학업 능력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인성이 객관적 선발 기준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력과 학벌은 ‘공통된 주제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지적 역량이나 교양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랑 대화 수준, 이런 걸 좀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팀플을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분들이 좋은 학교, 좋은 과를 다닌다고 해서 인성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력을 얘기할 때는 저랑 얼마나 소통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더 찾는 것 같아요. 인성은 알아 가면서 또 새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미혼 22)

2) 남성 학력과 결혼

학력이 높아지게 될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결혼 연령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례에서도 고학력(대학 이상) 미혼자들은 결혼 의향을 가진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 월급을 250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적금 넣고, 뭐하고 하니까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지원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 제 선에서 다 끝내고 싶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좀 더 벌어 보고 하자, 그랬거든요. 이제 진급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이 되니까,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거든요.(미혼 3)

‘자리도 잡았겠다. 결혼해야지. 만나는 사람 있냐?’부터 해 가지고 막 중매 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3살 쯤 돼서 결혼해야지, 그때도 늦은 나이는 아니니까. 요즘 많이 늦어졌잖아요.(미혼 5)

반면, 20~21세의 이른 나이에 취업하였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대졸 남성은 일자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중략) 주 5일 근무도 새벽 출근을 해야 하고 초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 밤 10시, 11시가 되고, 그러면 잠자기 바쁘고. 게다가 주말에도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렵죠…….(중략)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는데. 매매로 집을 사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모아 놔야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미혼 7)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결혼 시기’는 취업 자체보다는 직장의 구조적 현실, 즉, 괜찮은 일자리인지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학력으로 진입하는 일자리의 상황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빨라지더라도 초혼 연령이 낮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학력화는 노동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열망에 따라 추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만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여성 학력과 결혼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이들의 사회 진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 필수이며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을 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독립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거에 비하면 결혼은 다른 의미인 거죠. 정말 선택이라고 생각해서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전부터 생각했어요…….(중략) 내가 결혼을 해서 더 나은 미래,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결혼을 한 미래가 더 좋다면, 좀 좋은 미래가 그려진다면 하고 싶다, 해야 하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미혼 17)

결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되묻기도 하였고 자신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유를 찾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딱히 잘 모르겠고요. 셋째로는 결혼을 했을 때 부담, 예로 육아, 출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미혼 13)

또한 자신의 삶에서 경제적 주체로 독립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결혼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 고학력자이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삶에서 ‘평생 커리어’를 갖는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있었다.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오히려 ‘이상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랑 제 친구들은 경제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은 결혼하는 여자들을 보면 의외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그냥 회사 다 그만두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등.(미혼 13)

일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정의 가치도 소중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일과 결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직장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스스로도 좋은 엄마, 좋은 부인이지만, 제 일을 하면서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일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내 삶도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중략)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것 중에서도 육아휴직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계속 몇십 년 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찾으면서 여기에 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미혼 16)

이처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커리어' 유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커리어'를 지키면서도 결혼이 가능한 직장, 즉 출산과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전문직 진출을 준비하는 것이다. 요컨대, 대졸 이상 여성들은 결혼보다는 '평생 커리어'에 대한 욕구를 우선 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커리어와 결혼을 모두 선택하려는 여성들도 출산과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직을 얻기 위해서라도 고학력화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교육열과 출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변 선배 엄마들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유아기부터 이미 진학할 학교 로드맵을 가지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둘째까지 낳아 교육을 시킬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의사를 생각하고, 의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학을 끝낸다고. 그렇게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다……. (중략) 무서워요. 주변에 제가 □□를 다녀서 그런 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저하고 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는 혼자서 거기서 책을 보거나 할 때에도 주변에서의 그런 담소가 많이 들리잖아요.(유자녀 3)

영어 유치원 비용은 이쪽에서 △△ 보내는 엄마들은 한 110만 원 정도? 그 친구, □□에서 같이 수업받는 친구는 △△ 다니는데 6세부터 가던데요. 그 친구는 훨씬 바빠요. 매일 영어 유치원 가고 또 오후에 새끼 학원이라 해가지고 그런 학원을, 영어 학원을 또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둘째를 낳아요.(유자녀 3)

신혼부부는 자녀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과 명문대 진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을 보면서 ‘아예 자녀를 낳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키우면 뭔가 애한테 이것도 해 줘야 되고 저것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중략) 주위에서도 많이 듣는 게 영어 유치원에 다녀, 영어를 잘해, 그런데 내 애는 영어를 못 해, 근데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어, 재는 저래서 영어를 잘하잖아, 이러면 애가 더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잖아요, 크면서.(신혼 2, 여성)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현실에서 자녀가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다면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구나 과연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냐 안 가냐 하는 두 개의 옵션이 있어, 살아 남으려면 아무래도 월하든 간에 무조건 가야 되고. 분야가 뭐든 상관없이……. (중략) 굳이 애를 안 낳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없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애가 그렇게 고생할 거라면.(신혼 2, 남성)

대학도 스카이……. (중략)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신혼 2, 여성)

‘교육열이 센 지역’에서는 자녀 교육 성취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게 나타났다. 주변 엄마들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구체적인 학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교육 로드맵을 찾아서 제공하고 있었다. 빈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나,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장차 자녀가 남부럽지 않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 언니들은 애가 중학교는 어디를 가서,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서, 대학교는 어디, 이렇게 그런 라인을 그렇게 해 놔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중략) 주변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해 줘봐. 그런 이야기에 자꾸 귀가 열리는 거죠……. (중략) 제가 여기에 와서 빈부 격차가 되게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정말 자기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사)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유자녀 3)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부모의 모든 자원을 한 명의 자녀에게만 제

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도 ‘최고와 명품’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국공립은 아니지만 평이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온전히 보조를 못 받는 곳에 보내게 돼서. 40만 원……. (중략) 내가 일을 하러 나왔고 그래서 아이를 종일반까지 맡기고 사설 유치원에 보내다 보니까 비용이 50만 원, 특활비까지 들어가면 60만 원 정도. 이 외에 홈스쿨 이런 것까지 하면 아이한테 들어갔던 비용이 80에서 100은 썼던 것 같은데요.(유자녀 4)

야외 체험 활동(숲 체험, 박물관, 연극 관람 등)과 천연 간식, 유기농 우유, 직접 달인 홍삼 이런 것도 좋았어요. 교육 내용도 매달 새로운 다문화 배우기, 노부영, 태글리시, 발레 등 다양한 배움 활동도……. (중략) 유치원 비용은 100만 원으로 많이 들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좋았고 만족스러웠어요.(유자녀 1)

부모는 자녀의 모든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을 하다 보니 그야말로 엄마는 자녀의 ‘총괄 매니저’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6살 때 몇 번 아역엔터(테인먼트)에서 명함을 받고 신랑과 의논하고 아이도 하고 싶어 해 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집 앞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비용은 6개월 트레이닝비가 180만 원에 프로필 촬영비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때부터 2학년까지 매달 30만 원 정도 트레이닝비가 들어갔어요.(유자녀 1)

유자녀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변 학부모들과 자녀들과의 비교와 경쟁 때문에 조금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학교에서는 사교육 시키지 마라 얘기하지만 이미 아이들이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어요. 1학년과 2학년은 쉽게 가지만 교과서, 문제집을 보면 그냥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도 높

아저 있는 상태이고. 그걸 따라가려면 학원이네 어디네 원가를 도움을 받아야. 엄마가 완전히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아직까지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자기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유자녀 5)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질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진 다양한 사교육 기관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부담을 갖는 다자녀 부모들은 자녀들이 상급 학교로 갈수록 교육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인 게 조금 어려워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은 시키려고 하는데……. (중략) 엄마들 하고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받아요……. (중략) 영어를 아빠나 저나 둘 다 못하다 보니까, 저건 꼭 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고민에 또 빠지는 거죠.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이것 시켜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유자녀 11)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아이들한테도 웬만하면 사립대도 가지 말고. 우리가 네 아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이 많이 돼요.(유자녀 8)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절망하게 된다고 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유학을 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더욱 심경이 복잡해진다고 한다.

엄마는 너희들이 그냥 한국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공부하고, 미국에 랭귀지 스쿨이라도 꼭 보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보내겠지만……. (중략) 좀 무섭기는 해요. 만약에 정말 내 아이가 한국에서 잘 학교를 못 가면, 나중에는 진짜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 봐.(유자녀 8)

이상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에 더하여 교육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추동하는 주변 분위기는 다자녀 부모들에게 더욱 불안감을 키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부모들은 교육열을 부추기는 주변 상황 때문에 불안감이 더 높아진 데다 자녀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더해질 수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땅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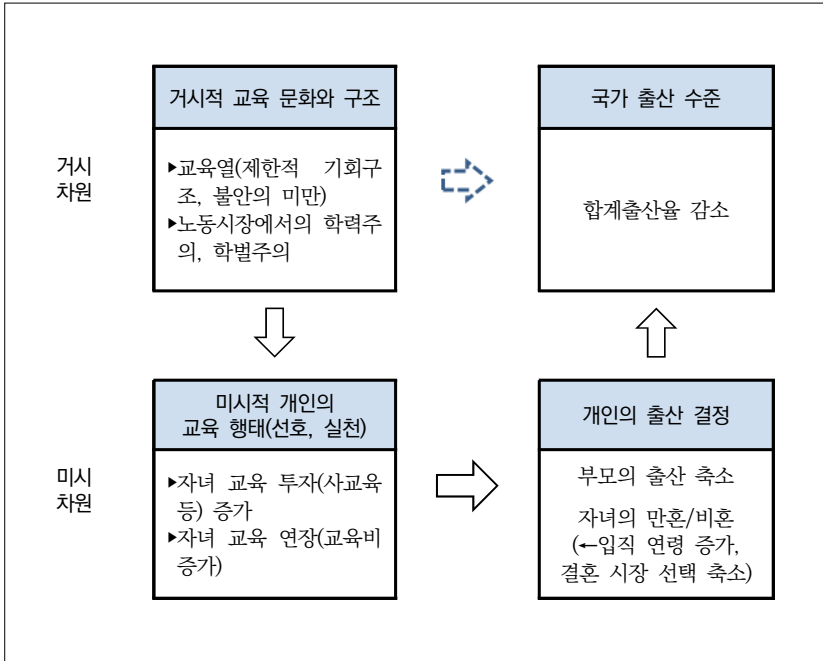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요인들은 실제 출산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교육 문화나 구조는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개별 가구의 교육 방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들의 결혼 혹은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제한적인 기회 구조와 불안의 미만은 교육열을 불러일으킨다. 교육열은 진공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받고, ‘문화 생태 환경’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산된다(이종각, 2002). 제한적 기회 구조와 불안의 미만은 집단 추종(혹은 군집 행동)을 통해 교육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개별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을 축소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학력주의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에 의해 공고화 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의 구직, 승진, 보수에 교육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획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육열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칭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개별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하고 교육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개인들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 안에서 ‘괜찮은 일 자리’를 찾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입직 및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개별 가구의 상승 열망과 결합하여 과도한 보육·교육비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소자녀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성적표로 여기는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올인(all in)’식 투자 행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김경근, 2016). 특히, 자본을 소유하지 못해 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성 세대의 경험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경험을 물려주고자 하여 교육열을 한층 가열시킨 측면이 있다(강희돈, 1994).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진학은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큰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박남기, 1994), 개별 가구는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보육·교육비의 한도를 높이고 이는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개별 가구에서 겪게 되는 교육비 부담은 당장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모가 소수의 자녀에게 ‘올인’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 수(quantity)를 제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림 4-6] 교육 문화·구조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제 5 장

노동시장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1. 노동시장의 구조 및 문화

가. 학력 중시 고용 문화

한국 사회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학력 중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이후 근로 형태, 임금 등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박라인, 황승록, 2015).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1980년대 초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 이후 대졸 이상의 노동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소하였으나(김주섭, 이상준, 2000),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일한 학력 집단 내에서도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고학력 계층의 하향 취업,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임금 불평등도가 확대되었다(정진호, 이규용, 최강식, 2004).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교육 수준별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중학교 이하 학력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고, 대학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들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교육 수준별 근로자의 상대적 임금(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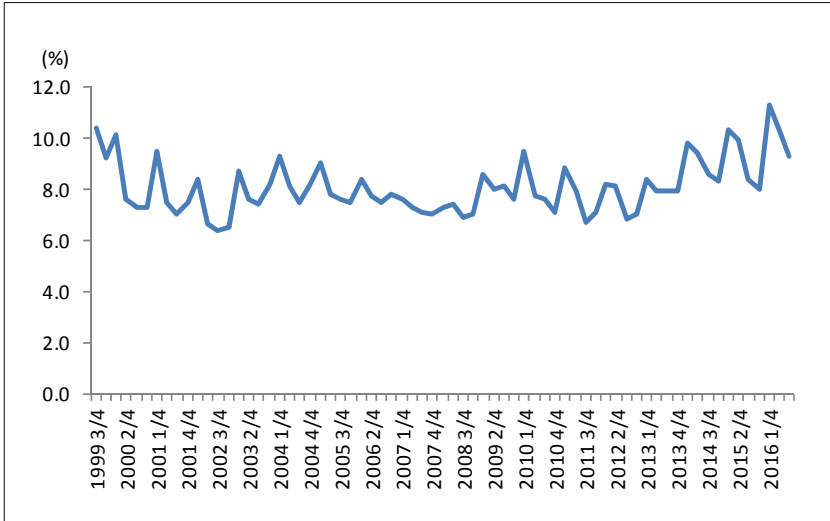
	중학교 이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호주(2012)	88	118	139	155
프랑스(2012)	89	118	124	187
독일(2014)	84	126	152	177
한국				
1998	78	106	147	-
2003	67	111	156	-
2007	69	118	177	-
2008	69	103	143	-
2010	69	115	167	-
2011	71	116	164	-
2012	71	116	161	-
2014	74	112	145	196

자료: 1)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2014) 자료는 OECD(2016). "Education and earnings",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EARNINGS. See Annex 3 for note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2) 한국의 1998~2012년 자료는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에서 2016. 9. 15. 인출.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간 차별은 과잉 학력 현상을 유발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은 2010년 75.4%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학력자의 공급 과잉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김주섭, 이상준, 2000).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고학력자들로 하여금 하향 취업하도록 하여 일자리의 미스매칭 현상을 발생시켜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15~29세 실업률은 다소의 불규칙성은 있으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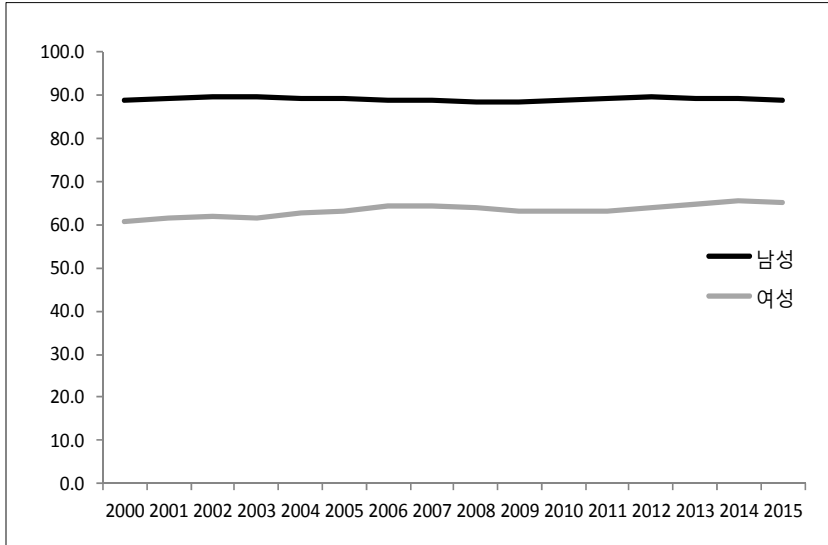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에서 2016. 10. 27. 인출.

나. 성 차별적 노동시장

한국 여성의 고등 교육 진학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50%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거의 9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2000년 60% 수준에서 2015년 65% 수준으로 5% 포인트 증가하였다. 동일하게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더라도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은 23%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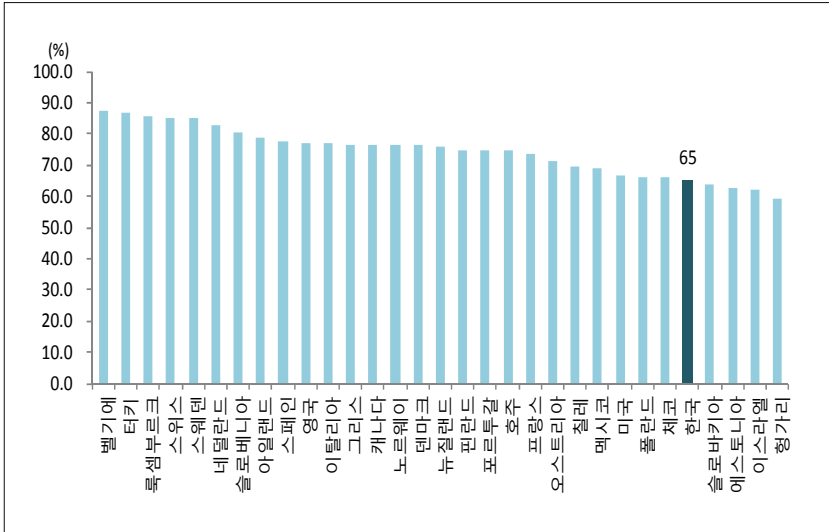
[그림 5-2] 대학 졸업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에서 2016. 10. 27. 인출.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 후의 근로 형태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 2016년 3월 기준 남녀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5.5%, 여성은 40.3%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6b).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상위 직급에 도달하는 비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전체 근로자의 분포와 비교할 때 여성 근로자의 경우 하위 직급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여성 근로자 중 상위 직급에까지 도달한 비율은 1% 수준이며, 이는 여성 지배적인 산업이나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정현, 2008). 한국의 경우 고등 교육을 받은 35~44세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6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OECD, 2015).

[그림 5-3] 고등 교육을 받은 35~44세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비율,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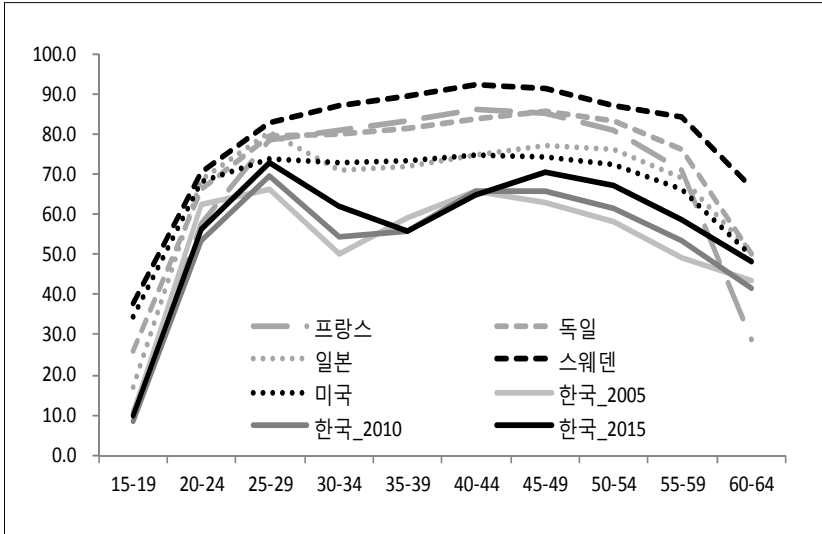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19991487.htm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그간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여 이들의 인적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은 증가하였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나 관행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성지미, 2007). 또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내 위치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 이탈을 더욱 쉽게 하는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임신·출산이나 영유아 자녀 양육 시기에 여성들의 이탈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상승하기는 하나, 이들 중 대부분은 노동시장 이탈 전과 동일한 직종이나 위치로 가기보다 하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그림 5-4] 주요국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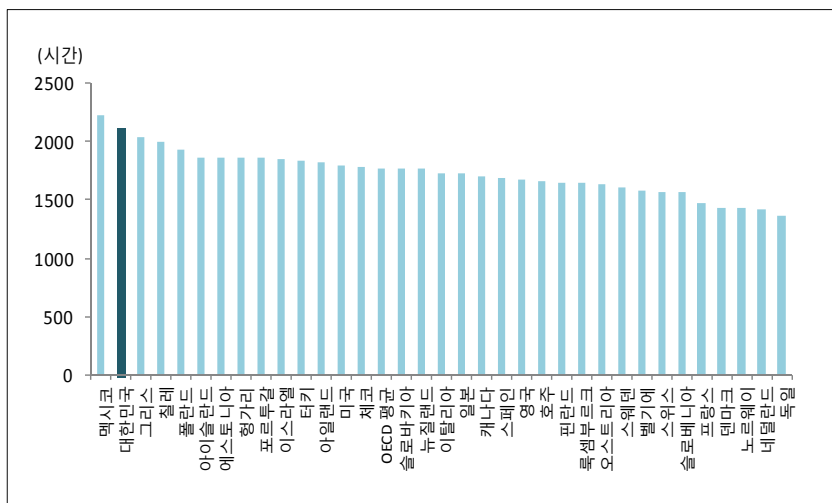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 <http://stats.oecd.org>에서 2016. 9. 24. 인출.

다. 장시간 근로 관행

우리나라는 2003년 근로 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40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5~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대다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이 2,113시간인 반면, 독일 1,371시간, 프랑스 1,482시간, 스웨덴 1,612시간, 일본 1,719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OECD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2015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에서 2016. 2. 4. 인출.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생산 시스템, 조직 문화, 근로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배규식, 2012).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대의 양적 투입 위주의 생산 시스템, 1일 8시간, 1주 40~44시간 등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부재, 기업의 최소 인력 운용 전략과 관행, 저임금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 요구 등이 서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배규식, 2012). 따라서 장시간 근로체제는 법 혹은 제도 변화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 비교적 강한 제도적 관성을 가지고 있다(배규식, 2012).

장시간 근로 문화는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누적된 피로는 차세대 노동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산업 재해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10). 다른 한편으로,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시킬 것이다.

라. 일-가정양립정책 수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제도로 알려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집단의 특징을 보면 이들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이용은 1,0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 판매 근로자, 기능직 및 조직원,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완만하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비중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어 급여의 소득 대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또한 이들 직종의 상당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데, 육아휴직제도의 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근속 180일 이상(산전휴가는 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은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구별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보호 수준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아휴직 급

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즉, 육아휴직제도의 양적 성과는 정규직-대규모 사업장-여성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여전하다는 점, 남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에서 휴가제도 활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2〉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중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율

(단위: 명, %)

기금 결재 연도	출산전후휴가 이용자 (A)	출산전후휴가자 중 육아휴직 이용자(B)	비율 (B/A*100)
2002	31	19	61.3
2003	22,545	4,225	18.7
2004	32,242	7,035	21.8
2005	38,655	9,096	23.5
2006	41,329	10,608	25.7
2007	49,631	15,089	30.4
2008	58,636	21,978	37.5
2009	68,776	32,950	47.9
2010	70,870	38,284	54.0
2011	76,231	43,759	57.4
2012	90,719	54,912	60.5
2013	93,999	58,377	62.1
2014	91,552	58,410	63.8
2015	90,535	56,646	62.6
2016	97,366	58,931	60.5

주: 급여 기금 결재 연도 기준 연도별 계산.
자료: 고용보험 DB(2002년부터 2016년 5월 30일).

육아휴직 이용은 증가했으나 직장 복귀율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동일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02년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가 증가했지만 그들의 동일 직장 복귀율은 2010년까지 하락하다 그 이후 다소 증가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종료자 가운데 1년 후에 동일 직장
에 복귀한 근로자 비율은 2002년 60.0%였다가 2010년 47.4%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는 56.6%에 머물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
자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의 근로자만이 1년 뒤 동일 직장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표 5-3〉 휴가제도 사용 종료 이후 1년 시점 동일 직장 고용 유지율

(단위: %)

기금 결재 연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2001	57.7	-
2002	74.0	60.0
2003	74.5	68.1
2004	74.0	65.5
2005	73.2	62.2
2006	68.5	60.2
2007	66.8	55.9
2008	71.4	52.5
2009	73.6	51.1
2010	74.2	47.4
2011	76.1	48.5
2012	76.9	51.3
2013	79.1	54.1
2014	80.0	56.6

자료: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수급자 DB와 피보험자 이력 DB를 결합해서 계산(2002년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동일 직장 복귀율은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가 드러나는데, 소규모 사
업장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 비중이 낮다.
2005년에는 1년 후에 동일 직장에 재직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30인
미만 사업장 42.5%, 1,000인 이상 사업장 69.3%이나, 2012년에는 30
인 미만 사업장 41.1%, 1,000인 이상 사업장 59.1%로 감소하였다(장지
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육
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하는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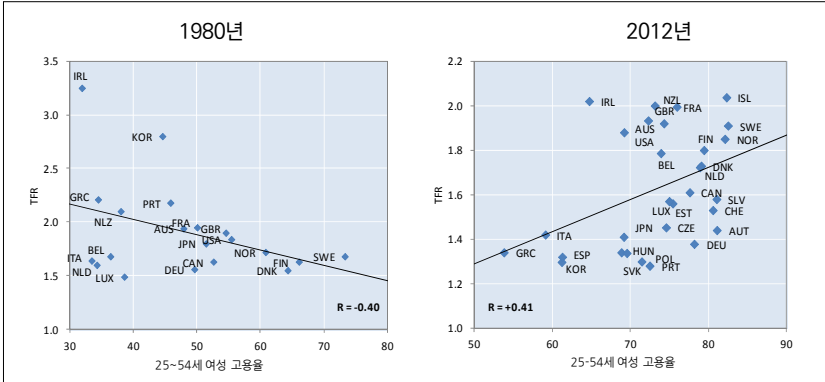
의 비중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모성 보호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많은 기회 비용을 가져오는 전문 직종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 혹은 포기하면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선택을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면, 1980년만 해도 음(-)의 관계를 보였다면, 2010년에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에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할수록 출산은 더 포기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의 방향이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게 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일-가정양립정책이 크게 확대되고 남성들이 육아 등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문화적 변화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나 현재 모두에서 이상점(outlier)으로 남아 있다. 과거에는 여성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주 낮고 합계출산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면, 현재에는 여성 고용률이 비교적 낮으며 합계출산율은 아주 낮게 나타난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일(커리어)과 출산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도록 강요받음에 따라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모두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림 5-6]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주: 이하 알파벳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4. 10. 8. 인출.

제2절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가. 분석틀

기혼 여성의 다음 해 첫째아 출산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빗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⁵⁾이

5) 한국노동패널은 2009년 기존의 도시 가구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의 표본 탈락으로 인한 표본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표본을 추가하였고, 그 결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표본 수가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새롭게 구축된 통합 표본을 이용하여

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09년 20~45세의 기혼 여성 중 출산의 경험
이 없는 경우로, 이 여성이 다음 해 출산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즉, 가
임기 기혼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출산 방정식은 제도 도입 일자리 취업 상태, 배우자의 취업과 소득, 연
령과 학력 등 개인 특성, 가구 소득과 부채, 거주 주택 소유 등 가구 경제
적 여력의 함수로 정의한다. 첫째아 출산(FER)은 관찰되는 경우에만 값
이 존재하는 잠재변수이다. 다음 해에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를 1로, 그렇
지 않을 경우 0으로 더미화하였다. 프로빗 모형의 식은 (5-1)과 같다.

$$FER_i = X_i\beta + EMPs_i\gamma_1 + u_i \dots\dots\dots (5-1)$$

$$FER_i = 1[FER_i^* > 0]$$

식 (5-1)의 EMP_i 는 휴가제도 도입과 취업 상태에 따라 4가지 상태
로 범주화했다. 제도를 도입한 일자리 취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자
리 취업, 자영업, 비경제활동 상태가 해당된다.

패널 자료의 특성을 살려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시간 비변동적
(time-invariant) 특성을 통제하고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추정했다.

$$FER^* = X\beta + EMPs\gamma_1 + c_i + u \dots\dots\dots (5-2)$$

$$FER = 1[FER^* > 0]$$

c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측정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선호 정도, 노동에 대한 태도 등의 비관측된 특성을 포함한다.

노동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c_i 를 고정 효과, 즉,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 패널 그룹별로 더미변수를 주거나 선형 회귀 모형에서처럼 within 변환을 통해 c_i 를 제거하고 추정한다. c_i 가 설명 변수들과 상관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거되기 때문에 일치 추정량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패널 개체의 수에 비해 시계열 관측 개체 수가 작을 때는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회귀 모형이 아니라 프로빗 모형일 경우에는 오차 항 c_i 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 효과 모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패널 프로빗 모형은 확률 효과 모형을 추정한다. 확률 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가 일치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c_i 와 설명 변수 간의 공분산이 0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p.234).

본 연구에서는 확률 효과 모형 대신 상관확률 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CRE)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은 고전적인 확률 효과 모형에 각 개인의 시간 변동적인 설명변수들의 평균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평균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개인의 시간 비변동적인 특성에서 유래하는 효과가 설명변수들과 독립적이라는 전통적인 확률 효과의 가정들을 테스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고전적인 확률 효과 모형의 c_i 가 독립 변수들과 독립적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가정이 위배될 경우 그러한 편의를 교정하는데 기여한다. 단, c_i 가 평균치 주위에서 정규 분포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D(c_i|x_{i1},\dots,x_i)=D(c_i|\bar{x}_i) \dots\dots\dots(5-3)$$

즉, Chamberlain(1980, 1982)에서처럼 설명변수에 조건화된 c_i 의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 변수들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면 고전적인 확률 효과 프로빗 모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평균 한계 효과가 매우 안정적으로 식별 가능하다(Wooldridge, 2013).

나. 실증 분석 결과

여성의 취업 상태를 보면 상용직에 비해 비취업 상태의 여성이 첫째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5.3% 더 높았고, 상용직과 임시 일용이나 자영업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출산 가능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소득은 출산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여성보다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그 이상인 여성의 경우 출산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이 4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는 저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 중 가구 소득은 4천만~7천만 원에 해당하는 중산층과 비교하면 그 이하는 출산 확률이 낮았고 그보다 높은 7천만~1억 원 집단은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가구 부채는 뚜렷하게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 부채가 없는 기혼 여성보다 가구 부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첫째아 출산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1억 원 초과인 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등 자산 형성을 위한 부채 규모가 생계형 부채의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반면, 부채가 1억 원 미만으로 소규

모인 경우 생계비나 잔여 학자금 대출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출산 선택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자가 거주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계수	한계 효과
본인 연령	-0.117 (0.015) ***	-0.024 (0.003) ***
본인 학력(기준=대학 졸업 미만)		
대학 졸업 이상	0.231 (0.148)	0.047 (0.030)
본인 취업 상태(기준=상용직)		
비취업	0.267 (0.153) *	0.053 (0.030) *
임시일용	0.173 (0.251)	0.033 (0.050)
자영자	0.286 (0.243)	0.057 (0.051)
가구 소득(기준=4천만~7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0.031 (0.283)	-0.006 (0.058)
1천만~4천만 원 이하	-0.032 (0.149)	-0.007 (0.031)
7천만~1억 원 이하	0.252 (0.226)	0.057 (0.054)
1억 원 초과	-0.493 (0.342)	-0.084 (0.048)
가구 부채(기준=없음)		
1억 원 이하	-0.392 (0.144) ***	-0.077 (0.026) ***
1억~3억 원	0.167 (0.262)	0.040 (0.064)
점유 형태(기준=자가 거주 안 함)		
자가	0.225 (0.133) *	0.046 (0.027) *
배우자 소득(기준=150만 원 미만)		
소득 없음	0.060 (0.446)	0.007 (0.054)
150만~300만 원	0.642 (0.290) **	0.106 (0.037) ***
300만~450만 원	0.783 (0.308) **	0.137 (0.044) ***
450만 원 이상	0.492 (0.360)	0.075 (0.054)
상수	2.118 (0.589) ***	
사례 수	728	728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년 원자료 분석.

비취업자 여성에 한정하여 배우자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다음 해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그 이상의 소득 수준인 배우자를 둔 여

성의 출산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전체 여성에 비해 비취업자 여성에 한정했을 때 배우자 소득이 미치는 한계 효과는 더 높았다. 45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과 150만 원 미만 저소득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자일 경우 출산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근로시간도 출산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5〉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계수	한계 효과
본인 연령	-0.123 (0.023) ***	-0.025 (0.004) ***
본인 학력(기준=대학 졸업 미만)		
대학 졸업 이상	0.301 (0.231)	0.060 (0.046)
배우자 소득(기준=150만 원 미만)		
150만~300만 원	0.954 (0.572) *	0.150 (0.060) **
300만~450만 원	1.068 (0.594) *	0.177 (0.069) **
450만 원 이상	0.099 (0.654)	0.010 (0.062)
배우자 종사상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0.526 (0.445)	0.120 (0.112)
자영자	0.096 (0.310)	0.019 (0.064)
배우자 근로시간(기준=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0.084 (0.195)	0.017 (0.039)
가구 소득(기준=4천만~7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0.012 (0.422)	0.003 (0.088)
1천만~4천만 원 이하	-0.057 (0.242)	-0.012 (0.049)
7천만~1억 원 이하	-0.784 (0.640)	-0.120 (0.070)
1억 원 초과	-0.448 (0.579)	-0.079 (0.087)
가구 부채(기준=없음)		
1억 원 이하	-0.533 (0.216) **	-0.098 (0.037) ***
1억~3억 원	0.951 (0.442) **	0.253 (0.126) **
점유 형태(기준=자가 거주 안 함)		
자가	0.444 (0.191) **	0.089 (0.037) **
상수	2.210 (0.839) ***	
사례 수	318	318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 원자료 분석.

〈표 5-5〉에서 가구 소득의 경우 앞선 분석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구 부채의 경우 전체 여성에 대한 분석과 같이 가구 부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가구 부채가 없는 가구보다 출산 확률이 감소했으나, 가구 부채가 1억~3억 원인 가구는 오히려 출산 확률이 증가했다. 즉, 자산 형성 목적의 부채가 있는 가구에서 자산 효과로 인해 여성이 비취업 상태에 있고, 그러한 가구에서 부채는 출산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1억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한 경제력 부족으로 출산 선택에 제약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취업 여성 가구에 한정하여 본인의 취업 특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 추정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5-6). 월평균 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근로시간과 직종을 통제하고 나서도 여성의 월평균 소득과 첫째아 출산의 관계는 역U자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이 강한 것은 아니나 여성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 확률이 증가하지만, 450만 원 이상인 경우 오히려 출산 확률이 감소한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자의 첫째아 출산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 사무직에 비해 다른 직종의 여성은 대체로 출산 확률이 낮았는데, 단순 노무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출산 가능성이 낮았다. 여성의 근로시간이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에 미친 영향을 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5~40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에 가까운 일자리를 가진 여성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여성은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낮았다. 특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여성은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16.2% 낮았다. 장시간 근로 문화가 일을 하면서 출산과 자녀 양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째아 출산 확률이 높았다.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나 근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자 여성 가구에서도 가구 부채가 1억 원 이하인 가구는 가구 부채가 없는 가구보다 다음 해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10.6% 낮았다.

〈표 5-6〉 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계수	한계 효과
본인 연령	-0.151 (0.026) ***	-0.027 (0.004) ***
본인 학력(기준=대학 졸업 미만)		
대학 졸업 이상	0.028 (0.251)	0.005 (0.046)
본인 월 소득(기준=150만 원 미만)		
150만~300만 원	0.197 (0.244)	0.035 (0.042)
300만~450만 원	0.585 (0.342) *	0.115 (0.072)
450만 원 이상	-0.092 (0.465)	-0.015 (0.072)
종사상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0.647 (0.297) **	0.121 (0.059) **
자영자	0.784 (0.331) **	0.151 (0.066) **
본인 직종(기준=사무직)		
관리자	-0.232 (0.246)	-0.044 (0.047)
서비스 판매	-0.306 (0.354)	-0.057 (0.064)
기능직 조립원	-0.156 (0.624)	-0.030 (0.118)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1.131 (0.516) **	-0.154 (0.051) ***
본인 근로시간(기준=35~40시간)		
35시간 미만	-0.193 (0.355)	-0.037 (0.066)
40~60시간	-0.281 (0.228)	-0.053 (0.042)
60시간 이상	-1.240 (0.703) *	-0.162 (0.051) ***
배우자 소득(기준=150만 원 미만)		
150만~300만 원	0.643 (0.305) **	0.092 (0.036) **
300만~450만 원	0.711 (0.368) *	0.104 (0.050) **
450만 원 이상	1.099 (0.450) **	0.186 (0.084) **
배우자 종사상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0.197 (0.364)	0.037 (0.072)
자영업자	0.189 (0.299)	0.035 (0.058)
배우자 근로시간(기준=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0.011 (0.213)	0.002 (0.039)
가구 소득(기준=4천만~7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0.311 (0.446)	0.056 (0.087)
1천만~4천만 원 이하	0.232 (0.247)	0.041 (0.043)
7천만~1억 원	0.584 (0.359)	0.115 (0.074)
1억 원 초과	-0.674 (0.466)	-0.081 (0.048) *
가구 부채(기준=없음)		
1억 원 이하	-0.605 (0.213) ***	-0.106 (0.035) ***
1억~3억 원	-0.300 (0.410)	-0.058 (0.073)
점유 형태(기준=자가 거주 안 함)		
자가	0.221 (0.217)	0.040 (0.039)
상수	3.231 (0.938) ***	
관측치	380	380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 원자료 분석.

2.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 등 제도의 이용 가능성과 첫째아 출산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다른 영향 요인들을 통제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비경제활동 상태 여성에 비해 제도 미도입 일 자리에 취업해 있는 여성의 첫째아 출산 가능성이 10.8% 감소하였다. 제도를 도입한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은 비경제활동 상태 여성보다 첫째아 출산 가능성이 1.1%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취업을 하더라도 제도를 도입한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이 출산에 갖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간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즉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표 5-7 참조).

〈표 5-7〉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첫째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

	계수	한계 효과
본인 연령	-0.105 (0.014) ***	-0.022 (0.003) ***
본인 학력(기준=대학 졸업 미만)		
대졸 이상	0.325 (0.147) **	0.068 (0.031) **
본인 취업 상태(기준=비경제활동)		
제도 도입 일자리 취업	-0.049 (0.162)	-0.011 (0.037)
제도 미도입 일자리 취업	-0.572 (0.173) ***	-0.108 (0.030) ***
자영업	-0.142 (0.229)	-0.032 (0.050)
가구 소득(만 원)	-0.000 (0.000)	-0.000 (0.000)
거주 주택 소유(기준=자가 거주 안 함)	0.144 (0.131)	0.030 (0.027)
자가		
배우자 월 소득(만 원)	-0.000 (0.000)	-0.000 (0.000)
배우자 취업 여부(기준=취업)		
무직	-0.337 (0.324)	-0.070 (0.068)
배우자 종사상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직	0.147 (0.284)	0.031 (0.059)
자영자	0.128 (0.181)	0.027 (0.038)
상수	2.518 (0.492) ***	
사례 수	719	719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 원자료 분석.

개인 간의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제도와 출산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하여 상관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추정 결과, 자영업의 계수의 방향이 양(+)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계수의 방향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즉, 개인 간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휴가제도가 갖는 취업-출산의 부정적 관계의 상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표 5-8 참조).

〈표 5-8〉 첫째아 출산 상관확률효과 모형

	계수	
본인 연령	-0.107	(0.021) ***
본인 학력(기준=대학 졸업 미만)		
대학 졸업 이상	0.265	(0.164)
본인 취업 상태(기준=비경제활동)		
제도 도입 일자리 취업	-0.082	(0.343)
제도 미도입 일자리 취업	-0.167	(0.252)
자영업	0.212	(0.397)
가구 소득(만 원)	-0.000	(0.000)
거주 주택 소유(기준=자가 거주 안 함)		
자가	-0.244	(0.318)
배우자 월 소득	-0.000	(0.001)
배우자 취업 여부(기준=상용직)		
무직	-0.455	(0.552)
임시직	-0.095	(0.706)
자영자	-0.012	(0.560)
일자리 특성 평균(기준=비경제활동 상태)		
제도 도입 일자리 취업 평균	0.108	(0.430)
제도 미도입 일자리 취업 평균	-0.905	(0.324) ***
자영업 평균	-0.548	(0.503)
가구 소득 평균(만 원)	0.556	(1.183)
자가 거주(기준=자가 거주 안 함)		
자가 거주	0.326	(1.010)
배우자 월 소득 평균(만 원)	0.081	(0.589)
배우자 취업 상태(기준=상용직)		
배우자 무직	-0.000	(0.000)
배우자 임시	0.000	(0.001)
배우자 자영자	0.636	(0.311) **
상수	2.565	(0.782) ***
Observations	719	
Number of pid	291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 분석.

임금 근로 여성으로 한정할 경우, 이들의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고 나면 휴직제도가 출산 결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5-9〉 임금 근로 여성의 휴직제도 여부와 첫째아 출산

	계수	한계 효과
본인 연령	-0.160 (0.030) ***	-0.034 (0.006) ***
본인 학력(기준=대학 졸업 미만)		
대학 졸업 이상	-0.135 (0.296)	-0.029 (0.063)
본인 직장 내 휴직제도(기준=없음)		
제도 있음	0.397 (0.269)	0.085 (0.058)
본인 월 소득(기준=150만 원 미만)		
150만~300만 원	0.070 (0.322)	0.015 (0.068)
300만~450만 원	0.386 (0.445)	0.089 (0.106)
450만 원 이상	-0.575 (0.724)	-0.096 (0.103)
본인 종사상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0.747 (0.332) **	0.176 (0.082) **
본인 직종(기준=사무직)		
관리자	-0.257 (0.265)	-0.055 (0.056)
서비스·판매직	-0.245 (0.398)	-0.053 (0.083)
본인 근로시간(기준=35~40시간)		
35시간 미만	-0.216 (0.450)	-0.044 (0.088)
40~60시간	-0.047 (0.254)	-0.010 (0.055)
60시간 이상	0.101 (0.776)	0.023 (0.179)
배우자 소득(기준=150만 원 미만)		
150만~300만 원	0.876 (0.380) **	0.140 (0.047) ***
300만~450만 원	0.865 (0.440) **	0.137 (0.063) **
450만 원 이상	1.539 (0.552) ***	0.307 (0.123) **
배우자 종사상 지위(기준=상용직)		
임시·일용직	0.588 (0.534)	0.143 (0.141)
자영업자	-0.086 (0.356)	-0.018 (0.072)
배우자 근로시간(기준=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0.014 (0.237)	0.003 (0.051)
가구 소득(기준=4천만~7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0.607 (0.456)	0.129 (0.106)
1천만~4천만 원 이하	0.469 (0.302)	0.095 (0.058)
7천만~1억 원	0.762 (0.423) *	0.169 (0.098) *
1억 원 초과	-0.452 (0.511)	-0.061 (0.064)
가구부채(기준=없음)		
1억 원 이하	-0.498 (0.246) **	-0.102 (0.046) **
1억~3억 원	-0.152 (0.533)	-0.034 (0.116)
자가 거주(기준=자가 거주 안 함)		
자가 거주	0.413 (0.258)	0.089 (0.054)
상수	2.930 (1.092) ***	
사례 수	258	258

*p<0.1, **p<0.05, ***p<0.0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자료: 한국노동패널 2009~2014 분석.

제3절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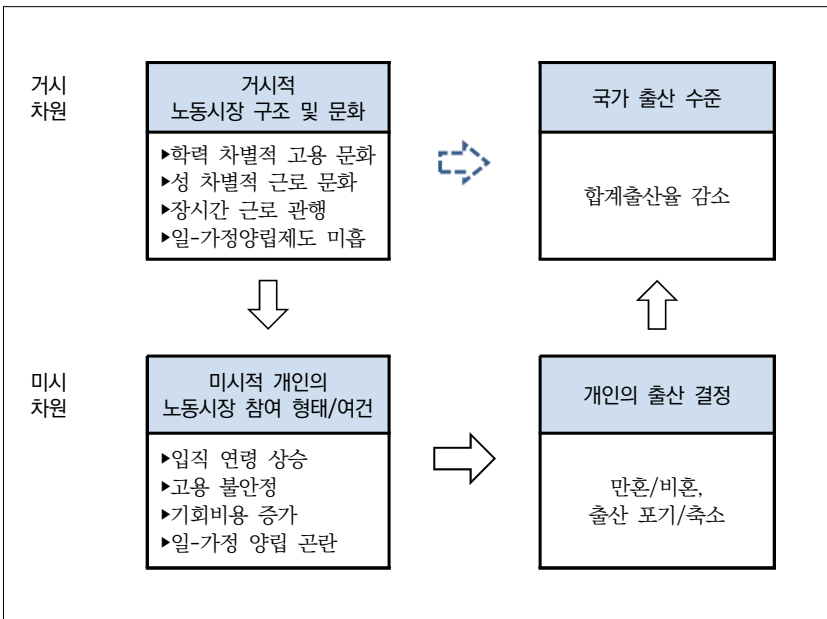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학력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는 개별 근로자들로 하여금 학력 과잉을 부추기게 한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학력 과잉의 문제는 특정 직종의 미스매칭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을 유도하여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해 낼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계속된다면 개인들은 더 높은 학력을 이수하고자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연장된 교육 이수 기간만큼 입직 시기는 늦추어진다. 이는 청년층의 독립 시기나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임금, 승진 등 차이)와 여성에게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두는 문화가 결합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한 번 이탈한 뒤에는 하향 취업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근로 환경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 여성의 하향 취업 심화는 통계적 수치로만 보았을 때, 저위신 직종에 있는 여성들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이들에게서는 일-가정 양립에 따른 출산 포기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오해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이탈 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이인생계부양가구의 보편화, 여성의 고학력화, 자아 실현 욕구 증가 등의 경향을 고려할 때, 현재 여성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지속된다면 경력 유지를 위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집단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곤란, 저출산 문제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 사례를 볼 때, 과거 음(-)의 관계가 뚜렷하였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최근에는 양(+)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는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해 부모로 하여금 직장에서도 오는 역할과 가정에서 오는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간 정부에서도 일-가정양립정책의 양적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제도 이용에서의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지 못하여 한국 사회가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5-7] 노동시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제 6 장

주택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주택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주택과 출산 간 관계

1. 주택 시장의 구조 및 문화

가. 주택 소유욕

한국 사회는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 안정적인 주거 활동이 보장되며, 소유한 주택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은 54.2%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1c).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9.1%로 나타난다. 2010년(83.7%)에 비해서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상당수는 자가 소유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구주가 저연령층일수록 주택 보유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가격의 안정, 전세 가격의 상승 및 저금리 등으로 주택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시장에서 적용되는 월세 이율이 은행 금리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근으로 올수록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국토교통부, 2014). 또한 최근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 ‘유산’, ‘투자’에서 ‘실제 거주’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백성준, 2010).

〈표 6-1〉 주택 보유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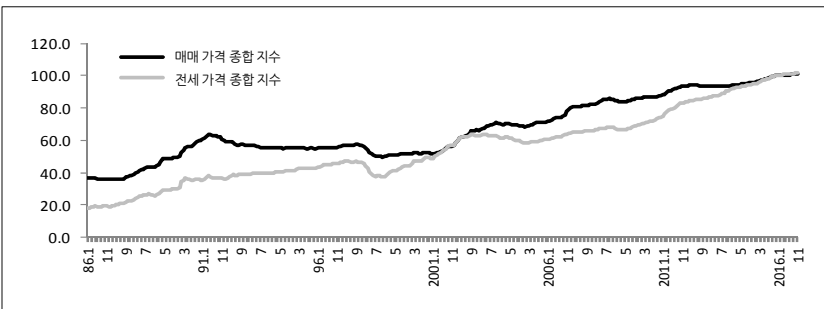
구분	2010			2014		
	그렇다	아니다	계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83.7	16.4	100.0	79.1	20.9	100.0
연령						
40세 미만	79.9	20.1	100.0	73.3	26.7	100.0
40~49세	80.3	19.7	100.0	75.2	24.8	100.0
50~59세	85.1	14.9	100.0	80.8	19.2	100.0
60세 이상	88.3	11.7	100.0	85.9	14.1	100.0
65세 이상	88.3	11.7	100.0	86.7	13.3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p.117 〈표 III-73〉을 재구성함.

나. 주택 가격

최근까지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주택 전세가격지수의 상승률이 매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은행 예금의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세 가속화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기인할 것이다(국민은행, 2016). 다른 한편으로 최근 가계 부채 종합 대책에 의한 매수 심리 위축,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이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개발연구원, 2016).

〔그림 6-1〕 주택 매매 가격 종합 지수 및 전세 가격 종합 지수(2015.12=100)



자료: 국민은행(2016). 월간 KB주택가격동향_시계열(2016. 9.).

2. 실증 분석 결과

높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결혼 후에도 대출 상환의 부담이나 주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주택 매매 가격 및 주택 전세 가격 수준은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 중소형 주택의 재고, 공공 임대주택의 재고 및 공급 수준 등도 가구 형성 시기의 거주 가능한 주택 재고와 관련하여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적 단위에서 주택과 결혼 및 출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혼인율 결정 모형의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고정 효과 모형에서 표준 오차를 추정함에 있어 Robust 옵션을 사용하였다.

〈표 6-2〉 혼인율 결정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fe(b)	re(B)	Diff.(b-B)	S.E.
ln_지역 주택 매매 가격	-1.606	-0.032	-1.573	0.127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726	-5.159	-2.567	
60㎡ 미만 주택 비율	13.358	3.164	10.194	2.521
공공임대주택 비율(공공)	7.034	2.795	4.239	
실업률	-0.147	-0.164	0.01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06	-0.002	0.008	
여성 대학 진학률	-0.042	0.006	-0.047	
ln_사교육비 지출액	-1.266	0.285	-1.551	

b = consistent under H_0 and H_a ;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_a , efficient under H_0 ; obtained from xtreg

Test: H_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8) = 164.16

Pr > chi2 = 0.0000

6) 자기 상관의 있는 경우에 시계열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모형이 다른데, 기간이 짧은 경우 (T=5)에는 고정 효과 모형이 적합하다(이희연, 노승철, 2014, p.530).

출산을 결정 모형에서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패널고정효과 모형 그리고 지역의 전세 가격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패널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Pr > \chi^2 = 0.5870$)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개체별 효과(μ_i)가 독립 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random)이기 때문에 확률 효과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출산율 결정 모형: 하우스만 검정 결과

	fe(b)	re(B)	Diff.(b-B)	S.E.
ln_지역 주택 매매 가격	-0.004	-0.178	0.174	0.104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88	-1.101	0.013	0.178
60㎡ 미만 주택 비율	2.560	0.284	2.277	1.072
공공임대주택 비율(공공)	-0.732	-0.666	-0.066	0.709
실업률	-0.052	-0.063	0.011	0.01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07	0.010	-0.003	0.005
여성 대학 진학률	-0.009	-0.010	0.001	0.002
ln_사교육비 지출액	-0.143	-0.112	-0.031	0.093

b = consistent under H_0 and H_a ;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_a , efficient under H_0 ; obtained from xtreg

Test: H_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8) = 6.54$

$Pr > \chi^2 = 0.5870$

패널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 기간은 2010~2014년이다.⁷⁾ 종속 변수는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이다. 설명변수로 주택 가격, 중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포함하였으며, 주택 관련 변수 외에 합계출산율과 조혼인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켜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대학 진학률, 사교육비 지출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 모두 시도별 값

7) 이는 중소형주택비율을 위한 '시도별 연건평별 주택' 자료가 2010년 이후 이용 가능하고,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도 2009년 이후 기간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데, 다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시도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여성 대학 진학률을 사용하였다.

〈표 6-4〉 패널 모형에 사용한 변수 설명

구분	변수	해당 자료	자료 출처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시도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조혼인율	시도별 조혼인율	통계청
설명변수	ln(지역 주택 매매 가격)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시도별 매매 가격, 매매가격지수)	한국감정원
	ln(지역 주택 전세 가격)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시도별 전세 가격, 전세가격지수)	한국감정원
	중소형 주택 비율	시도별 연건평별 주택 (60㎡ 미만 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통계청
	공공임대주택 비율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공공임대주택 수 / 전체 주택 수)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제변수	실업률	시도별 실업률	통계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청
	여성 대학 진학률	여성 대학 진학률	교육통계연보
	ln(사교육비 지출)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

조혼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모두 적합(Prob) $F=0.000$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 내 분산(within)의 설명력은 〈모형 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모형 1-3〉에서는 지역 주택 매매 가격과 지역 주택 전세 가격 간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므로 매매 가격 대신 전세가 비율을 적용하였다.

〈모형 1-1〉과 〈모형 1-2〉에서 지역 주택 매매 가격과 지역 주택 전세 가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혼인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택 매매 가격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동시에 포함한 〈모형 1-3〉에서도 일관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혼가구의 경우 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의 전세 가격 또는 전세가 비

율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형인 60㎡미만 주택 비율은 조혼인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 공급을 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도 단위에서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조혼인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신혼 가구가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재고 수준이 조혼인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임대나 장기 전세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준도 조혼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5〉 주택이 조혼인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고정효과 모형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Coef.	Coef.	Coef.
ln_지역 주택 매매 가격	-0.857 *		-1.606 ***
ln_지역 주택 전세 가격		-2.627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0.077 ***
60㎡ 미만 주택 비율	0.142	0.112 *	0.134 ***
공공임대주택 비율(공공)	-0.040	0.004	0.070 ***
실업률	-0.072	-0.066	-0.147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72 **	-0.040 **	0.006
여성 대학 진학률	-0.006	-0.055 ***	-0.042 ***
ln_사교육비 지출액	-0.650	-0.491	-1.266 ***
_cons	17.369	39.597	31.361
sigma_u	1.161	1.577	1.447
sigma_e	0.186	0.142	0.122
rho	0.975	0.992	0.993
R ²			
within	0.3909	0.6445	0.7449
between	0.2527	0.3904	0.2148
overall	0.1799	0.2847	0.1406

* p<0.1, **p<0.05, ***p<0.01

주: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강건성(robustness)을 위해 Robust 옵션을 사용.

합계출산율에 대한 주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지역 주택 매매 가격만 포함한 <모형 2-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지역 주택 전세 가격만 포함한 <모형 2-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보였다.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가 비율을 동시에 포함한 <모형 2-3>에서는 지역 주택 매매 가격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모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즉, 지역의 주택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은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 2-3>의 결과, 중소형 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형 주택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표 6-6> 주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패널확률효과 모형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Coef.	Coef.	Coef.
ln_지역 주택 매매 가격	-0.084		-0.178 **
ln_지역 주택 전세 가격		-0.248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0.011 ***
60㎡ 미만 주택 비율	0.428	0.435	0.028
공공임대주택 비율(공공)	-0.021 **	-0.017 **	-0.007
실업률	-0.001 ***	-0.001 ***	-0.063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03	0.004	0.010 **
여성 대학 진학률	-0.004	-0.009 ***	-0.010 ***
ln_사교육비 지출액	-0.153	0.002	-0.112
_cons	3.172	4.744	4.829
sigma_u	0.087	0.083	0.084
sigma_e	0.045	0.044	0.041
rho	0.788	0.781	0.808
R ²			
within	0.1620	0.2460	0.3415
between	0.7471	0.7609	0.8054
overall	0.6959	0.7199	0.7685

* p<0.1, **p<0.05, ***p<0.01

제2절 개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신혼부부의 주거와 출산 실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및 출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⁸⁾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08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가구 중 20.0%는 무자녀 가구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녀를 포함하여 신혼부부가 계획하는 총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2자녀 출산 계획 가구가 전체의 63.4%로 가장 많았다.

〈표 6-7〉 신혼부부의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

(단위: %, 가구)

현재 자녀 수	가구 비중	계획 자녀 수	가구 비중
0명	20.0	0명	2.2
1명	53.6	1명	24.6
2명	25.1	2명	63.4
3명 이상	1.3	3명 이상	9.8
합계(n)	100.0(2,677)	합계(n)	100.0(2,677)
평균	1.08명	평균	1.82명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월평균 주거 비용은 보증금 없는 월세가 62만 9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그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40만 4천 원, 자가 25만 원, 전세 24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부담은 자가인 경우 35만 6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 자금 마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거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종합한 총주거비를 고려하면, 보증금 없는 월세가 월 78만 1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자가(60만

8) 동 조사는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총 74일)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6천 원), 보증금 있는 월세(56만 1천 원), 전세(47만 2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월평균 주거 비용

(단위: 만 원)

주택 점유형태	주거 생활비	대출 상환금	주거 생활비+대출 상환금
자가	24.97	35.63	60.60
전세	24.25	22.89	47.15
보증금 있는 월세	40.35	15.78	56.13
보증금 없는 월세	62.86	15.29	78.14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의 자녀 수에 따른 평균 주거 비용을 살펴보면, 3명 이상인 경우 월평균 54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무자녀(52만 4천 원), 2명(51만 2천 원), 1명(50만 5천 원) 순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주거비 부담에 대한 차이는 미미하다.

〈표 6-9〉 신혼부부의 자녀 수별 월평균 주거 비용

(단위: 만 원)

자녀 수	주거 생활비	대출 상환금	주거 생활비+대출 상환금
0명	25.39	27.01	52.40
1명	26.55	23.94	50.48
2명	27.25	23.96	51.21
3명 이상	34.31	19.83	54.14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신혼부부의 현재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 현재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의 평균이 각각 1.20명, 1.86명으로 차가에 비해 각각 0.17명, 0.06명 높게 나타났다. 자가의 경

우 전세나 월세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높아 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 불안정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월세인 경우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가 자가나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계층이 주택 점유 형태 이외 요인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아 출산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0〉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별 현재 자녀 수 및 계획 자녀 수(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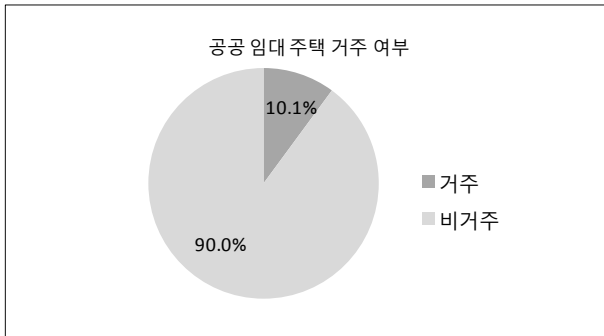
(단위: 명)

	자가	차가			
		전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현재 자녀 수	1.20	1.03	1.01	1.18	1.43
계획 자녀 수	1.86	1.80	1.78	1.88	2.14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 실질적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민간 주택 거주자에 비해 낮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간 현재의 거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도 클 것이다.

〔그림 6-2〕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주택의 규모와 노후화 정도는 주거 환경의 물리적 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주택의 노후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적절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산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규모가 15평 이하이고 건축 연도가 25년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3.9%로 낮게 나타났고, 신혼부부 가구의 83.6%는 15평 이하의 소규모이지만 노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5년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1〉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단위: %, 가구)

	주택 노후 정도 ²⁾		합계 (n=2,677)
	25년 미만	25년 이상	
주택규모 ¹⁾			
전체	95.6	4.4	100.0
15평 이하	83.6	3.9	87.5
15평 초과	12.0	0.6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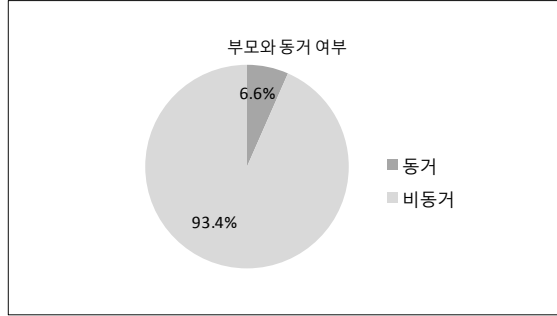
주: 1) 주택 규모의 경우, 소형 아파트의 전형적인 평면인 15평을 기준(공급 면적 기준 50㎡, 전용 면적 기준 35㎡)으로 설정하였다. 15평의 경우, 3인 가구(부부+자녀1)의 최소 주거 면적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 주택 노후도 측정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건축 연도가 20~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노후화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주택 노후도 기준을 25년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부모의 집 등에서 무상으로 거주 시, 주거 안정성 및 동거 부모로부터의 자녀 양육 도움 등에 의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는 전체의 6.6%(176가구)로 나타났다.

[그림 6-3] 조사 대상 신혼부부 가구의 부모 동거 여부



자료: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2.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주거 환경이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를 자녀 수로 하고 주거비 부담과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모형이다. 이 모형의 경우 설명변수인 주택 및 가구 특성들이 현재 시점인 반면, 종속변수인 자녀 수는 과거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 값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 관계는 인과관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을 통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녀 수와 주택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Y = \alpha + \beta_1 X_c + \beta_2 X_h + \beta_3 Z + \epsilon \dots\dots\dots (6-1)$$

다중 회귀 모형으로 Y 는 가구의 현재 자녀 수, X_c 는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X_h 는 주택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Z 는 신혼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두 번째 모형은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연기’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짓 모형이다. 이 모형은 현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환경이 신혼부부

가구의 미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택 관련 변수와 출산 및 출산 의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속변수인 ‘출산 연기’는 신혼부부 가구 조사에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는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이변량(binary) 명목변수로 설정한 것이다. 즉,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설명변수로 주거비 부담, 주택 특성, 주택 규모 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우선 주거비 부담 변수는 주거 생활비, 대출 상환금 그리고 주거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합한 금액을 모형에 각각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인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 생활비는 월세, 주거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월평균 지출액으로 조사되었다. 대출 상환금은 금융 기관 및 지인/친인척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매월 상환 원금과 상환 이자를 합한 값이다. 전체 주거비 부담은 주거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을 합한 값으로 월평균 지출액이다. 대출 상환금을 주거비 부담에 포함한 이유는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주택 및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도 주거비 부담에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 더 적절하므로, 주거비의 월평균 지출액을 월평균 가구 소득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모형에 적용하였다.

주택 특성 변수로 주택 점유 형태(자가=1)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공공임대주택 거주=1)를 모형에 각각 포함하였다. 자가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현재의 거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규모로 소형 주택 여

부(15평 이하=1)와 주택 노후도를 나타내는 주택 건축 연도(25년 이상=1)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는 주택 규모가 너무 작거나 노후도가 심하여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통제변수로는 출산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 결혼 지속 기간, 배우자 연령, 맞벌이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포함한 출산 연기 결정 모형은 식 (6-2)와 같다.

$$\ln\left(\frac{p(y=1)}{1-p(y=1)}\right) = \alpha + \beta_1 X_c + \beta_2 X_h + \beta_3 Z \dots\dots\dots (6-2)$$

이항로짓 모형으로 종속변수인 y 는 출산 연기 여부를 나타내며, X_c 는 주거비 부담 관련 변수, X_h 는 주택 특성 변수, Z 는 가구 특성을 나타낸다.

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개별 가구의 출산 행위의 결과로서 자녀 수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모두 적합(Prob > F=0.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과 자녀 수 간 관계는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주거 생활비와 전체 주거비(주거 생활비+대출 상환금)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거 면적이 필요하여 주거 생활비 및 주거비가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가와 공공임대주택에의 거주도 자녀 수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 임차 가구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여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의 거주도 장기간의 임대 조건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 조건 중 다자녀 우선

공급 등의 규정으로 이미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나타난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의 거주가 반드시 자녀 수를 늘린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분양 면적 기준 15평 이하 여부로 판단한 주거 규모는 자녀 수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주택 규모 또는 방의 개수가 가족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택의 노후화는 자녀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표 6-12〉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환경이 자녀 수에 미친 영향: 다중 회귀 모형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Coef.	Coef.	Coef.
주거 생활비(1) 비율	0.209 ***		
대출 상환금(2) 비율		0.029	
(1)+(2) 비율			0.049 *
주택 점유 형태(기준=차가)			
자가	0.093 ***	0.088 ***	0.088 ***
공공임대주택(기준=비거주)			
거주	0.084 **	0.093 **	0.091 **
주택 규모(기준=15평 초과)			
15평 이하	-0.067 *	-0.062 *	-0.063 *
주택 노후도(기준=25년 미만)			
25년 이상	-0.008	-0.014	-0.014
부모 동거 여부(기준=비동거)			
동거	0.080 *	0.078 *	0.079 *
결혼 지속 기간	0.239 ***	0.240 ***	0.240 ***
배우자 연령	-0.004	-0.004	-0.004
맞벌이 여부(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385 ***	-0.391 ***	-0.389 ***
지역(기준=기타 지역)			
수도권 및 광역	-0.031	-0.032	-0.032
_cons	0.686	0.709	0.701
Number of obs	2,676	2,676	2,676
F(10, 2665)	126.37	125.42	125.80
Prob > F	0.000	0.000	0.000
R ²	0.3416	0.3402	0.3406
Root MSE	0.5752	0.5758	0.5756

*p<0.1, **p<0.05, ***p<0.01

종합하면, 주거비 부담 중 특히 주거 생활비의 비율, 주택 점유 형태, 공공임대주택 거주, 소형 주택 거주 등이 자녀 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결정 및 행위와 관련해서 주거비 부담, 주거 안정성, 적절한 주거 환경 등이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나.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거비 부담(대출 상환금, 주거 생활비)은 추가 출산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 형태는 추가 출산 연기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자가 가구가 추가 출산을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6-13 참조).

요컨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주택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출산을 미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노후도가 추가 출산 연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모형을 현재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6-14 참조). 그 결과, 주거비 부담은 현재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추가)출산을 연기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은 무자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커, 첫 자녀 출산 결정에 주거비 부담이 중요한 고려 사항을 짐작케 해 준다. 주거 점유 형태는 유자녀 집단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가와 같이 주거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녀 출산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택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신혼부부 가구가 (추가) 출산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주택 규모가 너무 작은 경

우에는 첫 자녀 출산과 추가적인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주택 노후도는 두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종합하면,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 안정성, 적정한 주거 규모 등이 출산 관련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3〉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연기 결정에 미친 영향: 로지스틱 회귀 모형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
	Coef.	Coef.	Coef.
주거 생활비(1) 비율	0.220		
대출 상환금(2) 비율		0.606 **	
(1)+(2) 비율			0.338 **
주택 점유 형태(기준=차가)			
자가	-0.259 **	-0.295 **	-0.276 **
공공임대주택(기준=비거주)			
거주	0.007	0.015	0.003
주택 규모(기준=15평 초과)			
15평 이하	0.411 ***	0.418 ***	0.409 ***
주택 노후도(기준=25년 미만)			
25년 이상	0.260	0.224	0.234
부모 동거 여부(기준=비동거)			
동거	0.080	0.093	0.092
자녀 여부(기준=없음)			
있음	0.655 ***	0.646 ***	0.643 ***
결혼 지속 기간	-0.284 ***	-0.281 ***	-0.283 ***
배우자 나이	-0.084 ***	-0.084 ***	-0.084 ***
맞벌이 여부(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382 ***	0.376 ***	0.384 ***
지역(기준=기타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0.215 *	0.212 *	0.218 *
_cons	1.365	1.357	1.334
Log likelihood	-1405.248	-1400.675	-1401.856
Number of obs	2,676	2,676	2,676
LR chi2(10)	179.19	188.33	185.97
Prob > chi ²	0.000	0.000	0.000
Pseudo R ²	0.060	0.063	0.062

* p<0.1, ** p<0.05, *** p<0.01

〈표 6-14〉 신혼부부의 자녀 유무별 주거 환경이 추가 출산 연기 결정에 미친 영향:
로지스틱 회귀 모형

	(자녀 없음)	(자녀 있음)
	모형 4-4	모형 4-5
	Coef.	Coef.
(주거 생활비+대출 상환금) 비율	3.482 ***	0.264 **
주택 점유 형태(기준=차가)		
자가	-0.409	-0.245 *
공공임대주택(기준=비거주)		
거주	-0.336	0.066
주택 규모(기준=15평 초과)		
15평 이하	0.720 **	0.406 ***
주택 노후도(기준=25년 미만)		
25년 이상	0.695	0.153
부모 동거 여부(기준=비동거)		
동거	0.222	0.090
결혼 지속 기간	-0.152	-0.305 ***
배우자 나이	-0.190 ***	-0.063 ***
맞벌이 여부(기준=비맞벌이)		
맞벌이	0.815 ***	0.302 ***
지역(기준=기타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0.047	0.250 *
_cons	3.734	1.393
Log likelihood	-253.797	-1133.342
Number of obs	534	2142
LR chi ² (10)	75.93	139.06
Prob > chi ²	0.000	0.000
Pseudo R ²	0.130	0.058

p<0.1, ** p<0.05, *** p<0.01

제3절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 거시-미시 연계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 증식이 쉽게 이루어지고, 전세나 월세 등의 경우에는 잦은 이동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주거 관련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주택 소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주택 소유가 어려울 경우, 주택 마련이 가능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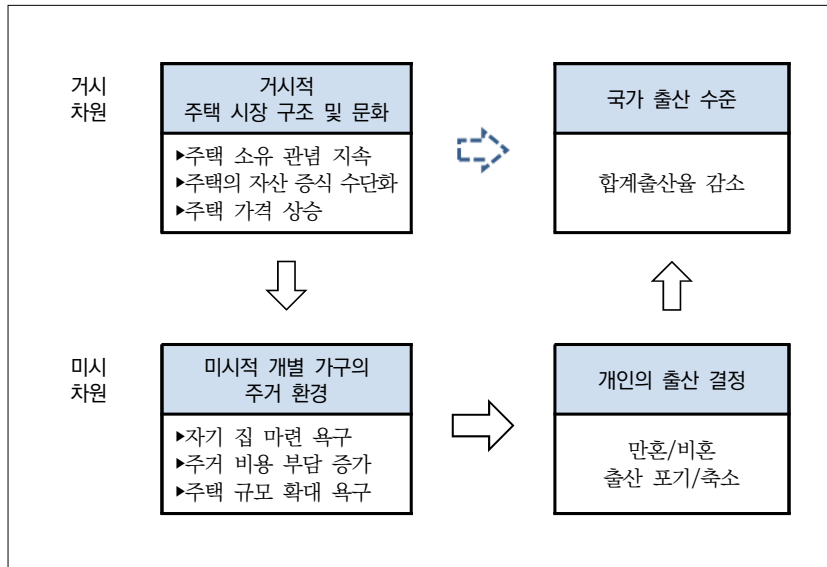
게 된다. 특히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은 비용 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미혼 인구들로 하여금 결혼 선택을 지연시키게 된다. 한편, 주택 소유의 문화는 결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가구의 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경우,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출산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부부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증식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고, 이로 인해 단축된 가임 기간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주택 마련 비용의 상승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주택 소유 문화가 더해져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예금 금리 하락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증가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 월세 증가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잦은 이주, 월 주거비 지출 부담 증가 등 주거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아울러 전세나 월세 비용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주택 수요자들은 본인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또 다른 어려움(예로 직장-주택 간 원거리, 노후화된 주택 등)을 만들어 내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증가시켜 개인들의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이삼식, 최효진, 2012).

가구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규모 역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개 가구의 규모가 커지면 주택에 대한 변화 욕구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으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결혼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합계출산율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개별 가구들도 공공 임대주택 거주를 이유로 자녀 수를 증가시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주택의 소유 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위한 초기 신흥집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자가를 선호하고, 그러한 이유로 자가를 마련하기 전까지 희망하는 자녀 수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추가 출산 시기와 자기 집 마련 시기가 겹치면서 두 욕구 간 갈등이 유발되고, 그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마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6-4] 주택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거시-미시 영향 관계



제 7 장

보건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건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인의 보건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보건과 출산 간 관계 :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건과 출산 간 관계

1. 생식건강 환경 변화

생식건강이란 생식 체계(reproductive system)와 그 기능 및 과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질병이나 쇠약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되며, 이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원하는 경우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짐을 의미한다(UN, 1995; 이삼식, 조남훈, 2000, p.108). 이러한 생식 보전은 여성들로 하여금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케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의미한다(UN, 1995; 이삼식, 조남훈, 2000, p.108).

생식건강의 안녕은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습관, 건강 관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강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생식건강의 지표는 청소년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청소년기와 가임기 인구의 생식건강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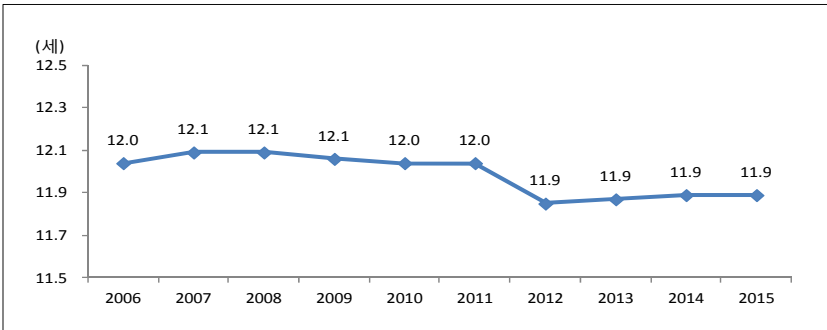
가. 청소년 성 활동⁹⁾

여학생의 평균 첫 월경 시작 연령은 2006년 12.04세(초등학교 6학년

9) 청소년 성 활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2005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때 고등학교 3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이 포함된 2006년부터의 조사와 현황 비교 시 차이가 발생되어 본 분석에서는 2005년은 제외하였다.

초)에서 2007년 12.09세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11.89세(초등학교 5학년 말)로 나타났다.

〔그림 7-1〕 여학생의 첫 월경 시작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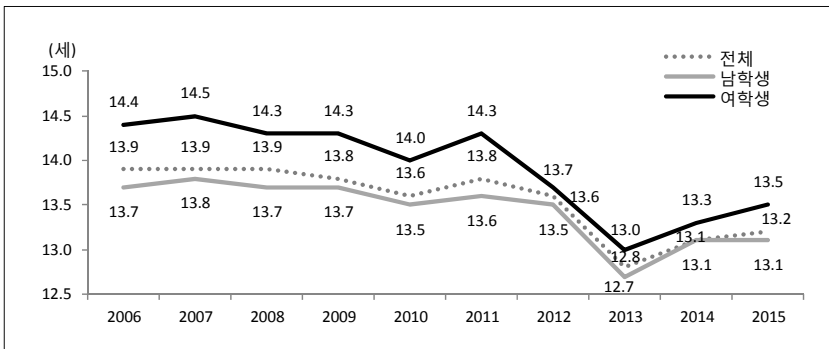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2006).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제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4차(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9).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2006년 평균 13.9세(중학교 1학년 후반)였던 첫 성관계 시작 연령은 2010년 13.6세(중학교 1학년 중반), 그리고 2015년 13.2세(중학교 1학년 초반)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2012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남학생의 첫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이 여학

생에 비해 0.5세 이상 낮았으나, 이후에는 그 차이가 좁혀져 2015년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의 첫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큰 차이가 없다.

[그림 7-2] 남녀 학생의 첫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2006).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제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4차(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9).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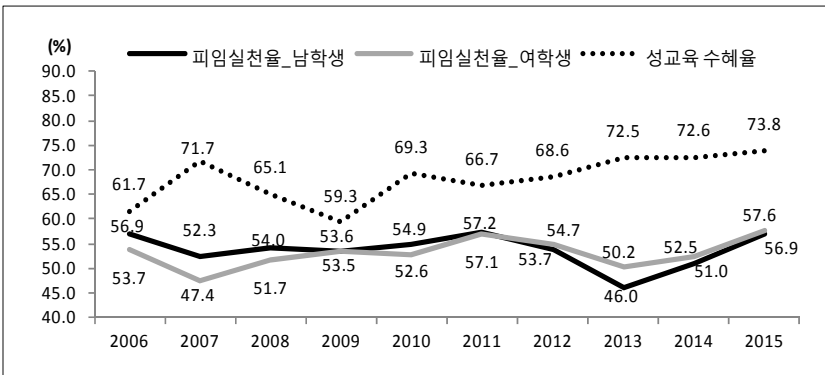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임 실천율은 2006~2015년 기간 동안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 모두 거의 절반 정도는 항상 혹은 가끔씩이라도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피임 실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성교육 수혜율은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73.8%까지 증가하였다. 성교육의 내실 정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학생들의 4분의 1 이상은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 7-3]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 및 성교육 수혜율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2006).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제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4차(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9).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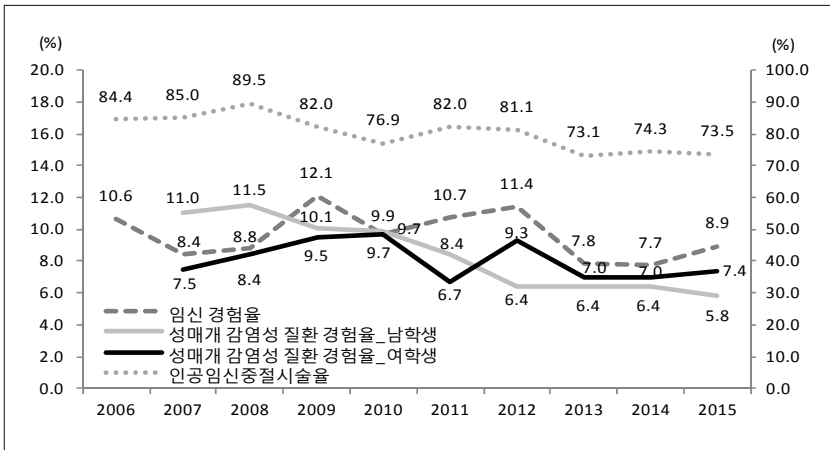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성관계 경험자 중 여학생의 임신 경험률은 2006~2015년 기간 동안 8~1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의 70~80%는 인공

임신 중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생식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시술 경험률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7-4] 성관계 경험자 중 여학생의 임신 경험률 및 인공임신중절 시술률, 남녀 학생의 성 매개 감염성 질환 경험률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2006).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제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4차(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09).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분석.

성관계 경험자 중 6~10% 정도는 성 매개 감염성 질환¹¹⁾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 활동에 따른 혼전 임신(Pre-conception)과 그에 따른 안전하지 않은(unsafe) 인공임신중절 시술 등은 생식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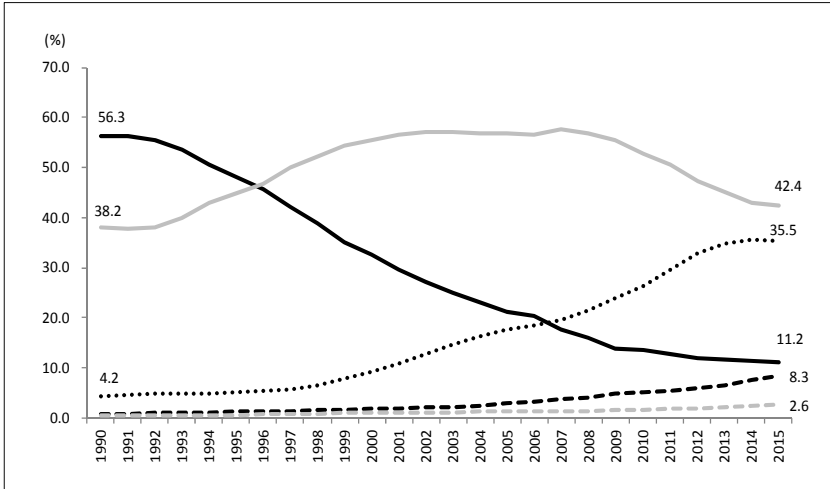
나. 만혼화

결혼(초혼) 연령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을 기준으로 25세 이전에 초혼한 비율은 1990년 56.3%에서 2015년 11.2%로 낮아졌으며, 25~29세의 경우 그 비율은 1990년 38.2%에서 2007년 57.6%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년 42.4%로 나타났다. 30~34세에서의 초혼 비율은 1990년 4.2%에서 2014년 35.6%까지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35.5%로 나타났다. 한편, 35~39세에서의 초혼 비율은 1990년 0.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에는 8.3%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에서 초혼한 비율은 1990년 0.5%에서 2015년 2.6%로 높아졌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아주 낮다. 종합하면 초혼 연령은 20대 이하에서 30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최근에는 30대 후반으로 옮겨 가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15년 30.0세로 5.2세가 증가하였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동 기간에 27.8세에서 32.6세로 4.8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성 매개 감염성 질환에는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성기사마귀, 요도염, 골반염, HIV 감염, 에이즈 등이 포함됨.

[그림 7-5] 25세 이전에 초혼한 비율 추이, 여성 기준, 199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혼인, <http://kosis.kr>에서 2016. 8. 24. 인출.

〈표 7-1〉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단위: 세)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남편	27.8	28.4	29.3	30.9	31.8	32.6
아내	24.8	25.3	26.5	27.7	28.9	30.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혼인, <http://kosis.kr>에서 2016. 8. 24. 인출.

다. 만산화

만혼화의 영향으로 산모의 출산 시 연령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모의 출산 시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는 1990년 1.4%에서 2015년에 0.5%로 낮아졌다. 20~24세 비중은 동 기간 26.6%에서 4.7% 그리고 25~29세 비중은 54.1%에서 21.6%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10대 및 20대와 달리, 30대 이상의 비중은 매우 가파르게 높아졌다. 30~34세 비중은

1990년 15.4%에서 2015년 49.3%, 35~39세 비중은 2.1%에서 21.0%로 각각 상승하였다. 40세 이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지난 25년 동안 0.3%에서 2.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산모의 출산 시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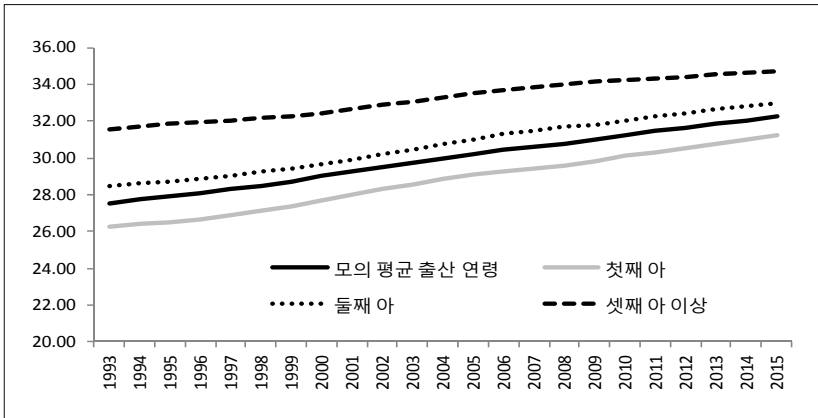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세 미만	1.4	1.0	0.7	0.7	0.6	0.5
20~24세	26.6	19.2	11.7	7.5	5.2	4.7
25~29세	54.1	54.2	51.7	40.2	31.3	21.6
30~34세	15.4	20.8	28.8	40.8	45.6	49.3
35~39세	2.1	4.2	5.8	9.3	15.1	21.0
40세 이상	0.3	0.5	0.8	1.3	2.0	2.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출생. <http://kosis.kr>에서 2016. 12. 20. 인출.

산모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1993년 27.6세였으나 2004년에 30.0세로 30대로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32.2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3~2015년 기간 동안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4.7세가 증가한 것이다. 출산 순위별로 구분해 보면, 모든 순위에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아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15년 31.2세로 5.0세가 증가하였다. 둘째아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도 동기간 28.5세에서 33.0세로 4.5세가 증가하였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31.6세에서 34.7세로 3.2세가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출산 순위가 낮을수록 산모의 평균 연령이 더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혼화 경향으로 첫째아 출산 시 평균 연령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고연령임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추가 출산을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7-6] 출산 순위별 산모의 출산 시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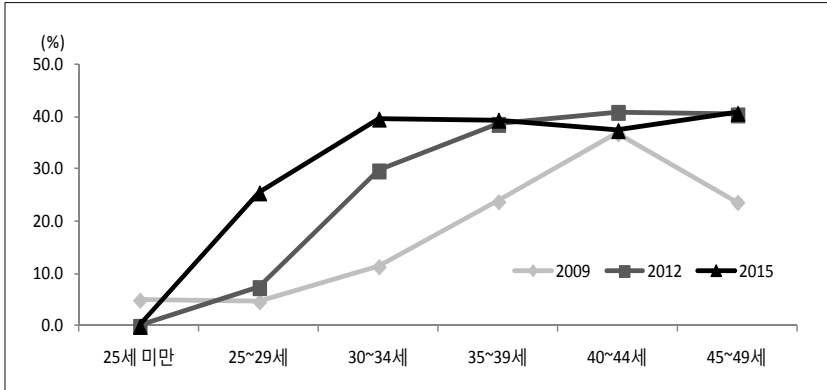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출생. <http://kosis.kr>에서 2016. 12. 20. 인출.

2. 생식건강 문제와 출산

가. 임신·출산 관련 질환

난임(subfertility)은 임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난임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연령, 건강 생활 습관 및 생식건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혼 여성 중 난임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 층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30세 이상에서는 40%에 근접하고 있다. 2009년도와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실제 임신·출산 적령기에 있는 25~39세 기혼 여성의 난임 진단 및 치료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6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이 시작되고, 그 이후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젊은 층에서 난임 진단 및 치료율이 상승한 것은 이 연령대로 진입하는 인구들의 생식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7-7] 기혼 여성 난임 진단 비율(2009, 2012, 2015)



주: 2009년은 불임 진단 또는 불임 치료를 받은 경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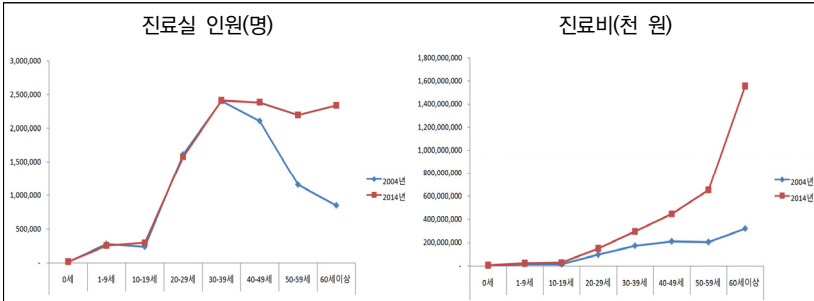
연령대별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살펴보면, 비노생식기계 질환¹²⁾의 진료실 인원은 20~40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30대에서 가장 많다. 2004년 대비 2014년 진료실 인원은 30대까지 비슷하다가 40대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대비 2014년 진료비는 20대부터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임신·출산 및 산욕¹³⁾과 관련한 진료실 인원은 최근 20대에서 감소한 반면, 3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과 2014년간 연령별 진료비를 비교하면, 30대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12)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증, 여성생식기 탈출, 난소·난관 및 광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월경 장애,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 전후 장애, 여성 불임증, 기타 비노생식기계의 장애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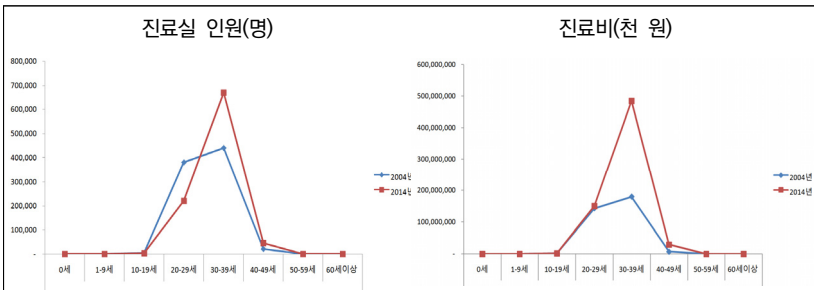
13)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임신·출산 및 산욕의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및 분만 전 출혈, 난산, 분만 후 출혈, 기타 임신·분만의 합병증 등이 포함된다.

[그림 7-8] 연령별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4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통계.

[그림 7-9] 연령별 임신·출산 및 산욕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4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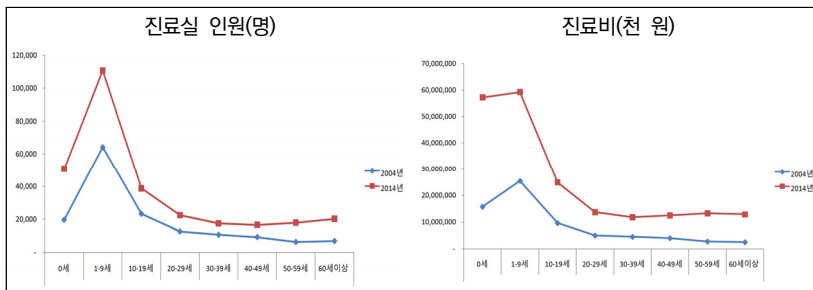
주산기¹⁴⁾에 기원한 특정 병태¹⁵⁾는 태아기 때 혹은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여러 병태를 의미하는 만큼 연령은 0세에 한정된다. 진료실

- 14)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의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 직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보통 의미한다.
- 15) 모성 요인과 임신·출산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는 태아 및 신생아, 태아 발육 지연, 태아 영양실조와 단기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 출산외상,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질식,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성 질환, 출생 전후기에 특이한 기타 감염, 태아 및 신생아의 용혈성 질환, 기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병태 등이 포함된다.

인원은 2004년 147,435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80,230명까지 도달하였다. 진료비는 2004년 688억 7천만 원에서 2014년 2,695억 6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도 46만 7천 원에서 149만 6천 원까지 증가하였다.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¹⁶⁾과 관련해서는 1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진료실 인원이 가장 많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진료비 역시 이를 명확히 보여 주는데, 특히 0세 때의 진료실 인원은 적었지만 진료비는 가장 높아, 선천성 이상 등에 따른 진료비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10] 연령별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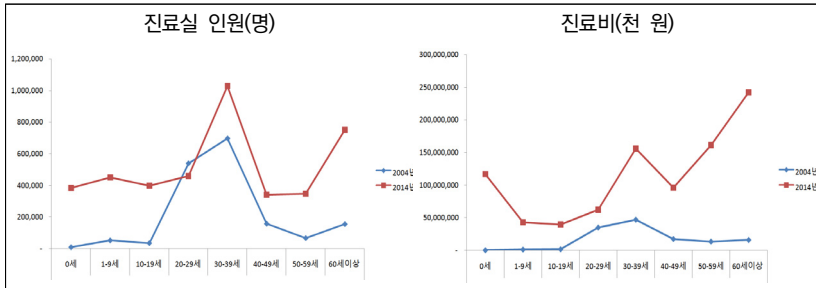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4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통계.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¹⁷⁾과 관련해서는 2004년 대비 2014년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젊은 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16) 이분척추증, 기타 신경계의 선천성 기형, 순환기계의 선천성 기형, 구순 및 구개열, 기타 소화기계의 선천성 기형, 기타 비뇨생식기계의 기형, 고관절의 선천성 변형 등이 포함된다.
17) 피임 관리, 출산 전 선별 검사 및 기타 임신의 관리, 분만 후 간호 및 검사, 출산 장소에 따른 출생영양 등이 포함됨.

[그림 7-11] 연령별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진료실 인원 및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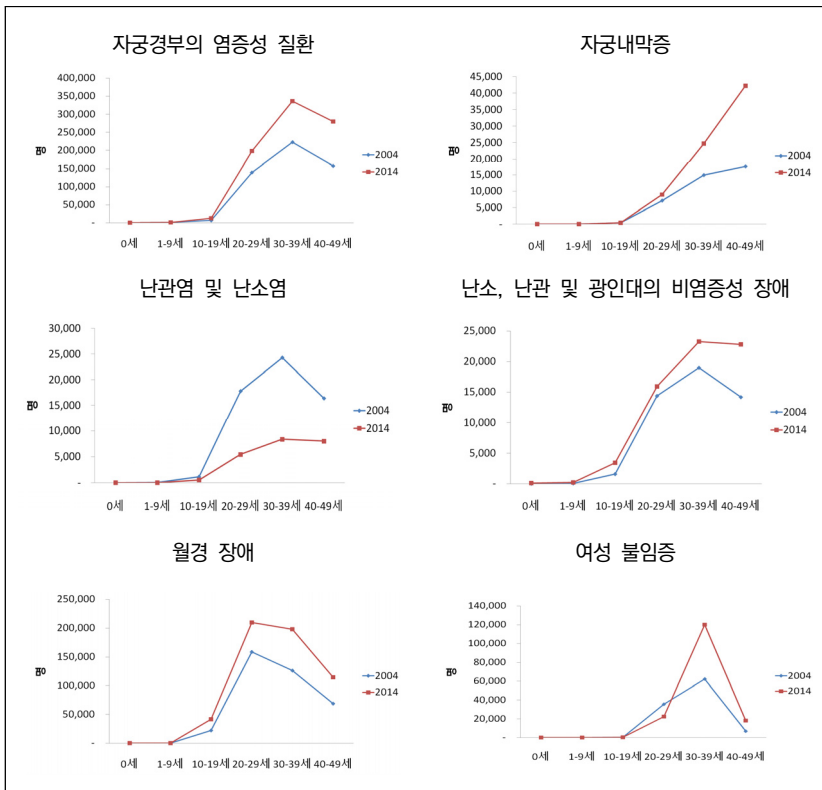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4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통계.

비뇨 생식기계 질환 내 건강한 임신과 출산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질환, 즉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내막증, 난관염 및 난소염, 난소, 난관 및 광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월경 장애, 여성 불임증과 관련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월경 장애는 20대에서 그리고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40대에서 진료실 인원이 가장 많았다. 2004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질환에서 진료실 인원이 증가하였다. 요컨대 난임, 건강한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질환들은 여전히 30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나, 기존에 낮았던 10~20대에서 늘어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대상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난소, 난관 및 광인대의 비염증성 장애는 20대, 월경 장애는 10대에서부터 진료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종합하면 개인의 임신 및 출산 (추가)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전 가임기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흡연과 음주, 신체 활동 및 영양, 비만 등의 건강 생활 습관, 생리 질환, 성 매개 질환 등 생식건강의 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실 이용 연령대의 경우 과거 30대 이

상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20대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 저연령층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 관리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전 가임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7-12] 연령별 진료실 인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4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2014 건강보험통계.

나. 임신 소모

임신 소모는 임신을 하였으나 자연유산, 사산 또는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 정상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⁸⁾ 임신 소모는 해당 임신의 소모를 의미함과 동시에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후 출산 의향이나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임신 소모 실태를 살펴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총 임신 횟수와 정상 출생 횟수는 2012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에 다시 반등하고 있으며, 임신 소모 역시 2000년 0.92회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0.48회로 거의 50% 정도 감소하였다. 임신 소모는 2015년에 0.52회로 소폭 증가하였다. 임신 소모율¹⁹⁾은 2000년 34%에서 2006년 29%, 2012년 22.4%, 2015년 22.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총 임신 중 20% 이상은 사산이나 자연유산 혹은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소모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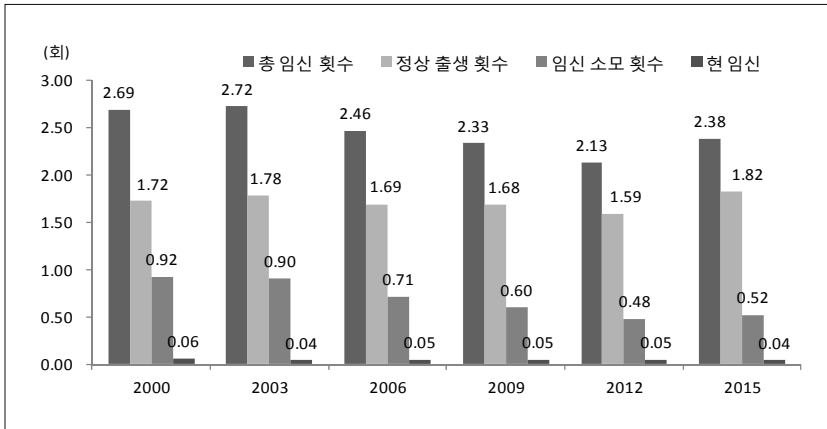
총 임신 횟수와 정상 출생 횟수는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져 연령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소모 횟수는 오히려 30~34세까지는 감소하다가, 35세 이상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 임신소모율도 24세 이하는 24.4%였으나, 25~29세는 20.7%, 30~34세는 19.7% 그리고 35세 이상은 37.1%를 보였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35세 이상은 그 이하의 연령군에 비해 사산이나 자연유산의 원인이 되는 (고)연령이 영향을

18) 합계출산율을 포함한 출산율을 측정하는 데 적용되는 출생아 수(분자)는 인구학적으로 모체에서 분리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호흡과 심장 박동을 하고 있는 신생아를 의미하므로, 유산이나 사산 등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 임신소모율은 '해당 연도의 임신소모 횟수×100/총 임신 횟수'로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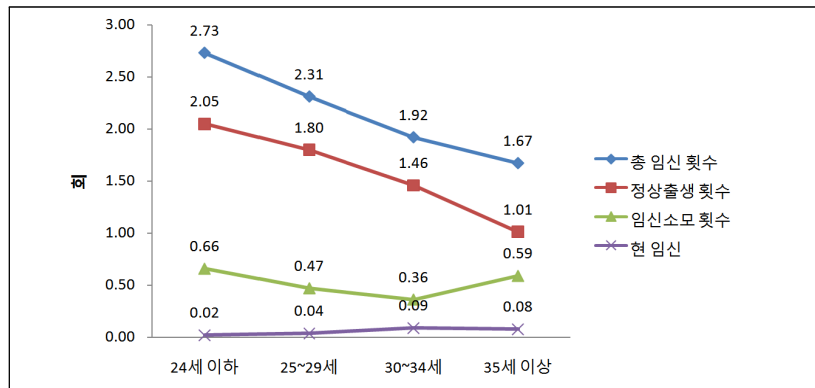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3] 연도별 기혼 여성의 임신 소모 횟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7-14] 기혼 여성(15~49세)의 초혼 연령별 임신 소모 횟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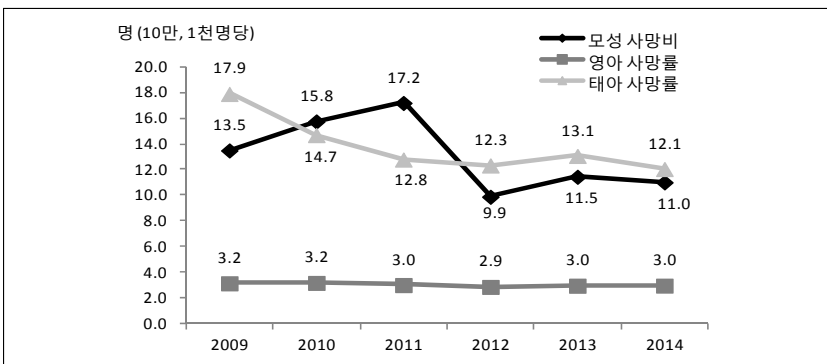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 모성 및 태아 사망

산모가 임신, 분만 및 출산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와 임신 중에 있는 태아가 사망할 경우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모성 사망비나 태아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성 사망비는 2011년 출생아 10만 명당 17.2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4년에는 11.1명으로 나타났다. 2009~2014년 기간 동안 모성 사망자(361명)의 주된 사망 원인은 양수 색전증(14.4%),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순환계 질환(12.5%), 산과적 피떡 색전증(9.4%), 기타 자궁 무력(8.0%), 기타 분만 직후 출혈(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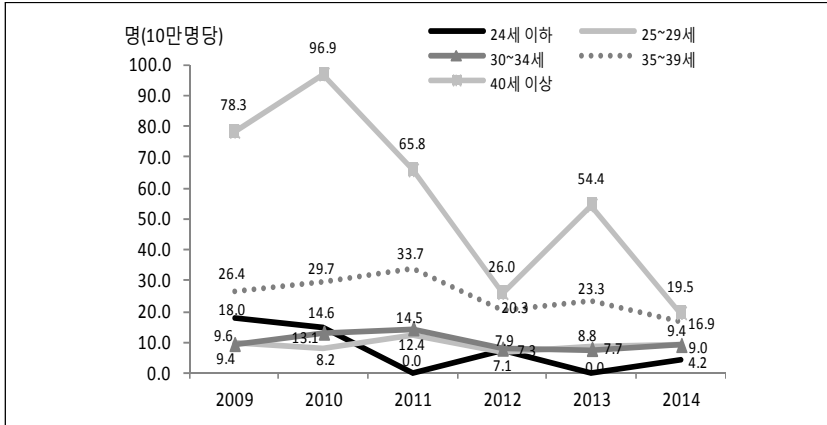
모성 사망비는 최근으로 올수록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도에서 산모 연령에 비례하여 모성 사망비는 높아진다. 특히,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모성 사망비가 크게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모성 사망자는 25세 미만 6명, 25~29세 51명, 30~34세 82명, 35세 이상 96명 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7-15] 모성 사망비 및 태아 사망률 추이



자료: [그림 7-16] 참조.

[그림 7-16] 산모 연령별 모성 사망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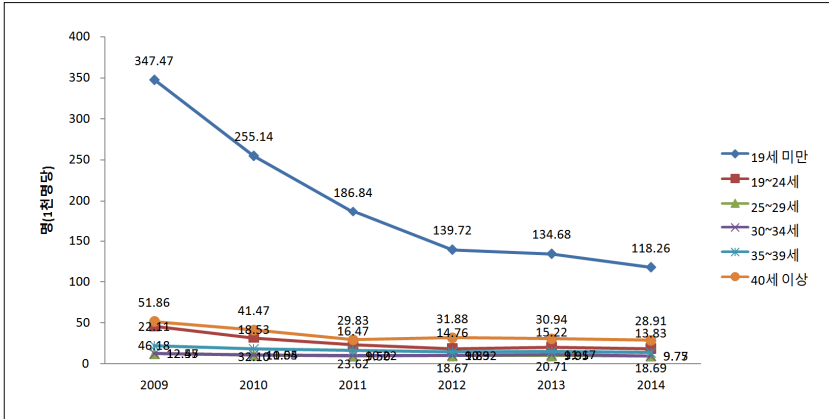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0). 2009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1a). 2010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2). 2011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3a). 2012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4). 2013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5a). 2014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태아 사망률은 2009년 출생아 1,000명당 17.9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태아 사망자도 2009년 8,109명에서 2014년 5,31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태아 사망자의 95.2%는 임신주수가 37주 미만의 미숙아였다. 태아 사망자의 사망 원인으로는 86.6%가 ‘상세 불명 원인의 태아 사망(P95)’으로 나타났다.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숙아 출산율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의 저연령층을 제외하면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태아사망률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태아 사망자 모의 임신 직전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살펴보면, 10.5%가 저체중(18.5 미만), 15.2%는 비만(2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7-17] 산모 연령별 태아 사망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0). 2009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1a). 2010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2). 2011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3a). 2012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4). 2013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5a). 2014 사망원인보완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개인의 보건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의 생식건강 수준과 출생아 수 간 관계

가. 분석틀

여성의 생식건강 상태 또는 수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원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생식건강 관련 경험이 출산 결정 즉, 총출생아 수(children ever born)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진단하기 위하여 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여성 개인의 생식건강과 관련한 독립 변수로는 앞서 거시적 차원에서 의 생식건강 관련 환경으로 논의하였던 초산 연령, 난임 경험 유무, 자연유산 및 사산 경험 유무, 첫 번째 임신의 인공 중절 여부 등이 해당된다. 초산 연령의 경우 첫째아 출산을 늦게 할수록 가임력이 떨어져 이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속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난임 경험 여부는 더미(dummy)변수화하였다. 생애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임신이 자연유산(spontaneous abortion) 또는 사산(stillbirth)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더미변수화하였다. 청소년기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첫 번째 임신의 결과가 인공임신중절이었는지 여부를 더미변수화하였다. 이는 첫 임신을 인공 중절한 경우 생식 건강 수준이 악화되어 이후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한 것이다(이삼식, 1998).

통제변수로서 기혼 여성의 거주지는 보건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가임 기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혼 여성의 연령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법률혼 내에서 거의 모든 출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초혼연령이 늦어질수록 가임 기간은 단축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초혼 연령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라 생식건강에 관한 정보에 차이가 있고 자녀가치관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교육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가구 소득 수준은 자녀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취업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비취업 여성과 출산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취업 여부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표 7-3〉 여성의 생식건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모형에 포함된 변수

	변수명	기준
종속변수	출생아 수	총 자녀 수(직접 출생한 자녀에 한정)
	추가 출산 의향	의향 있음(기준 집단), 의향 없음
통제변수	거주지	대도시(기준 집단), 중소 도시, 농어촌
	만 연령	여성의 만 연령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	고졸 이하(기준 집단), 대졸 이상
	월평균 가구 소득	만 원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	취업(기준 집단), 비취업
	초혼 연령	세
독립변수	초산 연령	세
	현재 배우자와의 난임 경험 여부	난임 경험(기준 집단) 없음
	유산산 경험	있음(기준 집단), 없음(기준 집단)
	첫 번째 임신 결과	인공임신중절(기준 집단), 없음

나. 분석 결과

기혼 여성(15~49세)의 생식건강이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혼 여성의 초산 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생아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늦어진 출산으로 인하여 가임 능력이 떨어진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난임을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출생아 수가 적었다. 이는 개인의 난임 경험이 원하는 수의 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연유산 또는 사산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약하나 마 출생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사산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산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첫 번째 임신이 인공 중절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생아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이루어진 첫 임신을 인공 중절을 할 경우 여성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져, 가임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4〉 기혼 여성(15~49세)의 생식건강이 출생아 수(CEB)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¹⁾		모형 2 ²⁾		모형 3 ³⁾		모형 4 ⁴⁾	
	B	S.E.	B	S.E.	B	S.E.	B	S.E.
(상수)	2.361	0.063 ***	2.124	0.069 ***	2.173	0.066 ***	2.324	0.065 ***
거주지(대도시)								
중소 도시	0.020	0.013	0.028	0.015 *	0.031	0.014 **	0.033	0.014 **
농어촌	0.049	0.018 ***	0.052	0.020 **	0.058	0.019 ***	0.047	0.019 **
만 연령	0.024	0.001 ***	0.040	0.001 ***	0.030	0.001 ***	0.025	0.001 ***
교육 수준(고졸 이하)								
대졸 이상	0.013	0.013	0.017	0.014	0.008	0.014	-0.004	0.013
월평균 가구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취업 여부(비취업)								
취업	-0.050	0.012 ***	-0.095	0.014 ***	-0.042	0.013 ***	-0.039	0.013 ***
초혼 연령	0.030	0.004 ***	-0.071	0.002 ***	-0.059	0.002 ***	-0.056	0.002 ***
초산 연령	-0.081	0.004 ***						
난임 경험(없음)								
있음			-0.456	0.020 ***				
유산(없음)								
1~4회					-0.009	.016		
5회 이상					-0.302	.174 *		
첫 임신 인공 중절(없음)								
경험							-0.180	0.028 ***
n	10,210		10,324		10,502		10,350	
R ²	.167		.269		.169		.146	
Adj.R ²	.167		.269		.169		.145	
F	256.1 ***		474.7 ***		237.9 ***		220.9 ***	

*p<0.1, **p<0.05, ***p<0.01

- 주: 1) 첫째아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난임 경험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임신 경험이 1회 이상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4) 임신 경험이 1회 이상이면서 첫 번째 임신이 완결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 개인의 출산 결정에 대한 생식건강의 영향 경로

가. 분석틀

앞선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식건강 관련 과거 경험이 실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양적 분석 방법의 한계로 실제 개인의 생식건강 관련 과거의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한 그러한 경험이 출산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개인의 생식건강이 어떠한 원인이나 과정을 거쳐 나빠지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임기 기혼 여성(19~44세)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 최근 5년 이내 결혼하여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현재 임신 중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였다. 위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결혼 이후 임신 및 출산 전후에 여성들의 경험이 극심하게 변화하며, 신혼기,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양육기 각 단계별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질적 분석을 위한 면담에서는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인들이어야 한다(Creswell, 2010, p.175)’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단계에 있는 여성을 고루 선정하는 것이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았다. 심층 면접의 대상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20인이다.

〈표 7-5〉 심층 면접 참여자 현황

	면접 형식	연령	결혼 시기	생활 습관	자녀	출산	임신 성공 소요 기간	임신 시도 (무자녀)	가게 수입	근로 구분	학력	(여성 생식건강 관련 중심) 건강 히스토리의 세부 내용
참여자 1	1:1	30	2013	비흡연, 현재 음주, 과체중.	-	-	-	9개월	중상	시간제	대학원 이상	-결혼 후 3년간 임신되지 않음 - '13 무정자증 진단, 배우자 수술 - '13 비배우자 공여, 시험관 시도 - '13 자궁근종 발견 - '14 쌍생아 임신/출산(34주, 조산)
참여자 2	1:1	37	2009	비흡연 과거 음주 정상 체중	2	2014	5년 이상		중	전업 주부	대졸	- '12 자궁근종 발견 - '16 배란 유도제 복용 시작
참여자 3	1:1	32	2014	현재 흡연 현재 음주 고도 비만	-	-	-	48 개월	중	전업 주부	대졸	-18세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단 - '12 인공수정 7회 시도 - '13 난관절제수술 - '13~현재: 시험관 12차 시도

16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면접 형식	연령	결혼 시기	생활 습관	자녀	출산	임신 성공 소요 기간	임신 시도 (무자녀)	가계 수입	근로 구분	학력	(여성 생식건강 관련 중심) 건강 히스토리 세부 내용
참여자 4	1:1	34	2014	과거 흡연 현재 음주 저체중	-	-	-	1개월	중	시간제	대학원 이상	-13세 척추 측만증 -12 자궁기형종 진단 -14 자궁경부암 초기 의심 수술
참여자 5	1:1	34	2013	과거 흡연 현재 음주 저체중	1	2014	6개월 이내		중	전업 주부	대졸	-정상 임신 및 출산
참여자 6	1:1	30	2013	비흡연 현재 음주 정상체중	1	2015	6개월 이내		중	시간제	대졸	-청소년기부터 잦은 생리불순 -12년 뇌종양 수술 -13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단 -15 정상 임신 출산
참여자 7	집단	30	2012	비흡연 과거 음주 정상 체중	1	2016	6개월 이내		중상	전일제	대졸	-정상 임신 및 출산
참여자 8	집단	28	2015	비흡연 비 음주 정상 체중	-	-	6개월 이내		중상	전일제	대졸	-07 다낭성세포증후군 진단 -정상 임신, 출산 예정
참여자 9	집단	28	2015	비흡연 현재음주 정상 체중	-	-	-	16개월	중	전업 주부	대졸	-20대부터 잦은 질염 경험 -15 나팔관조영술, 배란일 맞추기 호 르몬 약 복용 -정상 임신, 출산 예정
참여자 10	집단	35	2010	과거 흡연 과거 음주 정상 체중	1	2015	2~3년 이내		중	시간제	대학원 이상	-05 자궁내막증 수술 -14 시험관시술 1회로 임신/출산 -15 노산염려로 출산 3월 후 시험관 1회 시도 후 임신/출산 예정
참여자 11	집단	39	2012	비흡연 현재 음주 저체중	1	2013	7~12 개월 이내		중하	전업 주부	대졸	-12 임파과다/스트레스 계류유산 -13 저체중아 출산 -14~현재 임신 시도
참여자 12	집단	32	2015	비흡연 현재 음주 과체중	1	2016	6개월 이내		중	전일제	대학원 이상	-정상 임신 및 출산
참여자 13	집단	31	2014	비흡연 과거 음주 저체중	-	-	1~2년 이내		중상	전일제	대졸	-2년여 시도, 임신/출산 예정
참여자 14	집단	36	2015	비흡연 현재 음주 비만	-	-	-	11개월	중하	전일제	대졸	-2015 자궁경부암 이성형종 진단 -현재 임신 시도 중
참여자 15	집단	34	2015	비흡연 과거 음주 과체중	-	-	-	10개월	중하	전업 주부	대졸	-현재 임신 시도 중 -과도 업무로 임신방해 예상-퇴직
참여자 16	집단	30	2013	과거 흡연 과거 음주 과체중	-	-	1~2년 이내		중상	시간제	대졸	-청소년기부터 생리 불순 -결혼 후 신부인과 1.5년, 난임병원 1.5년 -14 난소물혹제거수술 -15 시험관 시도 실패 -16 자연 임신, 출산 예정
참여자 17	집단	29	2013	비흡연 현재 음주 과체중	1	2014	6개월 이내		중상	전업 주부	대졸	-정상 임신 및 출산 -둘째 자녀 임신 계획
참여자 18	집단	34	2012	비흡연 과거 음주 정상 체중	-	-	-	40개월	중하	전업 주부	대졸	-12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단/치료 시작 -배란 유도제,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15 임신 위해 남편 권유로 퇴사

	면접 형식	연령	결혼 시기	생활 습관	자녀	출산	임신 성공 소요 기간	임신 시도 (무자녀)	가계 수입	근로 구분	학력	(여성 생식건강 관련 중심) 건강 히스토리 세부 내용
참여자 19	집단	34	2011	비흡연 비음주 과체중	1	2012	6개월 이내		중	전업 주부	대졸	-정상 임신 및 출산
참여자 20	집단	31	2010	비흡연 과거 음주 정상 체중	1	2012	3~4년 이내		중	전일제	대졸	-'10 첫 자녀 정상 임신, 출산 - '13 둘째임신, 업무과다로 계류유산 - '13 난임치료 시작 - '14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 '16 둘째 자녀 임신, 출산 예정

심층 면접은 면대면 인터뷰(6인)와 포커스그룹 인터뷰(14인)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면서 초반 면접에서 도출된 의미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범주를 중심으로 후반 면접에서 초점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근거 이론 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Strauss and Corbin(1990)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면대면 면담에서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축어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코딩을 시작하였다. 1차 코딩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면접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진술되는지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면접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거쳤다. 그 후에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명명화 단계에서는 본 연구진 2인이 우선 명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한 질적 분석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박사 2인이 축 코딩 및 선택 코딩에 참여하여 자문 및 논의 과정을 함께 하였다.

개방 코딩은 면담에서 드러난 개념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개념들을 비슷한 속성끼리 유사하게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되고

정리되며, 서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축 코딩은 개방 코딩에서 범주화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범주나 하위 범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축 코딩에서는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6가지 범주에 따라 개념들을 분류하게 되는데, 이 6가지 범주들은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중심 현상은 연구의 주된 관심 문제로서 연구 참여자의 관심 속에 있는 주요한 고민이나 문제를 의미한다(최귀순, 2005, p.84). 인과적 조건은 중심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사전의 사건이나 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조건을 의미한다.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한다. 작용/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당면한 상황에서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방식, 전략, 대처 등을 의미한다. 중재 조건은 참여자가 경험하는 현상의 강도를 더 심화 또는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참여자의 대처를 포함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 및 기능은 작용/상호작용들을 거쳐 나타나게 된 변화와 양상의 총체와 도달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은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범주를 선택하고, 이론을 통합시키면서 정교화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핵심 범주를 둘러싼 다른 하위 범주들과의 관계가 잘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 분석 결과

심층 면접 대상자에게 임신 준비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이는 여성 개인이 생애 건강 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임신과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개방 코딩을 통해 아래 <표 7-6>과 같이 55개 하위 범주와 2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7-6> 임신 및 출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범주화

	범주	하위 범주
인과적 조건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부인과 질환 및 이상 부인과 질환 외 신체 건강의 문제 난임 시술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악화
	생식건강 관리 부족	자신의 부인과 질병을 확인/관리하지 못함 산부인과 병원 방문을 미룸
	건강 실천 및 관리 부족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음 음주/ 흡연을 지속함 무리한 다이어트/ 불균형한 영양 섭취
	나이	노산기의 진입
중심 현상	임신의 지연 및 어려움	임신의 어려움을 겪음 임신을 위하여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됨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염려	현재 건강 상태가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걱정 현재 건강 상태가 임신 시 통증/부작용을 일으킬 것에 대한 걱정
	임신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을 느낌 임신이 되지 않아 주변 사람의 눈치를 봄
맥락적 조건	지식의 부족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 여성 생식력을 높이는 건강 태도 실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 음주/흡연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함 연령별 건강 체크 항목 필요 항목을 알지 못함 임신 준비를 위한 생식건강 점검의 필요성을 알지 못함
	제한적인 성교육	피상적인 성교육 내용 피임에 집중된 성교육 초점
	여성 건강에 대한 지지 자원	여성관련 질환에 대하여 상의/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충분치 않음 도래 및 부모의 경험 공유 및 지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경험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막연한 불편감 및 부담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감
		산부인과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

	범주	하위 범주
	혼전 검진	혼전 검진(산전 검사) 홍보 부족
		검사 비용의 부담
		생식건강 점검하기에 늦은 시기에 지원됨
	사회적 인식 및 제한	업무 과중 및 과로
		술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성의 체형에 대한 높은 기준 부과
작용/상호 작용 전략	정보 수집	임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 임신/출산 유경험자를 통한 성공적 사례 수집
	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	절주/금연
		신체 활동을 증가시킴
		균형적인 영양 섭취
		건강 보조 식품
	전문적 도움	출산 전문 병원으로 옮김
		난임 치료 및 시술
		병원 쇼핑
중재적 조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원의 부족	임신 출산과 관련한 정보원 부족
		여성 생식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원 부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국가 및 지자체 제공 서비스 수혜
	가임기 여성을 위한 진료 시스템	임신 가능성에 대한 의료진의 인지와 보호 부족
		병원 진료과 간 연계 진료의 어려움
		임신 및 난임자 전문 인프라의 부족
	주변 타인의 임신/출산에 관한 인식 및 태도 부족	임신 준비에 대한 배우자의 수동적 태도
		배우자를 포함한 남성의 임신 관련 지식/인식의 부족과 편견
		난임 원인이 남성에게 있을 가능성에 대한 방어적 태도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일자리에서의 차별
	임신 및 임신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임신 후 출산까지 비용의 부담
		난임 시술 및 유지 비용의 부담
결과 및 기능	임신/출산	임신 성공
		출산

1)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결혼 이후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바로 성공하지 못하는 ‘임신 지연 및 어려움’, 현재 건강 상태가 임신 및 임신 과정에서의 통증이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염려’, 임신이 예상한 것과 달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임신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결혼 후 대부분 원할 때 임신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임신을 시도하게 된 단계에서 임신이 바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임신 시도에 실패하는 경우를 중심 현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며 참여자들은 조급함을 느끼거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나 양가 부모님 등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임신이 자신의 삶이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자신의 건강이 임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에 임신 자체를 미루거나 시도하지 않는 중심 현상도 하나의 범주로 확인되었다.

생리 주기가 딱딱 맞으니까 나는 언제든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애를 가져야지 하면 바로 애가 들어설 줄 알았죠.(참여자 10)

(임신이) 쉬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날마다 어느 정도 (난포가) 자랐는지 병원에 보러 가고 그걸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나이도 별로 안 되고, 남편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잘 안되니까 좀 조급해지고, 먼저 임신한 친구들 이야기 듣고 하면은 나도 돼야 하는데 왜 안 될까 계속 걱정도 되고,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참여자 2)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유지 기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궁)기형종이나 (척추)측만증

이 임신 유지하는 데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줄까. 임신 기간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배가 커지면 살도 찌고 배도 무거워지면 척추를 누르는 하중이 있으면 통증이 동반이 될 거고요. 임신 기간에 힘들 것들이 걱정이에요.(참여자 4)

2)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의 인과적 조건들로서는 임신 이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생식건강의 관리 부족’, ‘건강 관리 실천 및 관리 부족’, ‘나이’ 등으로 나타났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범주와 관련하여 기존에 자신의 체력이나 체질과 관련한 내용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나 질환이 임신 의도 및 임신 성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과 자궁 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부인과 질병이나 질환을 임신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중심 현상과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임신이 어려워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악화된 건강도 임신 성공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난임이라 시험관 하느라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부어요. 과배란하면서 3~4kg씩 찌더라고요. 한 번 할 때마다 5kg, 이렇게 찌고 운동을 해서 빼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살이 계속 찌게 된 거죠. 임신 시도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졌지만 우울증도 오고.(참여자 3)

첫째 아이를 친정의 힘을 빌려 기르며 일을 하다 보니까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출근 시간만 두 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했는데 2년 정도 계속 되니까 확실히 건강 상태가 일과 육아를 같이 하면서 무리가 갔고요. 그러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죠. 갑상선 질환 발견되었고요. 그 뒤로 약물 복용하고 있는데, 갑상선 저하증 오면서 임신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참여자 20)

‘생식건강 관리의 부족’ 범주는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을 미루거나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자신이 부인과 질병이 있더라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거나, 증상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해당된다. 참여자들은 청소년기부터 임신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임신을 더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진짜 심각한 아픔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괜히 무서워서 병원에 더 못 가는 것도 있어요. 특별하게 제가 이상 증상을 안 느끼면 병원은 안 가자는 주의라서 산전 검사도 그냥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임신해서 병원에 처음 갔는데 위험했던 생각이죠.(참여자 13)

저는 생리 불순이 되게 길었거든요. 1년에 많이 해야 3번. 그런데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뜨문뜨문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겠구나. 솔직히 말해서 안 하니까 편하다.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임신하려다 보니까 생리를 해야 뭐가 되는데 그제서야 병원 가니까 물혹이 생긴 것도 그때 알았고. 그런 것에 경각심을 갖고 병원 다녔으면 이렇게 고생을 있는 대로 안 해도 됐고 훨씬 빨랐겠죠.(참여자 16)

‘건강 관리 실천 및 관리부족’ 범주에서는 평소에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나 영양 섭취에 신경을 쓰지 않는 등의 생활 습관들을 보고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 행동을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지만, 임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시기에는 임신·출산과 생활 실천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웠음을 보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신 준비하면서 더 신경 쓰게 되고 건기 좋다고 해서 헬스장도 끊었어요. 그 전에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술 안 마시고, 잘 챙겨 먹고 이런 게, 시기적으로 임신 출산과는 먼 시기니까 그렇게 많이 와 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열심히 실행에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참여자 1)

마지막으로 ‘나이’ 범주에서는 노화가 진행되고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출산을 할 확률이 줄어드는 노산의 연령에 진입하는 것이 중심 현상을 유발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 중 자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짐에 따라 임신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불안과 조급함이 증가함에 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지식 부족’, ‘제한적인 성교육’, ‘여성 건강에 대한 지지 자원’,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경험’, ‘사회적 인식 제한’ 그리고 ‘혼전 검진’의 범주로 나타났다.

‘지식의 부족’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애 건강 및 생식건강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한 보건 의료적 지식들을 알지 못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것이 임신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조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의 건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령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 당시에는 배란 점액?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왜 뭐가 나오지? 이런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이 되더라도 물어보

지는 않았고요.(참여자 2)

무월경이 9달 동안 지속된 뒤에 병원을 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겠거니 생각하다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얼마 동안 안 했더라 따져 보니 8~9달 동안 안 했어서 생각이 나서 가고 그랬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임신이랑 연관성을 생각을 안 했고, 생리 안 하면 좋지 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증상이 악화되고 나서 겪고 나서 병원 가고 하잖아요.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8)

생식력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천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예로 음주와 흡연, 적절한 신체 활동 및 영양 섭취가 여성의 생식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참가자들에게서 임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나 임신 이전에는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적다고 응답한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균형적인 영양 섭취 및 운동이 건강한 임신·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관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빈번하게 확인되었다.

임신하기 전에 관리는 (건강한 임신 출산 여부와) 관련 없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런 사람들도 자궁벽이 두껍다 어쩌다 해서 임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고 운동 부족도 관계없는 것 같고. 근데 비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영양소를 잘 따져서 먹는 편도 아니라서 (그래도 임신 잘되었으니) 그렇게 관계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5)

음주는 과음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술 먹고도 하도 애 잘 가지는 사람 많이 봐서.(참여자 7)

어느 시기에 어떤 검진이나 체크가 필요한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생식건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없어 지식 부족에서 기인한 여성 건강의 관리 부족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범주로 ‘제한적인 성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청소년기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성교육 자체가 피상적이고 이러한 교육이 실제 여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였으며, 초경 및 첫 성 경험과 같은 현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교육의 경우, 주로 청소년 임신의 위험성이나 피임 방법들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어 여성의 생식건강을 위한 관리와 같이 중요한 부분은 정확히 배울 수 없었다고 하였다.

조금 더 여성 질환에 대해 많이 정보도 알고 그랬으면 산부인과 가거나 건강 관리를 더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중학교는 가정 시간에 잠깐, 고등학교 때 시청각 자료 외에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성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이 직접 자료 등을 찾아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참여자 14)

성교육도 청소년 때 들었던 게 무조건 성관계는 결혼하고 해야 된다. 너네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딱 그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요즘 현실하고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생리통이 심할 때 어떤 어떤 방법을 하면 좋고, 이런 때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좋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성교육도 사실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인터넷 검색만 하지만, 또 틀린 정보도 많잖아요.(참여자 10)

청소년기나 미혼일 때 관심사는 오히려 아이 가지면 안 된다. 피임이 더 관심사지 나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불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고. 내가 애를 가지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 정도.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떤 면의 관리가 필요했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

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워야지. 요즘은 너무 스키니진 입고, 짧은 거 입고 그러니까 사실 자궁 건강에 안 좋은 환경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은 관리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참여자 17)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에 대한 교육 또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한 임신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맥락적 조건은 ‘여성 건강에 대한 지지 자원’ 범주로 나타났다. 여성 생식건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주변에 부재한 것이다.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서 어머니가 청소년기부터 생식건강에 대하여 조언을 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머니와 성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쉽지는 않았다고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포레들과 고민을 나누는 것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보다 훨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반면, 생식건강 관련 보건 의료적 지식이 있는 친척이 있거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생식건강 관련 불편감에 대처하였던 경우, 또는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포레가 산부인과에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했던 경우에는 생식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더욱 빨리 그리고 거부감 없이 대처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월경이 너무 불규칙해서 너무 주기가 빨라서 산부인과를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산부인과에 데려갔던 것 같고. 그때는 가면 약 처방해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촌 언니도 산부인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생리 주기를 맞췄어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먹어야 네가 편하다 이야기를 들어서 성인들이 하는 그런 검사를 할 거라는 공포는 없이 갔었죠.(참여자 4)

산부인과는 여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20살도 안 되는 애가 간다고 하면, 주변에 가본 친구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

아요. 가면은 무서울 것만 같고 ‘초음파’라는 거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참여자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부터 지지와 경험의 공유가 있다면 생식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특히, 청소년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심적 부담이나 주변 시선에 대한 걱정 등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불편해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등학교 때 3개월간 생리가 계속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한 거예요. 엄마가 데려가서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재는 사고쳤나 그런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파서 온 건데 날 왜 이렇게 보나. 어릴 때 오는 건 별로 안 좋구나. 나쁘게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3)

산부인과 갈 때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 근처에 산부인과 가는데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혹시 임신했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미혼은 훨씬 더하죠.(참여자 10)

산부인과는 ‘부인’이니까 당연히 임신한 성인 여자가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임신하지 않은 다른 여자가 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이름이에요.(참여자 19)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많은 여성들이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 하였는데, 산부인과의 일반 병원에 비하여 진료 비용이 비싸고 필요한 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같은 증상으로 가더라도 병원마다 진

료비가 다르게 청구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게 되기도 하며 불필요한 검진이 추가되거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산부인과는 비용이 걱정이 돼서 못 간 경우들도 많아요. 가기만 하면 무조건 초음파를 봐야 한다, 초음파를 봐야지 알 수 있다 하는데 갈 때마다 4~5만 원씩 드니까. 괜히 의사한테 가서도 궁금한 거 물어보지 말걸 그랬나. 궁금한 것 물어보면 괜히 검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비싸니까. 일반 병원은 3~4천 원이면 가는데.(참여자 10)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갈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다니면서 사전에 얼마인지에 대한 고지를 받아 본 적은 없고 마지막에 청구받으면 헉 하는 거고요. 그래도 다 필요하니까 해야지. 근데 병원마다 같은 초음파를 봐도 가격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부당한 가격을 더 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참여자 19)

이처럼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청소년, 미혼기에 여성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식건강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혼전 검진(산전 검진)’이다. 참여자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체크할 계기가 없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음을 지적하였고, 그나마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산전 검사 또한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놓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였다. 또한 산전 검사 시기가 결혼과 맞물리고, 이때 필요한 접종 등으로 인해 최소 6개월가량 피임을 하고 이에 임신 시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토로하기도 하였다.

사실 임신 전에 결혼 전에 하는 검사나 그런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병원에서 하려고 하면 100만 원 가까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하면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홍보가 되거나 그런 것도 없는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했고. 결혼할 때 그런 검사가 진짜 처음으로 나의 생식건강이나 출산에 대해 정말 검진을 32세에 받았는데 그때 다 항체 풍진, 감염 다 없다고 해서 주사 다 맞는데 6개월에서 7개월 걸렸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6~7개월 동안 임신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훨씬 전에 해서 준비가 된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성관계하는 사람은 자궁암 검진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20대에는 또 그런 (검진)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참여자 4)

맥락적 조건으로서 ‘사회적 인식 및 제한’이 여성들이 생식건강을 관리 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방해 요인으로 지각되기도 하였다.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과로는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생식 건강 상태도 악화시켰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직장 문화 중 여성들의 음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거나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평가하거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성은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야근 많고 술 많이 먹어야 되고, 조금만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받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기도 했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심했을 때는 구내염도 심하게 생기고 피부에 사마귀 같은 것도 나고. 야근을 너무 심하게 하고 흡사를 했어서 계속 생리 불순도 심했고요.(참여자 6)

여자가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시면 더 집중이 돼요. 여자들은 잘 못 마시는데 너는 잘 마시는구나 하고, 어필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남자 사원이 술을 잘 마시는 거는 그냥 술을 잘 마신다 하는데 오히려 여자 직원이 술을 잘 마시면 “개 술을 잘 마신다.” 막 소문이 나기도 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 알게 돼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피곤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요.(참여자 2)

관리자분이 술을 좋아하면 회식이 술자리로 주로 되고. 그래서 처음 회사 생활 할 때는 억지로 좀 먹기도 했어요. 누구나 남녀 상관없이 다 잘 먹어야 되는, 안 먹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거나, 술을 못 마시거나 하면 그러면 안 돼. 사회생활 힘들어 이런 말 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무리해서 먹게 되고. 일을 할 때 술을 잘 먹는 사람들 위주로 일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주요한 일들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술을 먹는) 사람이 포진해 있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사회적인 인식 및 제한’ 중에는 여성의 체형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것과 여성들이 균형적이고 건강한 영양 섭취에 신경 쓰기보다 날씬한 몸매를 더욱 중시하도록 하여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고 이로써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작용하고 있었다.

사회적인 메시지에서 뭔가 여자는 예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날씬해야 예쁜 것이다 그런 쪽이 더 큰 것 같고,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런 게 남자도 있지만 여자에게 더 요구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1)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오래 했어요. 거의 6~7년을. 식이 조절도 너무 많이 하고. 처음에는 몰라서 요요가 오니까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다이어트 약도 먹었거든요. 약 먹고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는데 몸에서 안에 있는 기름을 쪽쪽 다 인위적으로 뺀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3)

4) 작용/상호작용

임신 지연 및 어려움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바로 작용/상호작용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자녀를 갖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정보 수집’을 시도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신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었다. 우선, ‘정보 수집’의 측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변화들을 보였다. 여성의 건강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나 임신 성공을 위한 지식이나 자료를 찾아 보고 있었다.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경험자들의 경험담 등 사례를 통해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임신을 계획한 뒤에는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결혼을 앞둔 시점부터 시작하기도 하였고, 임신을 계획하게 된 시점부터 술을 덜 마시거나 금연을 하거나, 또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지속하려는 노력들을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임신 준비하면서 확실히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배가 좀 아프면 근종이 커졌나? 생리통이 있으면 이게 임신에 방해되고 있나? (인터넷) 카페 같은데 잡 지식도 좀 찾아보고. 확실히 관심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부추나 두유가 임신에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좋으니까 수면양말을 신고 자는 게 좋다. 이런 지식들 속설들 같은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들이고 여러 개의 글들이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점점 절실해지니까 아 이게 좋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해 보고 싶고, 어려운 거 아니면 따라가 보고 싶고.(참여자 2)

임신이 잘 안 돼서 병원 다닐 때에 남들 하는 건 다 해 보았던 것 같아요. 부적 쓰는 것부터 제가 한 노력은 병원 다니고 그때쯤 운동도 시작하고 보조 식품도 먹고, 엽산하고 먹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외식도 안 하려 하고. 한약도 먹고. 건강한 야채, 과일 많이 먹으려 하고요. 일부러 배란에 좋다고 버스 한두 정거장 전에 먼저 내려 걸어오기도 하고요.(참여자 1)

결혼 준비하면서 담배 끊었고요. 이때는 30세가 되어서요. 그때 생각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출산도 해야 하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산하기 2년 정도 전부터 미리 금연

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끊었어요.(참여자 4)

이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건강 및 임신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공적인 임신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접근하는 경우들도 존재하였다. 산부인과가 아니지만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질환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병원을 여러 곳 방문하는 병원 쇼핑부터, 임신과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난임 병원까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도움에 접근하는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허리가 아픈 편이어서) 임신하게 되면 척추를 누르는 통증이 동반될 거고 임신 기간에 힘들 것이 걱정이어서 최근에 병원에 한 번 갔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하며 자세히 설명 안 해 주고, 지금 진행형이 아니니까 지금 아프면 치료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연히 불안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혹시 도움이 되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려고요.(참여자 4)

1~2년은 다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안 생겨서 저도 한약 먹고 신랑도 한약을 먹었죠. 그다음에 제가 3년째에 산부인과를 갔죠. 먼저 가서 배란일 잡고 (관계)하고. 3개월 정도 했어요. 될 줄 알았는데 특별히 뭐가 없는데 안 되니까. 이때 (난임) 전문 병원으로 옮겼죠.(참여자 1)

5) 중재 조건

임신의 어려움 및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감에 있어 중재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정보원의 부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가임

기 여성을 위한 진료 시스템’, ‘주변 타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식 및 인식 및 태도 부족’, 그리고 ‘임신 및 임신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으로 범주화 되어 나타났다.

‘신뢰성 있는 보건 의료 정보원의 부족’은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원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나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공신력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여성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주로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반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임신으로 고민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런 부분들. 난임이 언제까지가 난임이고 이런 게 다 분분하더라고요. 각 병원에서 올리는 정보마다 다르고요. 1년간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단계적인 것들이 좀 제공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 카페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일단은 날짜를 받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주사를 맞아 보고 이런 식으로 카페나 병원 가서 듣기는 했는데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부분이 (이미) 있는데 제가 모른 것일 수도 있지만 홍보가 안 돼서 접근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참여자 2)

여성이 스무 살이 되면 내가 몇 살에 어떤 혜택이 있고, 몇 살에 무슨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표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지원 정보를 되게 하나씩 난잡하게 얻었어요. 모두 흩어져 있어요. 그나마 병원 가서 임신했더니 보건소 산전 검사 해 준다 하고 가서 정리된 걸 들었는데, 체크리스트처럼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9).

제가 파고 파고 파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릴 때부터 신문이나 뉴스에 수많은 종류의 뉴스들이 있어도 여성의 건강 관리나 특히 자궁과 관련해서 그런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 포털에서도 여성 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난임 여성 심각. 이런 정도지 뭐를 어떻게 해야 난임을 예방할 수 있대, 이런 정보는 별로 없이 이슈거리로만 있는데 그런 것보다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것, (미리 생식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보들은 주로 소소하게 친구들한테 듣고 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듣거나 접할 수 있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8)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주와 관련하여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에 대하여 많은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 및 지자체의 서비스가 잘 홍보되지 않는 점, 지역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각자 다르다는 점, 그리고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이 적고 산부인과 진료와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산전 검사는 신랑이랑 결혼 전에 부담 없이 보건소에 가서 했어요. 피만 뽑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결과 나왔었어요. 보건소 혜택 산전 검사 혜택 받았고요. 자궁(경부)암 그거(예방접종)는 이제 잘된 것 같아요. 전에는 돈 많이 들었거든요.(참여자 8)

산전 검사에서 보건소 체크되는 항목들은 걸리거나 하면 굉장히 심각한 항목이기는 한데 많이들 안 걸리는 매독이나 에이즈는 일반인이 많이 걸리진 않잖아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받고, 산부인과로 가면 나는 불임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다낭성이나 난소 혹이 있다던지 갑상선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걸리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보건소 검사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한 번 피 뽑는 걸로 다 해당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피 한 번 뽑아서 가능한 거면 여기서도 하면 좋겠는데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두 번 피 뽑고 해야 하니까.(참여자 19)

‘가임기 여성을 위한 진료 시스템’은 임신·출산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 외 다른 병원에서 의료적 처치나 검사 등을 받으면서 이러한 진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험이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이 임신을 고려하거나 임신 중인 상태에서 타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적인 처치가 임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산부인과와 연계된 처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 같은 것 찍잖아요. 그럼 탈의실에 가면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말해 줘라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그런 걸 전혀 안내 문구 못 보면 그만인 거잖아요. 말로 아무도 안 해 줘요. 제가 가임기 여성이고, 기혼이고 이런 것 다 쓰잖아요, 신상 정보에 그런데도 안 알려 주거든요. 그때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으니까. 저는 산부인과적인 걱정 때문에 정형외과에 갔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연계 진료나 고려 없이 그 증상만 보는 거잖아요. 제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더 걱정을 키우는.(참여자 4)

진료 시스템에 대하여 면접 참여자들은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난임 전문 병원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랜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불편함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저출산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라서 임신과 출산 과정을 “전쟁처럼 겪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난임 전문 병원은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분.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진행 상황을. 그런데 그 1분 진료를 보려고 5시부터 챙겨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1분 보고 출

근하고 그러죠. 진료는 7시 반부터. 궁금한 내용은 적어서 가서 질문할 때도 있는데, 적어가
지 않으면 못 물어보고 나오죠. 대기가 엄청 많아요. 지방에서도 오고. 전쟁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할 것 질문하고, 여유 있게 진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참여자 1)

출산 병원이 가능한 병원이 동네에 많지는 않잖아요. 출산 경험이 많은 병원으로 가라고 이
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30분 걸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시간
은 기본이고 두 시간씩 진료를 기다려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매번 갈 때마다 두 시간씩
기다리기 너무 힘들고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달수가 찰수록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가야 하는데, 갈 때마다 두 시간씩 기다리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병원에 다녀야 하나. 근데 첫
애고 모르니까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은 안 가면 불안하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참여자 12)

한편, 이들은 심리적인 것과 관련하여 사회나 배우자를 포함한 남성들
의 부족한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출산까지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경
험이 된다고도 한다. ‘임신/출산에 관한 인식 및 태도 부족’에서 함께 자
녀를 계획하는 배우자부터 여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도와주어야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임신 준비과정을 부부가 함께 준비해 나간
다기보다 배우자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배우자가 임신, 출산에 관해서 가령 엽산도 먹으려면 잘 먹는데 옆에서 챙겨 줘야 먹고
한국 남성들은 이 정도가 최대한이죠. 더 하면 유난스럽다고 할 것 같아요. 전문적 자료든
정보든 본인이 먼저 찾아본다든가, 같이 병원을 가자고는 해도 병원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여자의 역할로 인식하고,
걱정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지, 임신이 안 되도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
는 것이 좀 있어요.(참여자 13)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도움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지각되지만,
사실상 남성들이 임신뿐 아니라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많아 여성들을 몰이해와 차별로 대하는 경험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생리대 광고가 파란 물감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생리혈이 파란색인 줄 안대요. 소변 참는 것처럼 생리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생리를 그것 잠깐도 못 참냐. 생리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다든지, 너무 남자들은 모르더라고요. 생리 휴가로도 말이 많잖아요. 생리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성도 많은데, 왜 생리 휴가는 왜 금요일에만 쓰냐는 등 남자들이 너무 모르고 무지하니까. 산부인과 임신하는 여자들 가는 곳인데 너는 왜 가냐 발랑 까진 거 아니냐 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참여자 17)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해 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우선적으로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고, 남성이 불임일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간혹 남자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발견과 처치가 늦어지게 되고 또 다시 임신이 늦어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임의 문제는 남자 반 여자 반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임신을 하는 건 여자다 보니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남자가 문제가 없다면 혹시 착상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배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막연한 걱정이 들고요. 한번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검사받으러 가자 하니 되게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참여자 13)

처음 신랑이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 전혀 못 했어요. 남편도 생각 못 했고. 평소에 불편감을 느낀 것도 없고 하니까. 또 보통 병원에 가면 시스템 자체가 여자가 먼저 검사를 해요. 남자도 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여자 먼저 검사를 하고 남자도 하는 게 좋은데 강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검사했는데 제가 이상 없다고 나오니까 신랑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신랑이 했죠. 결과 나오고 신랑은 (무정자증이라고 나와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히는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어서 원인을 알았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비용과 시간을 많이 버렸죠. 병원에서는 신랑 보고 좀 더 빨리 왔으면 좀 달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참여자 1)

임신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 난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난임 치료 자체의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 부족 및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도 난임 치료를 좋은 상태에서 받기 힘들게 하거나 난임 치료 기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시험관 하는 자체를 공개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주사 뭐냐고, 월 들고 다니냐 하면은 그냥 변명을 했고요. 제가 공개한다고 해도 배려받을 수 있는 복지나 제도가 없어요. 난임 케어나 단축 근무도 없고. 공개해 봤자 화식 자리 빠지는 수준이지 그걸로 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건 없었죠. 이식하고 일주일이라도 좀 쉴 수 있었다면 정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유산된 걸 아시니까, 말로는 안 하셨지만 그 뒤에 업무적인 기회 자체가 안 온다는 걸 느꼈죠. 진급도 당연히 누락되고. 진급이야 당연히 바라지도 않고요. 난임 치료를 이야기하면 지금도 이렇게 기회가 없는데,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게 오픈되면 재는 저러다가 애기 낳으면 그만두겠지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할 것 같아요.(참여자 20)

난임 치료는 날짜를 제가 지정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오라는 날 무조건 가야 되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연차를 쓰는데도 눈치 주는 사람도 있고요. 때에 맞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그 주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힘들었으니까. 또 난임 치료 부작용이 많아서 아플 때도 많거든요. 근데 회사 쉬겠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죠. 계속 약 먹고 하니까.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난임으로 병원을 다닌다는 것을 전혀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참여자 18)

마지막 중재적 조건으로 임신 및 임신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이 언급되고 있었다. 현재 임신 지원금의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난임 치료 또는 시술 시 많은 비용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관련 정부의 지원금은 '시술 비

용(횟수 제한)'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외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이다. 즉,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약값, 시술 후 임신까지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난임인 경우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검사 비용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난임 시술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임 병원에 대해서 가장 힘든 건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될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빼고 총 비용이 60만~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빼고 200만 원 정도 들어요. 처음에는 정부 지원금 있으니 비용이 안 들다가 채취를 하고 이식을 할 때마다 한꺼번에 50만 원 낼 때도 있고 80만 원 낼 때도 있고 다르거든요. 또 검사를 받는다 하면 일단 1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갈 때도 있고 약 처방받으면 약에 따라 10만 원 이상 나오고, 주사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또 10만 원 이상 나오고. 그거는 갈 때마다 비용이 달라서. 난임 병원 항목이 또 거의 비급여 항목이거든요.(참여자 18)

시험관 할 때, 스트레스 때문에 정자 난자 질이 안 좋다고 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면 돈 천씩 나오고. 제가 신랑 보고 나중에 얘기 생기면 이름을 "일억이"로 해야겠다, 그러는데 저희 그동안 쓴 돈 1억 넘었어요. 애 있는 사람들은 얘기 없으면 돈 안 들겠다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참여자 3)

6) 결과 및 기능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에 대하여 개인이 취한 작용 및 상호작용의 결과는 임신에 성공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상황적 요인들에 따라 각자에게 소요되는 시간이나 투입되는 노력 및 비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이 임신에 성공하여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원하던 결과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제3절 보건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가임기 인구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차원의 인구학적인 현상으로 만혼화를 들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만혼화는 생식건강의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와 달리 임신과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혼 부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만혼화는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 인정하는 임신과 출산의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만산화로 직결된다. 늦어지는 임신 시도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도 임신 능력을 낮추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호르몬 작용 등에 의해 가임력이 떨어지며, 사회 환경적으로는 임신 전에 이미 장기간 동안 각종 부인과 질환, 스트레스, 환경 오염 등에 노출되어 임신력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영양 상태 개선 등으로 성장 발달이 빨라지면서 신체적으로 임신 능력을 갖는 시기는 계속 빨라지는 반면, 만혼화에 따라 사회적 혹은 법률적 임신 시기는 늦어지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혼전 성 생활은 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혼전 성 생활 중 일부는 혼전 임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 문화적 또는 제도적으로 혼전 출생아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기에 너무 늦거나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경우에는 생식건강이 위협을 받아 당시의 임신 소모뿐만 아니라 미래 가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인식도 개인의 생식건강에 위협 환경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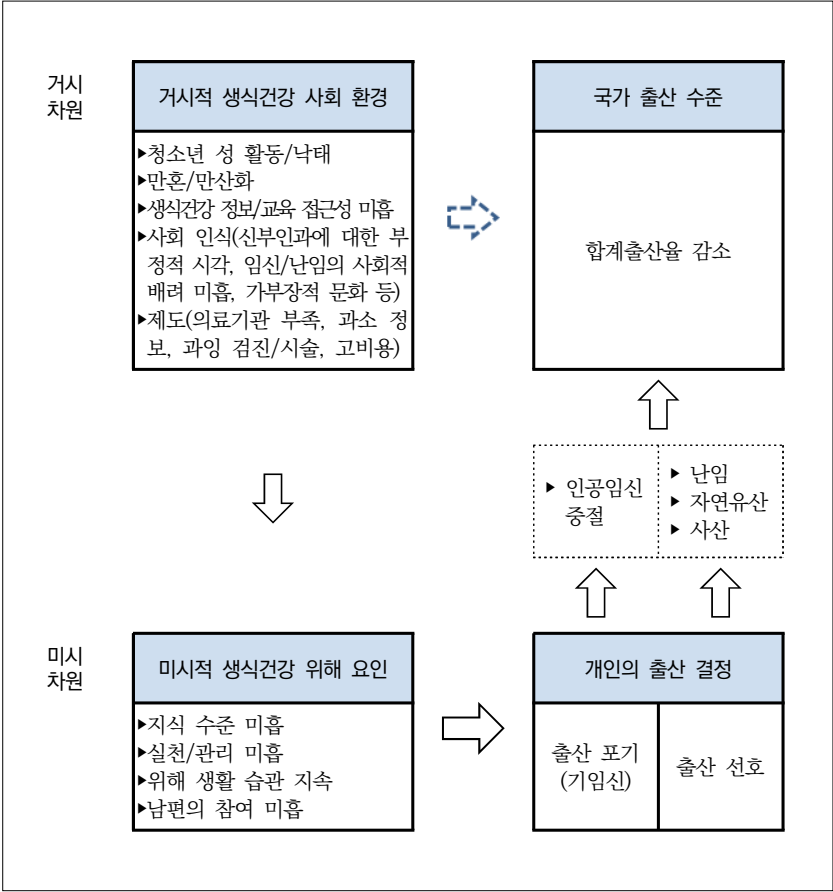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 여성의 신부인과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여성의 임신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 직장 등에서 임신(특히,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배려 미흡, 남성에 대한 난임 검진 기피 등 가부장적인 문화 등은 생식건강과 관련된 거시적인 사회 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

가임기 인구의 생식건강에는 사회제도(institutions)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회제도적 요인들로 생식건강에 관한 정보와 교육 제공 체계 미흡, 관련 의료기관 부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정보 제공 미흡, 과잉 검진 및 시술 등)로 인한 고비용 발생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 요인(만혼화·만산화의 인구 현상, 사회 문화, 사회제도 등)은 생식건강 관련 개인의 행태(지식 수준, 생활 습관, 관리 및 실천, 의료서비스 선택 및 접촉 빈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 수준 혹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도가 낮거나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생식건강 관련 질병·질환 또는 징후를 무시하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음주, 흡연, 다이어트 등 생식건강에 위해가 되는 생활 습관을 지속시키기도 한다. 가부장적인 생식건강 체계는 남편의 참여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 생식건강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비효율성도 발생한다. 혼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강한 사회적 편견은 개인으로 하여금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거시적 사회 환경은 개인의 생식건강 행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임신 후 출산 결정을 포기케 하거나 개인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임신과 (정상)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거시 사회 환경-미시 개인 행태 간의 연계 구조는 한편으로는 난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이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사산(태아 사망) 등으로 이어지게 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차원의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18] 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거시-미시 연계



제 8 장

보육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육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인의 보육정책 이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육과 출산 간 관계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일인생계부양모형에서 이인생계부양모형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는 자녀 돌봄에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녀 돌봄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는 보육정책 등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돌봄 영역은 주로 공적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주로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공급과 출산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보육정책

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현재 저출산 대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21조 원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6).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육아 및 보육과 관련한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 개혁’ 항목으로 약 16조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의 74% 수준이다. 저출산 대책의 세부 사업 중에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경우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에는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였지만, 점차 보편 지원으로 확대되어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시 가구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했지만,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0~84개월)로서, 보육료나 유아 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20만 원으로 차등적이다.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제도 도입 시, 기관 서비스 이용자와의 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 2015).

나. 보육·교육 기관 확충

어린이집은 설치 주체에 따라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부모 협동 어린이집으로 분류된다. 어린이집 유형별 구성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6.2%, 법인 어린이집이 3.3%로 소수이고,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체 보육 아동의 11.4%, 법인 및 법인 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0.1%,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75.2%이다.

〈표 8-1〉 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보육 아동 수, 2015

(단위: 개, %, 명)

	계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어린이집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785	155
(비율)	(100.0)	(6.2)	(3.3)	(2.0)	(34.4)	(51.9)	(1.8)	(0.4)
보육 아동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77	44,765	4,127
(비율)	(100.0)	(11.4)	(6.9)	(3.2)	(51.5)	(23.7)	(3.1)	(0.3)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확대,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체의 명단 공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의무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은 50%를 조금 넘었으며,²⁰⁾ 직장 보육이 전체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 불과하다.

〈표 8-2〉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설치 현황

(단위: 개, %)

구분	의무 사업장	의무 이행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 (%)
		계(%)	설치	수당	위탁	
2005	787	302(38.4)	170	105	27	485(61.6)
2010	833	578(69.4)	312	208	58	255(30.6)
2015	1,143	605(52.9)	578	-	27	538(47.1)

자료: 보건복지부 2016. 4. 29.자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하반기부터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운영비를 지

20) 의무 이행률이 낮아진 것은 의무 이행률 기준 변경 때문이다. 이전에는 보육수당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던 것을 2015년 이후 의무 이행 수단에서 제외하였고, 위탁 보육만 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던 것을 근로자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하는 제도이다.²¹⁾ 해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기준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왔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 기준으로 4.2%, 아동 기준으로 6.5% 수준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6년 2,15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표 8-3〉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 천 명, %)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			
	개수	아동	개수	비율	아동	비율
전체 어린이집	42,790	1,393	1,784	4.2	91	6.5
민간 어린이집	14,641	718	1,161	7.9	80	11.1
가정 어린이집	22,400	319	611	2.7	10	3.1
법인·단체 등	842	46	12	1.4	1	2.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다. 인적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파견 보육 형태의 개별 서비스는 공적으로는 아이돌보미 교육 및 파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선발한 자 중 90시간의 교육 이수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하도록 하고, 돌보미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종류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보육 교사 자격자가 아이돌보미인 보육 교사형과 가사 활동이 추가된 종합형 등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비용은 가~라형의 소득 계층 중 정부에서 가~다형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시간은 시간제는 연간 480시간, 종일제는 월 120~200시간이다. 영아 종일제는 당초 0세에서 출발하여 2014년에 1세로 확대되었다.

21)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가 있으므로 공공형 어린이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은 약 790억 원 규모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수혜 가구는 2014년 기준으로 시간제 약 5만 가구, 종일 돌봄 4,3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품앗이 및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을 펼쳐왔다. 가족 품앗이는 같은 지역 및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 및 다양한 아이터를 가지고 품앗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한다. 공동 나눔터는 2010년부터 실시하여 67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 육아 나눔터 이용자 연인원은 2015년 17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2. 실증적 분석: 보육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가. 분석틀

보육정책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보육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책이 없었을 경우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정책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집단 혹은 성과지표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유배우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정책의 영향은 각 정책 대상의 사회 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집단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정책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상이한 인구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이나 정책적 요인에 의해 증폭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청년 고용, 주거 비용, 교육 문제 등이 결혼과 출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 경제적 혹은 정책적 요인들이 이를 압도하여 합계출산율이 정체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2~2013년에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만 3~5세 아동들은 유치원(유아 교육 과정) 또는 어린이집(보육 과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 학비 지원’을 받았다. 두 사업의 목적과 지원 방식 및 규모는 동일하지만 관할 부처와 재원이 달랐다. 특히 각 사업의 지원 현황에 대한 집계 자료가 상이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두 사업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만 0~2세 영유아들은 어린이집만을 이용하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영향 추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

정하기 위하여 연간/광역 시·도 단위에서 구축한 2001~2015년 광역 시·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광역 시·도 패널 자료 분석의 장점은 보육료 지원 사업 초기의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부터 최근 소득에 무관한 보편 지원까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편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광역 시·도 및 연도 고정 효과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측정 불가한 지역 특성과 연도별 특성(해당 지역과 연도의 출산 결정 요인과 관련한 집합적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진다. 끝으로 각 변수의 1차 차분 후 과거 모든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First-Difference GMM 모형도 적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광역 시·도별 보육료 총 예산을 보육료 지원의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 만 3~5세 일부 아동들에게 지출되는 유아 학비 지원이 누락되어 실제 보육 지원 규모를 왜곡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전액 지원과 부분 지원을 구분할 수 없어 보육료 지원 사업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가구 소득 분위에 따라 달리 책정된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광역 시·도별로 연간 보육료 혜택 아동 비율을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아동이 해당 연도에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100%의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면 1의 값을 부여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0에서 1사이의 값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시도 j 의 t 연도에서 보육료 지원율을 고려한 보육료 혜택 아동의 총 수(CB_{ajt})는 보육료 지원 계층(k)별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B_{ajt}^k)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CB_{ajt} = \sum_{k=1}^n (C_{ajt}^k \times B_{ajt}^k) \dots\dots\dots (8-1)$$

a : 연령(만 0, 1, 2세), j : 광역시·도, k : 보육료 지원 계층(법정 저소득층 등)

이를 연도/시도/연령별 아동 인구 수(C_{ajt})로 나누면 각 연도별/광역시·도별 해당 연령대 아동 인구 대비 보육료 지원 정도를 보여 주는 ‘보육료 지원 혜택 지수(SI_{ajt})’를 추정할 수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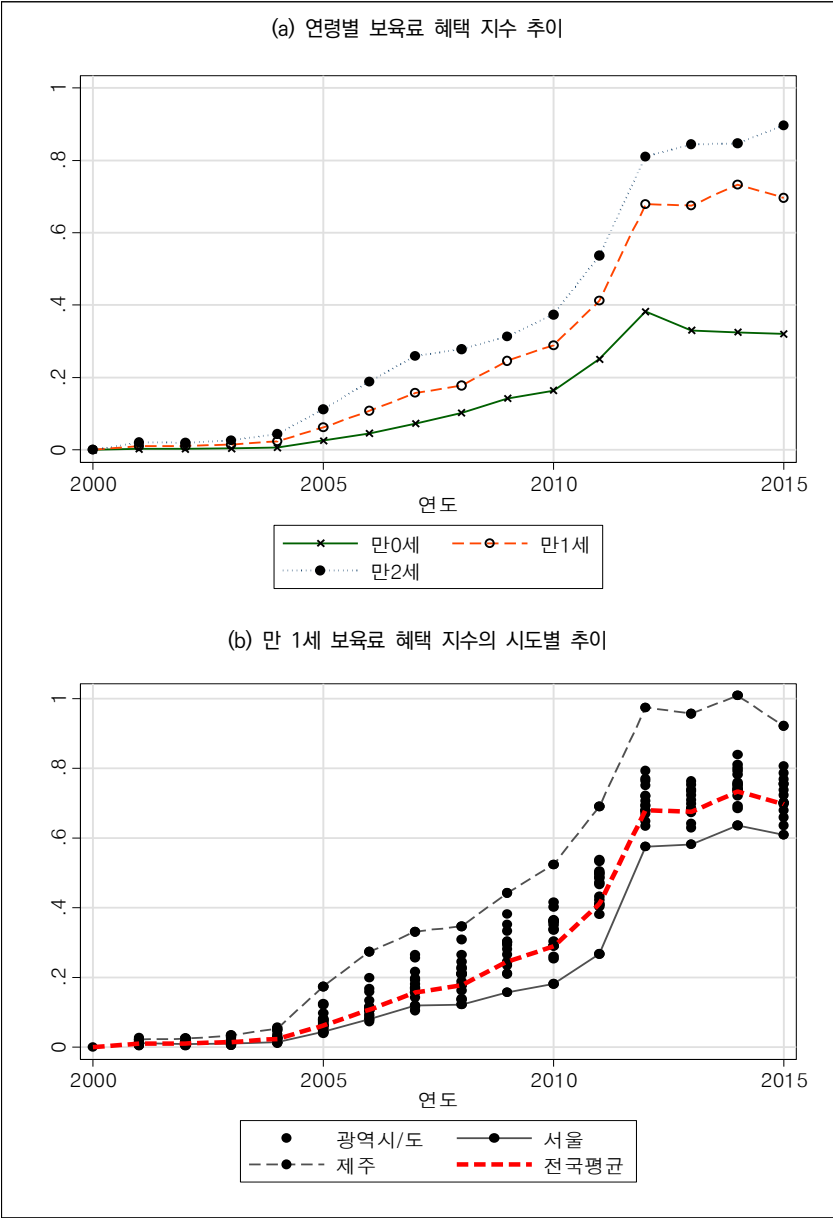
$$SI_{ajt} = \frac{CB_{ajt}}{C_{ajt}} \dots\dots\dots (8-2)$$

각 연도별, 광역시·도별, 연령별 및 보육료 지원 계층별 보육료 혜택을 받은 아동 수와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은 각 연도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취득하였으며, 연도별, 광역시·도별 및 연령별 총 아동 인구는 통계청의 주민 등록 인구 자료(연앙 기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한 보육료 혜택 지수의 2000~2015년 추이를 보면, 2010년까지 모든 연령대의 보육료 혜택 지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0년에 법정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소득하위 60%와 70% 가구는 각각 지원 단가 대비 60%, 30% 수준의 지원을 하였다. 2011년에는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에 대해 100% 지원을 하였고, 2012년에는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편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22) 이 같은 추계 방식은 홍석철 등(2012)에서 처음 활용하였다.

[그림 8-1] 보육료 혜택 지수의 추이, 2000-2015



보육료 혜택 지수가 2012년 이후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첫째,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지원을 받게 된다. 즉, 보편적 지원으로의 확대도 2010년 대비 2012년 보육료 지원 혜택이 연령대별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지만, 보편 지원이라고 해서 모든 만 0~2세 영유아 가정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둘째,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정원이 증가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셋째, 2009년에 도입된 양육수당은 2013년에 보편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만 0세 경우 2012년에 보육료 혜택 지수가 0.38이었으나, 2015년까지 0.32로 하락했다는 것은 보육료 지원에서 양육수당 지원으로 이동하였을 개연성을 보여 준다.

연령대별로 보육료 혜택 지수의 차이도 관측된다. 2005년 이전에는 그 차이가 작았으나 점차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만 0세는 0.3, 만 1세는 0.7, 그리고 만 2세는 0.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육료 혜택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 지원이 도입된 2012년 이후 만 2세의 90% 정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8-1]의 하단 그래프는 광역 시도별 만 1세의 보육료 혜택 지수 추이를 보여 준다. 보육료 혜택 지수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광역 시도 간의 편차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계속 보육료 혜택 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제주는 가장 높았다. 2015년 기준 서울의 보육료 혜택 지수는 0.61로 제주(0.92)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 간 편차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호, 어린이집 수급 현황 등의 지역 간 차이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광역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이 같은 지역 간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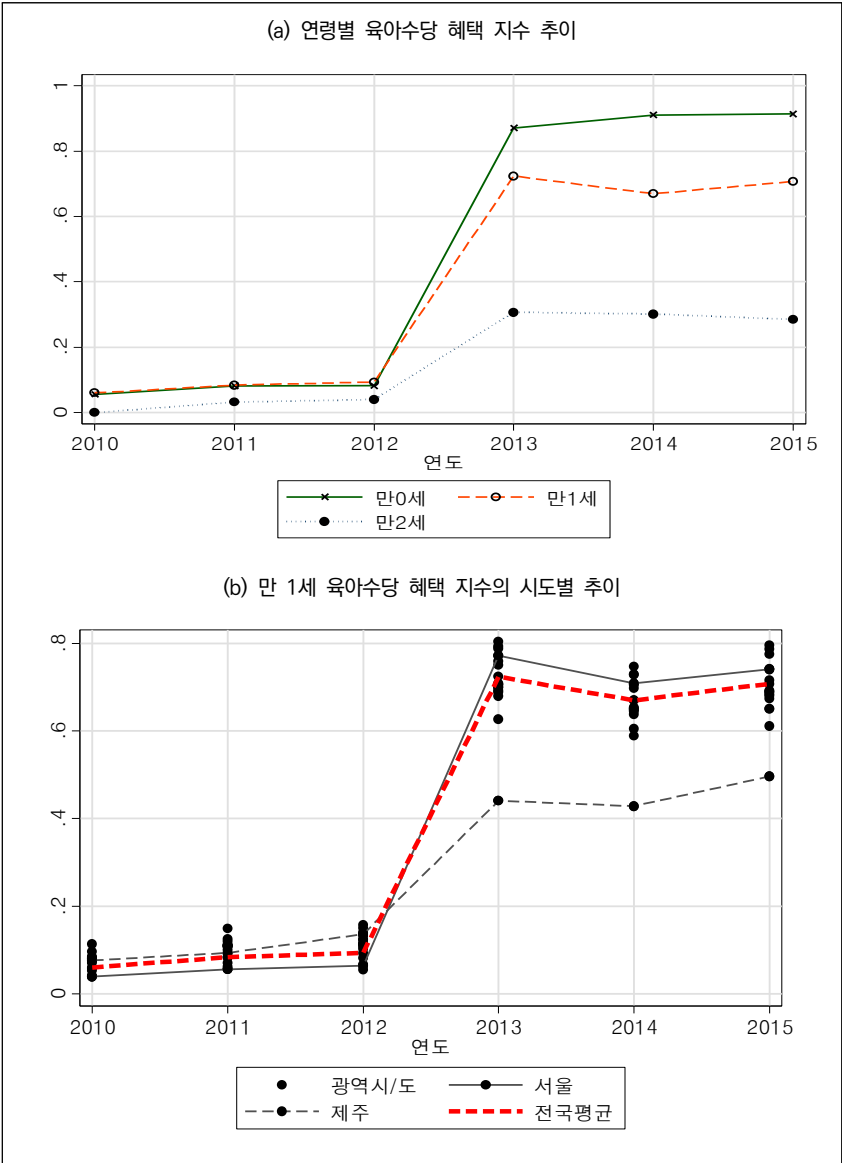
한편,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아래 식과 같이 연령별로 양육수당 (parenting payment) 혜택을 받은 영유아 수(CP_{ajt})를 해당 연령 총 인구 수(C_{ajt})로 나누어 양육수당 혜택 지수(PI_{ajt})를 추정하고자 한다.

$$PI_{ajt} = \frac{CP_{ajt}}{C_{ajt}} \dots\dots\dots (8-3)$$

a : 연령(만 0, 1, 2세), j : 광역 시도

[그림 8-2] 상단의 연령별 육아수당 혜택 지수의 추이를 보면, 2013년 보편 지원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관측된다. 2012년까지 약 10%의 영유아들이 양육수당 지원을 받았지만, 2013년 이후 만 0세의 경우 약 90%가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의 혜택율도 70% 수준으로 증가했고, 만 2세의 경우 3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부모들이 신생아일수록 직접 양육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8-2] 하단의 시도별 추이를 보면, 육아수당 지원의 지역 간 편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보육료 지원 혜택 지수가 계속해서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양육수당 혜택 지수는 매우 높았다. 반대로 제주는 보육료 혜택 지수는 높았지만, 양육수당 혜택 지수는 가장 낮았다. 이는 두 보육 지원이 서로 대체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8-2]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추이, 2010-2015



이상과 같은 연도별/광역 시도별 보육료 혜택 지수와 양육수당 혜택 지수는 회귀분석에서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합계출산율과 출산 순위별 출산율을 적용하였다. 출산 순위별 출산율은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를 가임 여성 인구(15~49세)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보육료 및 육아수당 혜택 지수 외에도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역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우선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지표로서 광역 시도별 만 0~2세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정원, 그리고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민간 어린이집 비율을 활용하였다. 한편,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대표적 저출산 대책인 출산장려금 정책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광역 시도 내 시군구의 첫째아 평균 출산장려금을 추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혼인율, 20~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재정 자립도를 포함하였다.

나. 실증 분석 결과

1)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시도 고정 효과 모형

보육료 지원이 광역 시도의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TFR_{jt} = \alpha + \beta SI_{jt-1} + \gamma TFR_{jt-1} + X_{jt-1}H + \delta_t + \delta_j + \varepsilon_{jt} \quad \cdots (8-4)$$

(TFR_{jt} 는 t 연도 j 광역 시도의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전년도($t-1$)의 보육료 혜택 지수(SI_{jt-1})를 통제하였다. 임신과 출산 간에 9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

을 감안하여 전년도 설명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1~2015년이다(보육료 혜택 지수는 2001~2014년, 합계출산율은 2002~2015년).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부터 자료가 존재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 시도의 14년에 걸친 224개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보육료 혜택 지수는 만 1세만을 활용하였다. 만 0세의 경우 신생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 빈도가 낮고, 만 2세의 경우 자료 일부가 만 3세와 중복이 되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의 보육료 혜택 지수를 올해 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추정식에서 전년도 혜택 지수를 통제하였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육료 지원 정도가 임신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출산 후 자녀가 보육료를 지원받기까지는 임신 결정 후 적어도 1년은 소요된다. 전년도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임신 결정 시점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은 직접적인 요인으로서의 영향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의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임신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보육료 혜택 지수는 해당 지역의 보육시설 수급 현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급되는 정책이므로 보육료 혜택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충분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료에서 보육료 혜택 지수와 만 0~2세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수의 상관계수가 0.84라는 것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셋째, 보육료 혜택 지수는 지역 내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 선호 또는 필요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어 가임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다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자료에서 보육료 혜택 지수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상관계수가 0.22로 측정된다. 요약하자면 보육료 혜택 지수는 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 보육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 보육시설의 수급 현황,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선호 및 필요성 등 지역 내 여러 특성들을 반영하며, 추정 결과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기 상관성(*autocorrelation*)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정식에서 전년도(*t-1*)의 합계출산율(TFR_{jt-1})을 통제하였다. 자기 상관성을 고려할 때 보통 다기간에 걸친 시차변수(*lagged variable*)를 사용하지만, 분석 기간이 길지 않고 다기간 통제의 편익이 크지 않아 전년도 변수만을 통제하였다.

X_{jt-1} 는 전년도 기준 출산율과 관련이 있을 지역 특성들을 대표하는 설명변수이다. 여기에는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정원, 정원 기준 민간 어린이집 비율, 광역 시도 내 시군구의 첫째아 평균 출산 장려금, 혼인율, 20~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재정 자립도를 포함한다.

시간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예: 밀레니엄 베이비붐)와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없는 특정 연도의 저출산 정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δ_t)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δ_j 는 광역 시도 고정 효과를 나타낸다. 광역 시도 고정 효과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출산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예: 남아 선호, 인구 특성, 도시화 등)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의 존재로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광역 시도 고정 효과 사용의 의미는 광역 시도 내에서 보육료 혜택 지수의 한계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엄격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식 (8-4)에 기초한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육료 혜택 지수가 증가할 때 시도의 합계출산

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8-4). 이 같은 결과는 합계출산율의 자기 상관성을 통제하고 시간과 광역 시도 고정 효과를 고려해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모든 설명변수를 통제한 <모형 1-4>에서 추정한 한계 효과 추정 계수를 적용하면, 2005~2015년 보육료 혜택 지수의 증가분은 합계출산율을 약 0.122만큼 증가시킨 것으로 계산된다 ($0.122 \approx 0.1900 \times 0.64$). 실제로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076에서 1.239로 0.163만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보육료 지원의 확대는 합계출산율 증가의 75%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설명변수들도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매우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갖는 것은 합계출산율의 자기 상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이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적 특성들이 존재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정원은 유의미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출산율을 높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정원 기준 민간 어린이집 비율 역시 유의미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질적 수준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이다. 출산 장려금은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혼인율의 경우, 전년도 혼인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의 경제 지표들은 뚜렷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2)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First-Difference GMM모형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이 측정 불가한 지역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지만 내생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앞의 추정 결과는 보육료 지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보육료 혜택 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에서 시차를 조정하였다. 하지만 두 변수 간의 내생적 관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시점이 다르더라도 이전의 여러 시기에 걸쳐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태적 패널분석에서 위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시한 ‘First-Difference GMM(동태적 패널 1차 차분 일반화적률법)’ 분석 기법이 종종 활용된다. 이 방법은 아래 식 (8-5)와 같이 모든 변수를 차분(first difference)한 뒤에 활용 가능한 각 변수의 모든 시차변수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활용하는 GMM 기법이다. 또한 차분하는 과정에서 관측 불가한 고정 효과를 제거할 수 있어 누락변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Delta TFR_{jt} = \alpha + \beta \Delta SI_{jt-1} + \gamma \Delta TFR_{jt-1} + \Delta X_{jt-1}H + \delta_t + \Delta \varepsilon_{jt} \dots\dots\dots(8-5)$$

여기에서 ΔSI_{jt-1} 과 ΔTFR_{jt-1} 을 내생변수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모든 차분변수(ΔSI_{jt-1} , ΔTFR_{jt-1} , ΔX_{jt-1})의 시차변수를 활용하였다.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할 때, 도구변수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시계열적 자기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Arellano와 Bond(1991)의 1차 및 2차 자기 상관 검정과 Sargan 검정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과 도구변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표 8-4〉 보육료 지원이 t 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t-1$ 년도의 설명변수	추가 통제변수 없음	전년도 합계출산율 및 연도 더미 통제	시도 고정 효과 모형		First- Difference GMM 모형
	(모형 1-1)	(모형 1-2)	추가 설명 변수 미통제	설명변수 통제	(모형 1-5)
보육료 혜택 지수	0.169 ** (0.059)	0.094 *** (0.031)	0.132 ** (0.051)	0.190 ** (0.065)	0.2034 *** (0.0707)
합계출산율 (전년도)		0.983 *** (0.008)	0.880 *** (0.071)	0.070 *** (0.0688)	0.6150 *** (0.0640)
영유아 1인당 어린이 집 정원				-0.0027 *** (0.0009)	-0.0008 (0.0011)
정원 기준 민간 어린이 집 비율				-0.0632 * (0.0324)	-0.0702 ** (0.0333)
첫째아 평균 출산 장려금				0.0018 (0.0076)	0.0053 (0.0098)
혼인율				0.0313 *** (0.0052)	0.0328 *** (0.0072)
20-30대 여성 경제활 동 참가율				-0.0557 (0.0710)	-0.0504 (0.0558)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0.0007 (0.0006)	0.0017 (0.0014)
재정 자립도				-0.0624 (0.0548)	-0.1027 * (0.0559)
상수항	1.172 *** (0.060)	-0.025 (0.017)	0.063 (0.087)	-0.0093 (0.0948)	
표본 수	208	224	224	224	208
Adjusted R ²	0.073	0.987	0.988	0.992	
1차 자기 상관 검정 (p-value)					0.001
2차 자기 상관 검정 (p-value)					0.031
Sargan 검정 (p-value)					0.000

*p<0.1, **p<0.05, ***p<0.01

주: 1) 〈모형 1-1〉~〈모형 1-4〉는 추정식 (8-4)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명변수를 추가한 결과임.

2) 〈모형 1-5〉는 추정식 (8-5)에 따라 First-Difference GMM 추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임.

3) 연도와 시도 더미변수의 추정 계수는 지면 부족으로 생략하였음.

4) 각 모형의 회귀분석은 연도별/광역 시도별 신생아 수를 가중치로 사용함.

5) 추정 결과에서 괄호 안의 값은 추정 계수의 표준 오차를 의미함.

6) 〈모형 1-1〉~〈모형 1-4〉에서는 표준 오차를 시도 단위에서 cluster하였으며, 〈모형 1-5〉는 강건 표준 오차임.

분석 결과(모형 1-5), 예상과 달리 GMM 모형의 추정 결과는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비록 변수의 차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2002년 자료가 분석에서 누락되었지만, 〈모형 1-4〉와 〈모형 1-5〉에서 보육료 혜택 지수의 계수는 거의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오차항의 1차 및 2차 자기 상관 검정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Sargan의 과도 식별 제약(over identification restriction) 검정도 기각되었다. 이는 위 GMM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출산율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은 앞의 추정식 (8-4)와 (8-5)에서 제시한 시도 고정 효과 모형과 First-Difference GMM 모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설명변수로 보육료 혜택 지수 대신 만 1세 양육수당 혜택 지수를 사용하였다. 양육수당 혜택 지수는 출산 후 예상되는 금전적 지원에 따른 육아 비용 절감의 정도를 반영하지만,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선호 및 필요성, 지역의 보육시설 수급 현황에 따른 결과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2009년에 도입되었지만 관련 자료는 2010년부터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분석 기간은 양육수당 혜택 지수 기준 2010~2014년이며, 출산율 기준으로 2011~2015년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정식 (8-4)를 근거로 분석한 〈모형 2-4〉의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은 양육수당 혜택 지수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정 결과를 보여 주었다. 추정 계수인 0.1354를 곱하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을 약 0.087 정도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2를 전후로 변동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지원 도입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

향으로 작용하였지만, 출산율에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5〉 양육수당 지원이 t 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t-1$ 년도의 설명변수	추가 통제변수 없음	전년도 합계출산율 및 연도 더미 통제	시도 고정 효과 모형		First- Difference GMM 모형
			추가 설명 변수 미통제	설명변수 통제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모형 2-5)
Panel A : 양육수당혜택지수					
양육수당 혜택 지수	-0.0516** (0.0115)	0.0987 (0.0622)	0.0441 (0.0390)	0.1354** (0.0390)	0.0944** (0.0453)
합계출산율 (전년도)		1.0046** (0.0102)	0.5843** (0.1361)	0.3248** (0.1353)	0.1540 (0.1298)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정원				-0.1745* (0.0961)	-0.1912* (0.0997)
정원 기준 민간 어린이집 비율				0.3219 (0.2136)	0.6595** (0.2518)
첫째아 평균 출산 장려금				-0.0191 (0.0251)	-0.0227 (0.0169)
혼인율				0.0333** (0.0093)	0.0279** (0.0061)
20-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0961 (0.1196)	-0.0104 (0.1230)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0.0039 (0.0025)	0.0042* (0.0023)
재정 자립도				-0.0310 (0.1393)	-0.1361 (0.1244)
상수항	1.2758** (0.0589)	-0.1278** (0.0113)	0.4509** (0.1895)	0.4807 (0.4068)	
표본 수	80	80	80	80	64
Adjusted R ²	0.009	0.990	0.995	0.997	

*p<0.1, **p<0.05, ***p<0.01

〈모형 2-5〉는 GMM 분석 결과이다.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추정 계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다소 작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분석 기간이 짧아 표본이 64개로 적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GMM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2차 자기 상관 검정을 기각하지 못하고 과도 식별 제

약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형 2-5> 결과의 신뢰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외 설명변수의 영향은 보육료 지원의 영향을 추정한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4)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통합 모형

2012~2013년은 양육수당 지원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도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서는 두 지원 사업 간 대체성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6>의 Panel B는 두 사업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 8-5>의 Panel A의 추정식에 보육료 혜택 지수를 함께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표 8-6>의 Panel C에서는 동일한 기간(2010~2015년)에 대해 보육료 혜택 지수만을 고려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 준다. Panel B와 Panel C에서는 추정식 (8-4)와 (8-5)를 따라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였지만, 주요 설명변수인 혜택 지수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Panel B와 Panel C의 결과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출산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보육료 혜택 지수를 추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상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2010년 이후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할 때, 보육료 혜택 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한계 효과가 앞서 분석한 결과보다 작게 추정되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졌다. 2010년 이후 보육지원의 효과가 작아진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2012년부터 보편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보육료 지원의 효율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보육료 지원은 임신, 출산,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가구에서 더욱 잘 작동할 것이다. 차등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영향

을 많이 받을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지만,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계층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육료 지원의 한계 효과는 낮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료 지원의 영향을 받았을 계층 일부가 양육수당 혜택으로 전환했다면 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다른 설명으로는 2012년 이후 각 시도별로 보육료 혜택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표 8-6〉 양육수당 지원이 t 년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t-1$ 년도의 설명변수	추가 통제변수 없음	전년도 합계출산율 및 연도 더미 통제	시도 고정 효과 모형		First- Difference GMM 모형
			추가 설명 변수 미통제	설명변수 통제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모형 3-4)	(모형 3-5)
Panel B: 양육수당 혜택 지수와 보육료 혜택 지수 함께 통제					
양육수당 혜택 지수	-0.1658** (0.0752)	0.0912 (0.0535)	0.0555 (0.0431)	0.1398*** (0.0388)	0.1353*** (0.0301)
보육료 혜택 지수	0.2828 (0.2098)	0.0816** (0.0334)	-0.0501 (0.1054)	0.1517 (0.0982)	0.1461* (0.0764)
표본 수	80	80	80	80	64
Adjusted R2	0.069	0.991	0.995	0.997	
Panel C: 보육료 지원 혜택 지수					
보육료 혜택 지수	0.1112 (0.1377)	0.0860* (0.0404)	-0.0234 (0.0996)	0.1379 (0.1079)	0.1901** (0.0806)
표본 수	80	80	80	80	64
Adjusted R2	0.016	0.990	0.995	0.996	

* $p<0.1$, ** $p<0.05$, *** $p<0.01$

주: 1) 각 회귀분석은 2010-2015년 자료를 이용함.

2) 각 분석 모형은 〈표 8-4〉의 분석 모형과 동일함.

3) Panel B와 C에서는 보고한 변수 외에도 모든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으나, 지면 제약으로 생략함.

다음으로 보육료 혜택 지수와 양육수당 혜택 지수가 출산 순위별 출산율과 갖는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시도 고정 효과 모형과 First-Difference GMM 모형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양육수당 혜택 지수의 경우 GMM 모형의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시도

고정 효과 모형만을 적용하였다. 출산 순위별 출산율은 각 연도/시도별 20~39세 여성 인구 천 명당 출산 순위별 신생아 수로 계산하였다. 20~39세가 주요 출산 연령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료 혜택 지수는 2002~2015년 기간 동안 셋째아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아도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았다. 2010년 이후로 분석을 제한하면 이 같은 보육료 지원의 양(+)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양육수당 혜택 지수는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사업 모두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관측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보육정책이 이미 자녀를 둔 부모의 추가 자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표 8-7〉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 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영향

종속변수: t 년도의 출생 순서별 신생아 수 $\div$ 20~39세 여성 인구 $\times$ 1000			
$t-1$ 년도의 설명변수	첫째아 (1)	둘째아 (2)	셋째아 (3)
Panel A: 분석 기간 - 출산율 기준 2002~2015년			
보육료 혜택 지수	0.0274 (0.3784)	1.1262 (0.6917)	1.1401** (0.4264)
Panel B: 분석 기간 - 출산율 기준 2011~2015년			
보육료 혜택 지수	-4.6108*** (1.4759)	2.6597 (1.7091)	1.0074 (0.8063)
양육수당 혜택 지수	3.2758 (1.9644)	1.6429** (0.6866)	1.1897** (0.4253)

* $p<0.1$, ** $p<0.05$, *** $p<0.01$

주: 1) 식 (8-4)를 추정한 〈표 8-4〉와 〈표 8-5〉 모형 (4)의 시도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함.

2) 연도 더미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전년도 값을 통제함.

3) 주요 설명변수만을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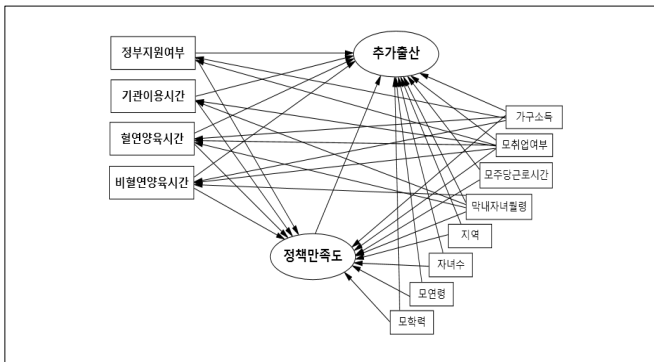
4) 괄호 안의 값은 시도 단위에서 cluster한 추정 계수의 표준 오차임.

제2절 개인의 보육정책 이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분석틀

여기에서는 여러 형태의 돌봄 지원이 개별 가구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모형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기관 이용 시간, 정부 지원과 대체성을 가진 다른 돌봄서비스로서 혈연 양육 시간과 비혈연 양육 시간을 포함하였다. 한편, 보육 지원 정책 만족도를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림 8-3]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른 연구 모형



경로분석은 서비스 이용 변인인 독립 변수가 추가 출산 의사에 직접적으로 또는 정책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경로계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을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²³⁾을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경로분석은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한 자녀와 두 자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2009년 및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에 앞서 조절변수인 조사 연도(2009년, 2012년)에 따른 측정 동일성²⁴⁾을 검증한 결과, 각 분석 대상에서 제약 모델(constrained model)과 자유 모델(free model, unconstrained model) 간의 χ^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조절변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과 2012년 연구 모형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한편, 2009년과 2012년 보육 지원 정책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2009년 조사 당시에는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전액, 하위 소득 50% 초과~60%까지는 기준 단가의 60%, 하위 소득 60% 초과~70%까지는 기준 단가의 30%를 각각 지원하였다. 2012년 조사 당시(하반기)에는 만 5세와 영아에게는 무상 보육이 시행되었고,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에서 제외된 시점이었다. 연도변수가 조절변수로 효과가 없는 것은 이러한 보육 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RMSEA가 비교적 높아서 양호한 수준은 아니지만, CFI가 양호한 수준이다.²⁵⁾ CFI 지수 등이 통제변수가 포

23)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모수 추정치의 표본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임의 표본(random sample)을 모집단으로 대체로 취급하여 정해진 수만큼 재표본 추출(resampling)을 하여 표본 부트스트랩 추정치와 표본 오차를 얻는 방법임.

24)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델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석임.

25) CFI는 모델의 복잡성에 대해 덜 민감하고, 표본 크기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장

함된 모형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 연령, 모 학력 등 일부 통제 변수와 정부 지원 여부나 서비스 이용 변인과 공분산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표 8-8).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0.5 이하로 나타나서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표 8-9).²⁶⁾

〈표 8-8〉 연구 모델 모형 적합도

분석대상	연도	CMIN	df	GFI	CFI	TLI	RMSEA
전체	2009년	715.709	20	.962	.906	.635	.117
	2012년	855.777	20	.956	.893	.583	.129
한 자녀 가구	2009년	275.034	16	.961	.910	.627	.127
	2012년	367.384	16	.951	.888	.538	.147
두 자녀 가구	2009년	286.831	16	.965	.907	.614	.117
	2012년	326.423	16	.961	.894	.561	.127

주: 모형 적합도는 조사자가 수집한 데이터와 모델 간의 일치도를 의미함.

〈표 8-9〉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 전체

구분	1	2	3	4	5	6	7
2009년 전체							
1. 지역	1.000						
2. 자녀 수	-0.063 **	1.000					
3. 막내 자녀 월령	-0.002	0.093 ***	1.000				
4. 모 연령	0.023	0.189 ***	0.417 ***	1.000			
5. 모 학력	0.111 ***	-0.081 ***	-0.071 ***	0.050 *	1.000		
6. 모 취업 여부	0.023	-0.043 *	0.172 ***	0.106 ***	0.135 ***	1.000	
7. 가구 소득	0.073 ***	0.013	0.065 ***	0.121 ***	0.435 ***	0.331 ***	1.000
2012년 전체							
1. 지역	1.000						
2. 자녀 수	-0.111 ***	1.000					
3. 막내 자녀 월령	-0.003	0.128 ***	1.000				
4. 모 연령	0.037	0.299 ***	0.443 ***	1.000			
5. 모 학력	0.071 ***	-0.122 ***	-0.070 ***	0.047 *	1.000		
6. 모 취업 여부	-0.006	-0.022	0.136 ***	0.035	0.124 ***	1.000	
7. 가구 소득	0.015	0.022	0.108 ***	0.162 ***	0.411 ***	0.351 ***	1.000

* p<0.05, ** p<0.01, *** p<0.001

점을 가지고 있음(우종필, 2012 p.367-268).

26) 한 자녀 가구 및 두 자녀 가구 대상 경로분석에서도 통제변수 간의 상관성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관계수와 별 차이 없이 모두 0.5 이하로 나타남.

2. 실증 분석 결과

가. 전체 가구 대상

전체 가구 대상 경로분석 결과, 2009년 모형에서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기관 이용 시간의 직접 효과(-0.04)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였고, 정부 지원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두 변인 모두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012년 모형에서는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독립 변인 중 기관 이용 시간 β 값이 0.004로 정책 만족도를 매개로 출산 의사에 간접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0〉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전체 가구 대상)

구분	2009년			2012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정부 지원 여부	0.014	0.006	0.020	0.021	0.000	0.022
기관 이용 시간	-0.040 *	-0.001	-0.042	0.030	0.004 *	0.034
혈연 양육 시간	0.027	0.001	0.028	0.016	-0.001	0.015
비혈연 양육 시간	0.023	0.000	0.023	-0.031	0.000	-0.031
정책 만족도	0.022	0.000	0.022	0.040 *	0.000	0.040 *
지역	-0.036 **	-0.001	-0.037 *	0.003	-0.002 *	0.001
자녀 수	-0.389	0.000	-0.389 **	-0.401 **	0.000	-0.400 **
막내 자녀 월령	-0.103	-0.027 †	-0.130 **	-0.131 **	0.004	-0.127 **
모 연령	-0.205	-0.001	-0.205 **	-0.16 **	-0.001	-0.161 **
모 학력	0.038	-0.001	0.037 †	0.025	0.000	0.025
모 취업 여부	-0.047 *	0.008	-0.039 *	-0.046 *	0.015	-0.031 †
가구 소득	-0.015	-0.005	-0.020	-0.002	0.000	-0.003

†p<0.10, *p<0.05, **p<0.01, ***p<0.001

통제변수 중에서 주목할 변인은 모의 취업이다. 모의 취업은 추가 출산 의사와 음(-)의 관계를 갖는다.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 취업률과 출산 수준이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외국 국가 단위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의 취업과 정부 지원, 기관, 혈

연, 비혈연 서비스 이용은 양(+)의 관련성이 있다. 정책 만족도는 2009년에 양(+)의 관계이나 2012년에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영아 무상 보육으로 이용 시간은 길어졌으나 무차별적인 정책이 취업모 역차별로 정책 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만족도와 추가 출산 의사와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다소나마 있었던 간접 효과도 미미해진 것으로 파악된다(표 8-11 참조).

나. 1자녀 가구 대상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 2009년 모형에서는 정책만족도 이외에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지원 여부가 1.8%로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기관 이용 시간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0.6%의 간접 효과를 보였다. 2012년 모형에서는 기관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과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직접보다는 정책 만족도를 통한 간접 효과의 유의도가 더 크다. 2012년 영아 무상 보육이나 유치원 방과 후 등으로 기관 이용 시간이 다소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취업 부모의 이용 시간 만족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아 무상 보육이 취업 모의 정책 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비혈연 양육 시간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 정책 만족도는 영향력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두 연도 모두에서 여전히 추가 출산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8-12 참조).

〈표 8-11〉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전체 가구 대상)

경로	2009		2012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B)
정부 지원 여부 → 정책 만족도	0.287	0.561***	0.009	0.020
기관 이용 시간 → 정책 만족도	-0.059	-0.015*	0.101	0.035*
비혈연 양육 시간 → 정책 만족도	-0.006	-0.005	0.000	0.000
혈연 양육 시간 → 정책 만족도	0.039	0.010†	-0.035	-0.016
정부 지원 여부 → 추가 출산	0.014	0.014	0.021	0.018
기관 이용 시간 → 추가 출산	-0.040	-0.006†	0.030	0.004
혈연 양육 시간 → 추가 출산	0.027	0.003	0.016	0.003
비혈연 양육 시간 → 추가 출산	0.023	0.009	-0.031	-0.014†
정책 만족도 → 추가 출산	0.022	0.011	0.040	0.014*
통제변수 투입 결과				
모 취업 여부 → 정부 지원 여부	0.181	0.175***	0.232	0.238***
가구 소득 → 정부 지원 여부	-0.261	-0.084***	-0.108	-0.038***
막내 자녀 월령 → 기관 이용 시간	0.476	0.081***	0.370	0.055***
모 취업 여부 → 기관 이용 시간	0.299	2.289***	0.325	2.286***
막내 자녀 월령 → 혈연 양육 시간	-0.166	-0.026***	-0.159	-0.018***
모 취업 여부 → 혈연 양육 시간	0.434	3.065***	0.343	1.800***
가구 소득 → 혈연 양육 시간	0.068	0.160***	0.090	0.164***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 양육 시간	-0.097	-0.005***	-0.070	-0.003***
모 취업 여부 → 비혈연 양육 시간	0.140	0.321***	0.120	0.240***
가구 소득 → 비혈연 양육 시간	0.071	0.055***	0.093	0.065***
지역 → 정책 만족도	-0.053	-0.126***	-0.040	-0.118***
자녀 수 → 정책 만족도	0.010	0.014	0.005	0.008
막내 자녀 월령 → 정책 만족도	-0.026	-0.001	-0.210	-0.011***
모 연령 → 정책 만족도	-0.026	-0.005	-0.027	-0.007
모 학력 → 정책 만족도	-0.037	-0.033†	-0.007	-0.008
모 취업 여부 → 정책 만족도	0.103	0.193*	-0.057	-0.137***
가구 소득 → 정책 만족도	-0.152	-0.096***	0.088	0.074***
지역 → 추가 출산	-0.036	-0.042*	0.003	0.003
자녀 수 → 추가 출산	-0.390	-0.263***	-0.401	-0.247***
막내 자녀 월령 → 추가 출산	-0.102	-0.002***	-0.131	-0.002***
모 연령 → 추가 출산	-0.204	-0.020***	-0.160	-0.015***
모 학력 → 추가 출산	0.040	0.017*	0.025	0.010
모 취업 여부 → 추가 출산	-0.077	-0.072*	-0.046	-0.040*
가구 소득 → 추가 출산	-0.016	-0.005	-0.002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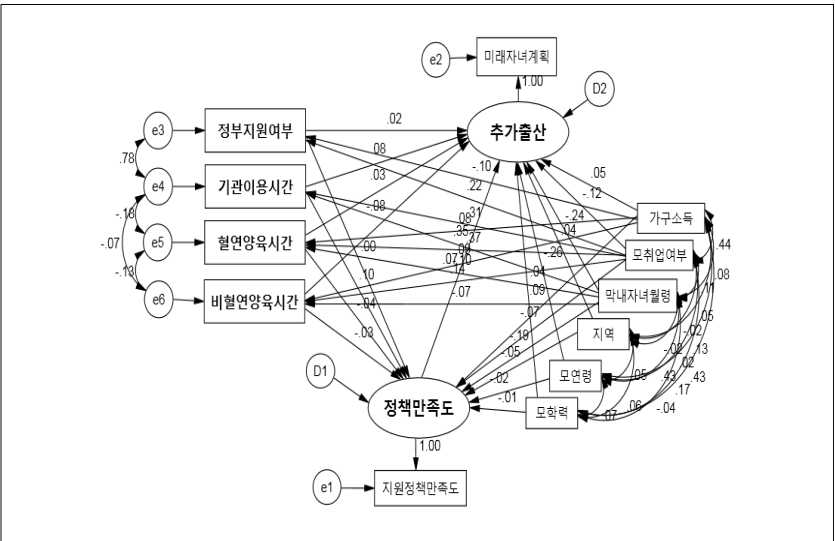
†p<0.10, *p<0.05, **p<0.01, ***p<0.001

〈표 8-12〉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1자녀 가구 대상)

구분	2009년			2012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정부 지원 여부	-0.012	0.018 *	0.006	0.021	0.000	0.021
기관 이용 시간	-0.058	-0.006 †	-0.064	0.082	0.007 *	0.089 †
혈연 양육 시간	0.032	0.003	0.035	0.030	-0.003	0.027
비혈연 양육 시간	0.015	0.000	0.015	-0.077 **	-0.002	-0.079 **
정책 만족도	0.063 *	0.000	0.063 *	0.067 **	0.000	0.067 *
지역	-0.041	-0.002	-0.043 †	0.036	-0.003 †	0.032
막내 자녀 월령	-0.157 **	-0.042 †	-0.199 **	-0.238 **	0.022	-0.217 **
모 연령	-0.157 **	0.000	-0.156 **	-0.257 **	-0.001	-0.258 **
모 학력	0.054	-0.006 *	0.048	0.045	-0.001	0.044
모 취업 여부	-0.104 *	0.005	-0.098 **	-0.120 **	0.026	-0.093 **
가구 소득	0.029	-0.004	0.026	0.049	-0.001	0.048

†p<0.10, *p < 0.05, **p<0.01, ***p<0.001

〔그림 8-4〕 2012년 경로 모형(1자녀 가구 대상)



〈표 8-13〉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1자녀 가구 대상)

경로	2009		2012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B)
정부 지원 여부 → 정책 만족도	0.286	0.562***	0.001	0.003
기관 이용 시간 → 정책 만족도	-0.095	-0.021 †	0.101	0.034 †
비혈연 양육 시간 → 정책 만족도	0.049	0.010	-0.032	-0.035
혈연 양육 시간 → 정책 만족도	0.003	0.002	-0.038	-0.015
정부 지원 여부 → 추가 출산	-0.012	-0.014	0.021	0.021
기관 이용 시간 → 추가 출산	-0.058	-0.008	0.082	0.012
혈연 양육 시간 → 추가 출산	0.032	0.004	0.030	0.005
비혈연 양육 시간 → 추가 출산	0.015	0.006	-0.077	-0.037**
정책 만족도 → 추가 출산	0.063	0.038	0.067	0.029*
통제변수 투입 결과				
모 취업 여부 → 정부 지원 여부	0.231	0.197***	0.224	0.229***
가구 소득 → 정부 지원 여부	-0.305	-0.088***	-0.100	-0.035***
막내 자녀 월령 → 기관 이용 시간	0.520	0.095***	0.354	0.057***
모 취업 여부 → 기관 이용 시간	0.275	2.064***	0.307	2.179***
막내 자녀 월령 → 혈연 양육 시간	-0.138	-0.028***	-0.100	-0.014***
모 취업 여부 → 혈연 양육 시간	0.493	4.019***	0.374	2.334***
가구 소득 → 혈연 양육 시간	0.062	0.170*	0.081	0.174*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 양육 시간	-0.078	-0.005*	-0.072	-0.004*
모 취업 여부 → 비혈연 양육 시간	0.136	0.332***	0.137	0.300***
가구 소득 → 비혈연 양육 시간	0.080	0.066*	0.092	0.070**
지역 → 정책 만족도	-0.037	-0.082	-0.051	-0.163 †
막내 자녀 월령 → 정책 만족도	-0.046	-0.002	0.091	0.076*
모 연령 → 정책 만족도	0.007	0.001	-0.016	-0.004
모 학력 → 정책 만족도	-0.093	-0.073**	-0.009	-0.011
모 취업 여부 → 정책 만족도	0.031	0.053	-0.186	-0.010***
가구 소득 → 정책 만족도	-0.082	-0.046*	-0.069	-0.166 †
지역 → 추가 출산	-0.041	-0.056	0.036	0.050
막내 자녀 월령 → 추가 출산	-0.157	-0.004***	-0.238	-0.006***
모 연령 → 추가 출산	-0.157	-0.017***	-0.257	-0.030***
모 학력 → 추가 출산	0.054	0.026	0.045	0.022
모 취업 여부 → 추가 출산	-0.104	-0.104*	-0.120	-0.125**
가구 소득 → 추가 출산	0.029	0.010	0.049	0.018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다. 2자녀 가구 대상

두 자녀를 둔 가구의 추가 출산 의향에는 2009년 모형에서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혈연의 양육 시간이 총효과 면에서 셋째아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 만족도를 통해 추가 출산 의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정부의 지원 여부이다. 정책 만족도는 추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기관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책 만족도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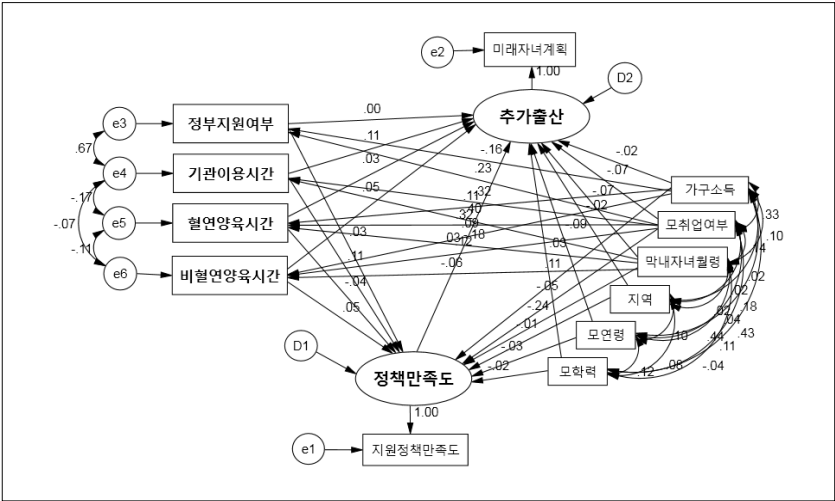
〈표 8-14〉 경로계수: 추가 출산 의사에 대한 효과(2자녀 가구 대상)

구분	2009년			2012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정부 지원 여부	0.056 [†]	-0.015 [†]	0.041	0.002	0.001	0.003
기관 이용 시간	-0.013	0.001	-0.011	0.112 [*]	0.003	0.115 [*]
혈연 양육 시간	0.048	-0.001	0.047 [†]	0.034	-0.001	0.032
비혈연 양육 시간	0.015	0.001	0.016	0.047	0.002	0.048
정책 만족도	-0.057 [†]	0.000	-0.057 [†]	0.033	0.000	0.033
지역	-0.037	0.003 [†]	-0.034	-0.022	0.000	-0.023
막내 자녀 월령	-0.028	-0.015	-0.043	-0.067 [†]	0.030	-0.037
모 연령	-0.190 ^{**}	0.002	-0.188 ^{**}	-0.088 [*]	-0.001	-0.089 ^{**}
모 학력	-0.015	0.001	-0.014	0.025	-0.001	0.025
모 취업 여부	-0.065 [†]	0.021	-0.044	-0.074 [†]	0.052 ^{**}	-0.023
가구 소득	-0.044	0.002	-0.042	-0.017	0.011	-0.006

†p<0.10, *p<0.05, **p<0.01, ***p<0.001

모의 취업이 셋째아 추가 출산 의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2009년에는 혈연 양육 시간 그리고 2012년에는 기관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사에 직접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정부 지원이나 기관 이용이 정책 만족도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5] 2012년 경로 모형(2자녀 가구 대상)



〈표 8-15〉 통제변수 포함 경로분석 결과(2자녀 가구 대상)

경로	2009		2012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B)
정부 지원 여부 → 정책 만족도	0.269	0.530***	0.027	0.066
기관 이용 시간 → 정책 만족도	-0.023	-0.006	0.107	0.039*
비혈연 양육 시간 → 정책 만족도	0.012	0.004	0.046	0.057
혈연 양육 시간 → 정책 만족도	-0.025	-0.024	-0.040	-0.021
정부 지원 여부 → 추가 출산	0.056	0.037	0.002	0.001
기관 이용 시간 → 추가 출산	-0.013	-0.001	0.112	0.008*
혈연 양육 시간 → 추가 출산	0.048	0.005	0.034	0.003
비혈연 양육 시간 → 추가 출산	0.015	0.005	0.047	0.011
정책 만족도 → 추가 출산	-0.057	-0.019†	0.033	0.006
통제변수 투입 결과				
모 취업 여부 → 정부 지원 여부	0.138	0.137***	0.230	0.231***
가구 소득 → 정부 지원 여부	-0.289	-0.096***	-0.163	-0.058***
막내 자녀 월령 → 기관 이용 시간	0.460	0.076***	0.404	0.058***
모 취업 여부 → 기관 이용 시간	0.296	2.266***	0.316	2.139***
막내 자녀 월령 → 혈연 양육 시간	-0.170	-0.024***	-0.178	-0.017***
모 취업 여부 → 혈연 양육 시간	0.419	2.758***	0.321	1.484***
가구 소득 → 혈연 양육 시간	0.024	0.054	0.109	0.178***

경로	2009		2012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화 계수 (B)
막내 자녀 월령 → 비혈연 양육 시간	-0.102	-0.004***	-0.060	-0.003*
모 취업 여부 → 비혈연 양육 시간	0.131	0.263***	0.120	0.240***
가구 소득 → 비혈연 양육 시간	0.072	0.048*	0.091	0.064**
지역 → 정책 만족도	-0.046	-0.112 [†]	-0.013	-0.039
막내 자녀 월령 → 정책 만족도	0.003	0.000	-0.237	-0.012***
모 연령 → 정책 만족도	-0.036	-0.009	-0.034	-0.010
모 학력 → 정책 만족도	-0.020	-0.018	-0.019	-0.023
모 취업 여부 → 정책 만족도	0.046	0.091	-0.050	-0.123
가구 소득 → 정책 만족도	-0.205	-0.135***	0.108	0.093**
지역 → 추가 출산	-0.037	-0.030	-0.022	-0.013
막내 자녀 월령 → 추가 출산	-0.028	0.000	-0.067	-0.001 [†]
모 연령 → 추가 출산	-0.190	-0.015***	-0.088	-0.005**
모 학력 → 추가 출산	-0.015	-0.005	0.025	0.006
모 취업 여부 → 추가 출산	-0.065	-0.043 [†]	-0.074	-0.035*
가구 소득 → 추가 출산	-0.044	-0.010	-0.017	-0.003

† $p < 0.10$, * $p < 0.05$, ** $p < 0.01$, *** $p < 0.001$

제3절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 지원 그리고 출산을 제고를 목적으로²⁷⁾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보육정책의 주된 내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 두 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였지만, 점차 보편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영유아 보육료는 2012년부터 그리고 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두 사업

27)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1.14.] [법률 제4328호, 1991.1.14., 제정] 제1조(목적) 참조.

의 지원 규모는 2000년대를 걸쳐 꾸준히 증가해 왔고, 보편 지원으로 확대된 2012~2013년 이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육·교육 기관을 확충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확대하였다. 인적 돌봄 지원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하여 확대 공급하여 왔다.

한국 사회에서 보육정책이 합계출산율의 증가에 기여를 했는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합계출산율(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합계출산율 증가의 75%를 설명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도 2010~2015년간 합계출산율을 약 0.08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산율에서 의미미하여 보육료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육정책과 합계출산율 간 양(+)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개인 또는 개별 가구들이 보육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거시-미시 연계 구조를 가진다. 실제 1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증가가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그를 통해 추가 출산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정책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지 않으나, 정부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높다. 특히 자녀(1자녀, 2자녀)를 두고 있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취업 모 가정들이 무상 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새로이 편입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어져(또는 그로 인하여 정책 만족도가 높아져)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 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어졌지만 보육정책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과 달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보육정책의 보편화로 인하여 취업 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취업 모의 경우에는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결국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상 보육정책 확대는 영아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려 주고, 그로 인해 정책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출산을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한 취업 집단도 무상 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족도)를 높여 추가 출산 이행으로 이어져 전체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요컨대, ‘보육정책 확대-합계출산율 제고’의 거시-거시 간 연계 구조는 ‘보육정책 확대-어린이집 이용 시간, 만족도 증가-합계출산율 제고’라는 거시-미시-거시의 연계 구조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합계출산율은 1.2명 수준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효과가 줄어들고, 다른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에 대해 몇몇의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정적 효과가 모든 시기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효과는 2010년 이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즉, 셋째아 출산율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지속되고 있지만, 둘째아 출산율에 대한 정적 효과는 2010년 이후에 사라진다. 이는 2012년부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효율성이 낮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계층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단순히 어린이집 정원을 늘린다거나 민간 어린이집 설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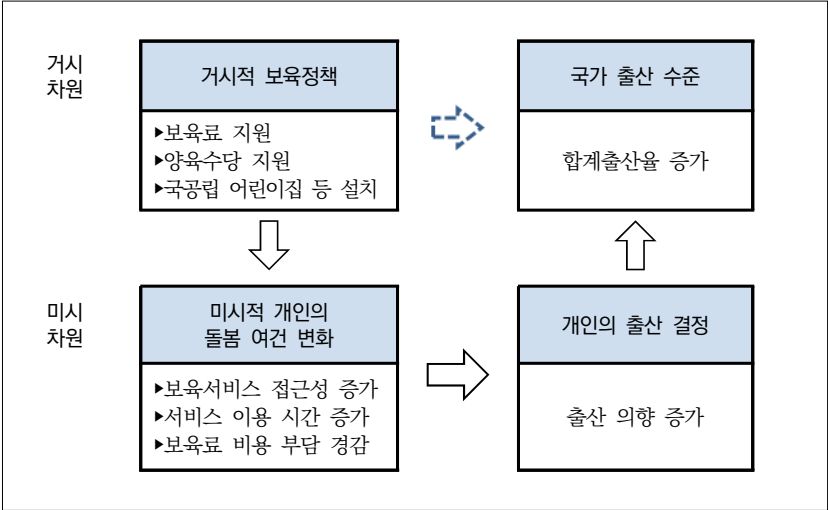
을 확충하는 양적인 접근은 오히려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요자의 선호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셋째, 자녀 돌봄 방식은 국가 지원, 가구 경제력, 부모의 근로 형태, 자녀 연령, 자녀 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양육수당 지원, 일부 소득 계층 대상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돌봄 외에도 베이비시터, 조부모 등 혈연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돌봄 유형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간 불일치, 비용 부담,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가 발생할 경우 가구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다.

넷째, 2자녀 가구의 경우 (아동의)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양육은 출산 의향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다. 이는 특히 취업 모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시설 중심의 공적 돌봄 지원 체계만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혈연 관계에 의한 돌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1자녀 가구의 경우 비혈연인을 통한 양육 시간 증가는 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비용 지불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에 의한 결과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의 지원 대상을 맞벌이 부부 등이 집중되어 있는 중산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6]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 9 장

성 평등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인의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1. 이론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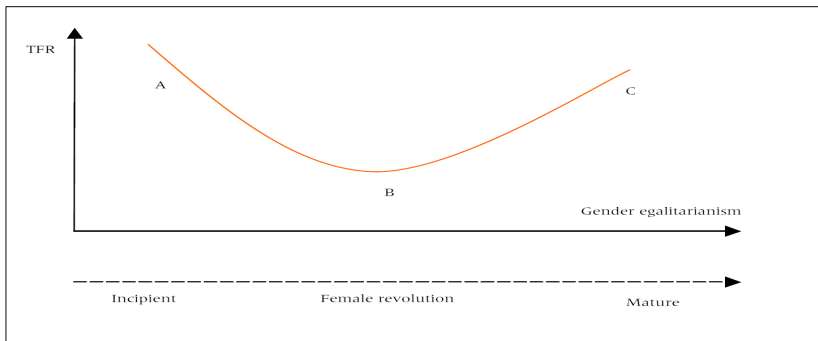
성 평등 수준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 문화적 및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 국가에서 출산 수준은 성 평등 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할 것인가?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 두 수준 간의 관계는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적인 이론과 문화적 이론으로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베커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이론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혼인 감소, 이혼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Becker, 1973). 제2의 인구변천이론에서는 개인주의의 확산 등 문화적 변화를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van de Kaa, 1987; Lesthaghe, 1995). 이들 이론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 틀로는 최근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도 반등하고 있다. 반면, 미시적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

간의 부정적 관계가 관찰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커식의 경제학적 모형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퇴보하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결혼, 모성, 이상자녀수 등 가족 가치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Scott and Braun, 2006). 문화적 이론 또한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출산율 변화의 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9-1]은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서 가정하는 성 평등주의와 출산율의 관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성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에 U자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한 임계점(tipping point)을 지나게 되면 성 평등주의의 확산이 출산율 반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며, 거시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인구학적 접근과 친화성이 있다(McDonald, 2002).

[그림 9-1]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서 가정하는 성 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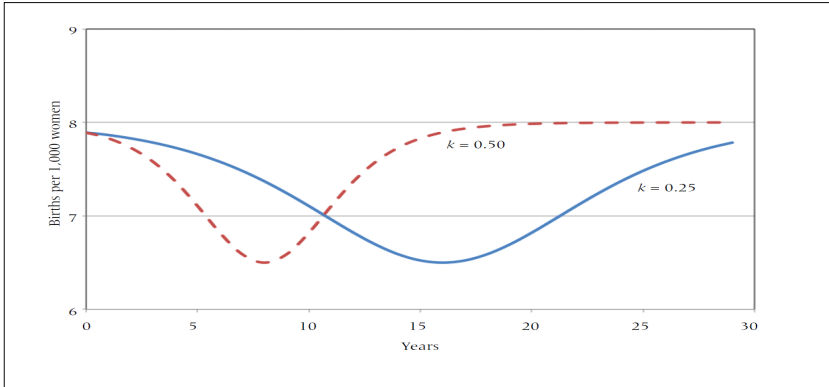
자료: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p.9.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은 기본적으로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에 기초하여 규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 가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p.8-2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에 맞춰서 행동한다. 안정적인 평형 상태(stable equilibrium)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 출현하고 재생산된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traditional) 집단이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는데,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변화로 기존의 규범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규범의 혼란 등 불안정한 평형 상태(unstable equilibrium)로 진입하게 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충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 혹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전통적인 집단의 절대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는 집단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소된다. 즉, 새로운 규범이 확산(diffusion)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안정적인 평형 상태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지배적인 규범 변화의 동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성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변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가정한다. 둘째, 교육 기회의 확대나 다른 사회와의 접촉 등 외부적 충격(exogenous shock)이나 내부적인 변화(endogenous change)로 인해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이 등장한다. 셋째, 성 평등주의적 태도

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확산된다. 이때 변화의 양상은 로지스틱 커브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즉,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집단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증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수준과 계층 간 통합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계층 간 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확산 과정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를 지나게 되고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는 이 단계에서 전통적인 집단의 출산율에는 변화가 없고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는데(p.18), 이는 확산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집단은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없거나(non-susceptible) 성 평등주의적 태도에 노출된 적이 없는(not exposed) 집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은 성 평등주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데,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지닌 집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출산율이 증가한다(p.19). 그 결과 성 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은 [그림 9-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자형 관계를 보여 주게 되고, 그 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신뢰수준과 계층 간 통합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성 평등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출산율의 하락 및 회복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성 평등주의의 확산이 느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보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2]는 이러한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k 값은 성 평등주의의 확산 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9-2] 성 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른 출산율 변화 패턴



자료: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p.19.

규범의 변화를 새로운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은 규범의 변화와 개인의 선호의 변화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성 역할과 관련된 개인의 선호를 규정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생활 양식 선호(lifestyle preference)를 여성의 성 역할 태도, 직업 등을 설명하는 중심 변수로 사용하는 하킴(Hakim, 2000)의 선호 이론(Lifestyle preference theory)은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Hakim에 따르면 피임 혁명, 남녀 간 기회 균등 혁명, 화이트칼라 및 파트타임 직업의 확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이 진행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생활 양식 선호가 가족 구성 및 출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akim, 2000). Hakim은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일-중심적 여성, 가정-중심적 여성, 적응적 여성 등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생활 양식 선호가 존재하며, 이러한 선호에 따라 교육지속, 성 역할 태

도, 출산, 직업 선택 등이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과 선호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의 경우 성 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라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 평등주의의 확산은 선호 집단(preference group)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와 연결된다. 성 평등주의적 태도가 확산된다는 것은 결국 일-중심적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정-중심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킴의 선호 집단 구분을 활용하여 성 평등주의의 확산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단, 두 개념적 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선호의 변화 가능성 여부이다. 다중 상태 평형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규범의 확산이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생활 양식 선호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반면, 하킴의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호의 안정성을 가정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선호 형성에는 다양한 구조적·규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cRae, 2003; Tomlinson, 2006), 이는 생애 과정을 통해서 선호가 변화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선호 집단의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선호 이론의 또 다른 약점은 선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다. 생활 양식 선호가 개인의 고유한 기질의 한 측면이라면, 이러한 가정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행동이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Crompton and Harris, 1998). 즉, 개인의 노동시장 참가 경험, 가족 형성 경험, 출산 경험 등이 생활 양식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생활 양식 선호가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생활 양식 선호 자체가

아니라 선호 실현(preference realization)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활 양식 선호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생애 과정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표본 조사 자료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호 실현은 이보다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선호 실현을 활용하는 것은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을 검증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선호 실현의 상대적 비중은 성 평등주의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2. 실증 분석

가. 분석 방법

성 평등 수준과 출산 간의 거시적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의 혼합 효과 선형 모형(Mixed-effects linear model)을 적용하였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은 기본적으로 거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 평등주의와 출산율 모두 거시적 수준에서 측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 평등주의의 확산이나 출산율의 변화 모두 개인 수준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개념임으로 거시적 변인과 개인 수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이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수준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거시적 이론이 간과하기 쉬운 개인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다중 상태 평형 이론의 단순 모형은 성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 또한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한다(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p.18).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선호 실현 여부는 이러한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성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여성 중 한 여성은 본인의 선호를 실현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여성은 본인의 선호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출산율 차이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내부의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수준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인 수준의 자료와 국가 수준의 자료가 필요하다. 개인 수준 자료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의 2012년 가족 및 변화하는 성 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모듈을 이용하였다. ISSP는 한국을 포함한 40개 국가의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통해 개인 단위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표본 크기는 국가별로 1,000~2,500명이며, 예외적으로 중국은 6,000여 케이스로 크다. 국가 수준의 거시변수들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도출하였으며, OECD 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세계 은행(World Bank)의 젠더 통계데이터베이스(Gender Statistics Database)를 통해 보완하였다. 거시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저개발 19개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가들은 21개국이다.²⁸⁾ 표본은 20~45세 가임기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분석 대상 자녀수는 이상자녀수와 거주 자녀수로 구분하였다. 이상자녀수는 한 가족에게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인지를 묻는 문항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극단값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10인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28)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독일, 영국을 포함한다.

(95 사례)는 10인으로 재조정하였다. 거주 자녀 수는 가구 내 거주하고 있는 1세~학령기 아이들과 학령기~18세 아이들을 질문한 두 문항의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출생 자녀 수의 대리(proxy)변수로 이용하였다. 국가별 거주 자녀 수의 평균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수(unweighted zero-order correlation)는 0.77로 높은 편이다. 다만, 거주 자녀 수는 실제로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친인척의 자녀 등을 포함하고, 반대로 본인이 출산한 자녀 중 이혼 배우자나 친인척과 동거 등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거나 사망한 자녀들이 제외되어 있을 수 있어 실제 출산 자녀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 수준의 독립 변수들은 연령, 혼인 상태, 교육, 고용 상태, 성 역할 태도이다. 여성의 연령에 따라 거주 자녀 수가 증가하다가 직장 등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 감소하는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여 연령의 제곱항을 적용하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을 기준 범주로 하여 이혼/사별과 미혼 상태를 각각 더미변수화하였다. 교육은 교육을 받은 연수로 측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평균으로 중앙화(centering)하였다. 고용 상태도 더미변수화(0=미취업, 1=취업)하였다. 성 역할 태도는 “남성의 일은 가계 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이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평등주의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노동시장 변수는 여성의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남녀 임금 격차, 여성 단시간 근로자 비율 등을 포함시켰다. 이들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2011)를 이용하였으며, 다만 일본, 한국, 네덜란드 및 미국의 여성 고용 중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세계은행의 Gender Statistics Database(2011)를 이용하였다.

문화적 변수는 성 평등주의의 문화가 확산된 정도로 성 역할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격차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ISSP 문항 중 “남성의 일은 가계 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이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남녀 간 격차가 적을수록 보다 성 평등주의적임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 결혼제도의 안정성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는 시민적 파트너십 관계, 혼인 혹은 파트너와 별거 상태 또는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제도의 안정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의 중요한 한계는 추정된 계수들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의 선호 및 선호 실현이 생애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인과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혼인 및 출산의 경험이 이들의 선호 및 선호 실현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역인과성의 문제에서 이 분석은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모형들에서 얻을 수 있는 추정치들은 선호 실현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시점 혹은 여러 국가에서 수집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국가별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나. 실증 분석 결과

이상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수준 분석 결과, 미시변수들의 효과만을 나타낸 <모형 1-1>에서 주요한 관심 변수로 성 평등주의적일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모형 1-2〉는 〈모형 1-1〉에 거시변수들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 임금 격차, 남녀 간 문화적 차이 등이 이상자녀수의 절편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와 관련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남녀 임금 격차 모두 이상자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문화적 변수인 남녀 간 성 역할 인식 격차 역시 이상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표 9-1〉 이상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 다수준 분석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연령	-0.044(0.013) ***	-0.044(0.013) ***	-0.043(0.013) ***
연령 제곱	0.001(0.000) ***	0.001(0.000) ***	0.001(0.000) ***
이혼·사별	-0.016(0.034)	-0.017(0.034)	-0.019(0.034)
미혼	-0.096(0.023) ***	-0.099(0.023) ***	-0.098(0.023) ***
교육 연수	-0.009(0.004) **	-0.009(0.004) **	0.009(0.008)
성 평등주의적 태도	-0.042(0.009) ***	-0.044(0.009) ***	-0.030(0.016) *
취업	-0.105(0.021) ***	-0.105(0.021) ***	-0.084(0.044) *
GDP/1000		0.006(0.003) **	0.006(0.003)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0.009(0.014)	0.01(0.014)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²		0.000(0.000)	0.000(0.000)
남녀 임금 격차		0.001(0.006)	0.004(0.006)
가족 현금 지원		0.096(0.057) *	0.111(0.060) *
가족 서비스		0.183(0.071) ***	0.183(0.076) **
남녀 간 성 역할 인식 격차		0.202(0.372)	0.449(0.428)
혼외관계		0.184(0.907)	0.05(0.903)
취업X현금 지원			-0.029(0.030)
취업X가족 서비스			0.009(0.039)
교육X남녀 임금 격차			-0.001(0.001) **
성 평등주의X남녀 성 인식 격차			-0.057(0.060)
Constant	3.469(0.217) ***	3.184(0.454) ***	3.028(0.456) ***
무선 효과			
SD(상수)	0.045	0.158	0.157
SD(Residual)	0.537	0.733	0.733
Observations	6,290	6,290	6,290
Number of groups	21	21	21

* $p < 0.1$, ** $p < 0.05$, *** $p < 0.01$

〈표 9-1〉의 〈모형 1-3〉은 거시변수들과 미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유일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여성의 교육과 남녀 임금 격차의 상호작용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사회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에 비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형 2-1〉에서 여성의 성 역할 태도는 취업과 교육 수준과 함께 거주 자녀 수에 유의미하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2〉는 〈모형 2-1〉에 추가된 거시변수들의 절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2-1〉과 비교할 때 미시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은 큰 변화가 없으며,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 문화 변수들은 거주 자녀 수에 뚜렷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거주 자녀 수 간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이후 반등하는 패턴이 거주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남녀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일수록 거주 자녀 수가 줄어드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화적 변수를 보면, 남녀 간 성 역할 인식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에서 남성의 평균적 태도가 여성의 평균적 태도에 비해 보수적인 국가들에서 자녀 수가 적었다.

〈모형 2-3〉에서 거시-미시 상호작용 관계를 보면, 교육 수준과 남녀 임금 격차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면 교육 연수가 자녀 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게 줄어들어 유의성이 사라졌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매우 큰 편으로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 대비 10% 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자녀 수에 미치는

교육 연수의 부정적 기울기는 0.15씩 더 가파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2〉 거주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 다수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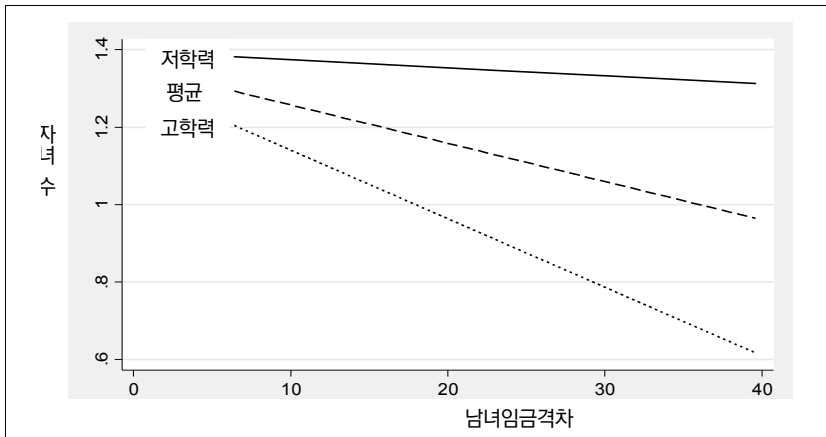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연령	0.186(0.018) ***	0.185(0.018) ***	0.185(0.018) ***
연령 ²	-0.002(0.000) ***	-0.002(0.000) ***	-0.002(0.000) ***
이혼, 사별	-0.324(0.047) ***	-0.323(0.047) ***	-0.324(0.047) ***
미혼	-0.909(0.032) ***	-0.911(0.032) ***	-0.904(0.032) ***
교육 연수	-0.031(0.005) ***	-0.030(0.005) ***	-0.008(0.011)
성 평등주의적 태도	-0.021(0.012) *	-0.026(0.012) **	0.019(0.024)
취업	-0.347(0.030) ***	-0.346(0.030) ***	-0.451(0.065) ***
GDP/1000		0(0.002)	0(0.002)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0.133(0.076) *	-0.170(0.074)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²		0.001(0.001) *	0.001(0.001) **
남녀 임금 격차		-0.013(0.005) ***	-0.010(0.005) **
가족 현금 지원		0.026(0.051)	0.181(0.056) ***
가족 서비스		0.293(0.060) ***	0.03(0.070)
남녀 간 성 역할 인식 격차		-0.849(0.320) ***	-0.057(0.470)
혼외관계		-1.657(0.725) **	-1.905(0.701) ***
취업X현금 지원			-0.212(0.040) ***
취업X가족 서비스			0.355(0.053) ***
교육X남녀 임금 격차			-0.002(0.001) **
성 평등주의X남녀 성 인식 격차			-0.218(0.102) **
Constant	-1.514(0.300) ***	3.476(2.641)	4.660(2.568) *
무선 효과			
SD(상수)	0.0558	0.115	0.110
SD(Residual)	1.001	1.001	0.996
Observations	6,290	6,290	6,290
Number of groups	21	21	21

* p<0.1, **p<0.05, ***p<0.01

[그림 9-3]에 개인 수준의 교육 연수 변수와 국가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해서 제시하였다. 여성의 교육 수준으로 저학력 집단은 각 국가의 평균 교육 연수보다 5년 덜 교육받은 집단이며, 평균 집단은 평균 교육 연수 집단, 고학력 집단은 평균 교육 연수보다 5년 더 교육받은 집단으로 임의 규정하였다. 저학력 집단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에 따른 자녀 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평균 학력 집단과 고학력 집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특히 고학력 집단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가 10% 포인트 정도로 낮을 경우 자녀 수가 1.2명 정도로 1.38명의 저학력 집단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남녀 임금 격차가 40% 포인트 정도로 높을 경우 자녀 수는 0.6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저학력 집단의 자녀 수에 비해 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9-3] 남녀 임금 격차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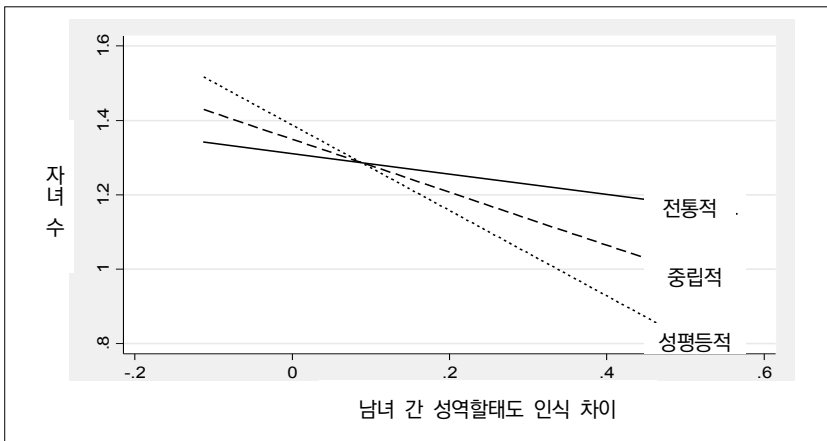


주: 저학력은 국가별 평균 교육 연수-5년, 평균 학력은 평균 교육 연수, 고학력은 평균 교육 연수 +5년을 의미함.

여성의 성 평등주의적 태도와 성 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자녀 수는 남녀 간 인식 차가 큰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분담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5점) '전통적 집단', 전혀 동의하지 않는(1점) '성 평등적 집단', 그저 그렇다(3점)는 '중립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 모두 남녀 간 성 역할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유사하나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전

통적 집단의 경우 남녀 간 성 역할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모두에 걸쳐 자녀 수가 1.2~1.35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 집단으로 이들은 성 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9-4] 남녀 인식 차이와 여성의 성 역할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제2절 개인의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 분석틀

성 평등주의적 접근과 선호 이론에 따라 여성의 성 평등주의적 인식을 출산 실천 행위와 추가 출산 의도를 설명하는 중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성 평등주의 가치관이 개인의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포

아송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즉, 출생아 수 분석의 경우에 다 수준 포아송 모형(Multi-level Poisson model) 그리고 추가 출산 의도 분석의 경우에 다수준 로짓 모형(Multi-level logit model)을 각각 적용하였다. 다수준 로짓 모형의 기본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ln(p/(1-p))] = \alpha_j + \beta_{kj} \times PR_{kij} + \gamma^k(\text{Control}_{lij}) \dots\dots\dots (9-1)$$

$$\alpha_j = \alpha + u_{\alpha j}, \quad u_{\alpha j} \sim N(0, \sigma_\alpha^2) \dots\dots\dots (9-2)$$

$$\beta_{kj} = \beta_k + u_{\beta kj}, \quad u_{\beta kj} \sim N(0, \sigma_{\beta k}^2) \dots\dots\dots (9-3)$$

(i: 개인, j: 집단 (국가 혹은 시기), PR: 선호 실현(preference realization) 유형으로 생활양식 선호(일-중심적, 가정-중심적)와 경제활동 참가 형태(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비참가)를 교차시켜 선호 실현 집단과 선호 비실현 집단으로 구분, Control_{kji}: 집단 j에 속한 개인 i가 갖는 통제변수값)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과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성 평등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2012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 ISSP에서와 동일하게 “남성의 일은 가계 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이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을 조사하였고, 본 분석에서는 응답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출생아수와 향후 추가 출산 의도를 적용하였다. 총출생아 수(children-ever born)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 행위가 누적된 결과로 주로 과거의 출산력을 나타낸다. 추가 출산 의도는 향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측정치라 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유배우 여성의 취업 여부, 유배우 여성과 남편의 연령 및 교육, 혼인 기간, 소득 수준, 가구 순재산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유배우 여성의 과거 실천 행위의 결과로서 총출생아 수를 현재의 인식(가치관)이나 특성과 연계시킬 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역인과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가치관이나 특성과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출산 의도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 의도와 출산 행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간극이다. 출산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지 않는 출산 또한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은 출산 의도가 향후 출산 행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지만 (Brinton, 2015), 원칙적으로 의도와 행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도록 한다.

2. 실증 분석 결과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성 역할 태도는 두 연도 모형 모두에서 출생아 수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12년 모형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2015년 모형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 역시 출생아 수와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취업 유배우 여성의 출생아 수가 비취업 유배우 여성보다 적었으며, 그 차이는 2015년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태도와 취업 상태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²⁹⁾ 이러한 결과는 개인 수준의 성 평등주의적 태도와 취업 여부가 출생아 수와 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2015년에 2012년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생아 수는 과거부터 누적된 출산 실천의 결과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학적인 모형의 주장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더불어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출산에 대한 부적인 영향이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29) 여성의 선호실현 구분은 성 평등주의적 태도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구분이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은 아들선호를 성 평등주의적 태도의 측정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기회비용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저출산이 지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3〉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생아 수 간 관계: 포아송 회귀분석

	2012(N=5,982)			2015(N=9,908)		
	b	s.e	p	b	s.e	p
성 역할 태도	-0.022	0.020	0.274	-0.032	0.016	0.047
취업(기준: 비취업)	-0.044	0.020	0.027	-0.066	0.016	0.000
연령 제곱	-0.033	0.000	0.000	-0.003	0.000	0.000
연령	0.197	0.020	0.000	0.224	0.016	0.000
혼인 기간	0.030	0.003	0.000	0.054	0.002	0.000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013	0.060	0.824	-0.020	0.062	0.742
4년제 졸업 미만	0.000	0.030	0.995	0.024	0.023	0.293
4년제 졸업 이상	-0.037	0.030	0.213	-0.021	0.023	0.375
가구 소득	0.000	0.000	0.121	0.000	0.000	0.028
가구 순재산	0.000	0.000	0.829	0.000	0.000	0.267
남편 연령	-0.005	0.004	0.158	-0.005	0.003	0.049
남편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015	0.060	0.803	0.080	0.065	0.216
4년제 졸업 미만	0.012	0.032	0.715	0.010	0.025	0.672
4년제 졸업 이상	0.008	0.028	0.782	0.006	0.023	0.804
상수항	-3.218	0.395	0.000	-3.622	0.311	0.000

다음으로 미래의 추가 출산 의도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 역할 태도는 2012년 모형과 2015년 모형 모두에서 추가 출산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 실천 결과인 출생아 수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 역할 태도와 취업 상태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그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한 성 역할 태도의 영향(회귀 계수)이 2012년 음(-)의 방향에서 2015년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그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것이다.

(표 9-4)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산 의도 간 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출생아 수 2명 이하)

	2012(N=5,179)			2015(N=8,655)		
	b	s.e	p	b	s.e	p
성 역할 태도	-0.149	0.102	0.144	0.084	0.074	0.253
취업(기준: 비취업)	0.167	0.110	0.129	0.285	0.075	0.000
연령 제곱	0.005	0.002	0.004	0.002	0.001	0.031
연령	-0.450	0.122	0.000	-0.184	0.074	0.014
혼인 기간	-0.243	0.016	0.000	-0.319	0.012	0.000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385	0.406	0.343	0.264	0.314	0.401
4년제 졸업 미만	0.146	0.143	0.307	-0.003	0.102	0.980
4년제 졸업 이상	0.216	0.147	0.142	0.042	0.104	0.683
가구 소득	-0.001	0.000	0.089	0.000	0.000	0.246
가구 순재산	0.000	0.000	0.178	0.000	0.000	0.522
남편 연령	-0.011	0.016	0.500	-0.016	0.010	0.135
남편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376	0.529	0.477	-0.177	0.420	0.673
4년제 졸업 미만	-0.229	0.154	0.138	0.067	0.108	0.539
4년제 졸업 이상	-0.103	0.143	0.474	0.083	0.104	0.427
상수항	10.726	2.128	0.000	5.196	1.293	0.000

한편, 추가 출산 의도는 현재의 자녀 수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출생아 수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생아 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성 역할 태도의 경우, 2012년 모형에서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15년 모형에서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한 성 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출생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로만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음(-)의 방향이나 유의미성이 없고, 2015년에는 양(+)의 방향이나 유의미성이 없었다. 그런데 출생아 수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 후에는 2012년에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났던 것이 2015년에는 유의미성은 없지만 양(+)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아 수 통제 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추가 출산 의도에 대한 성 평등주의의 영향력이 일관성 있게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표 9-5〉 개인의 성 역할 태도와 출산 의도 간 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출생아 수 통제)

	2012(N=5,179)			2015(N=8,655)		
	b	s.e	p	b	s.e	p
성 역할 태도	-0.254	0.114	0.026	-0.034	0.082	0.682
취업(기준: 비취업)	-0.033	0.119	0.781	0.015	0.084	0.860
출생아(기준: 0명)						
1명	-1.393	0.252	0.000	-1.831	0.130	0.000
2명	-3.499	0.265	0.000	-3.692	0.143	0.000
연령 제곱	-0.002	0.002	0.214	-0.004	0.001	0.003
연령	0.043	0.129	0.739	0.175	0.081	0.030
혼인 기간	-0.124	0.016	0.000	-0.147	0.013	0.000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238	0.421	0.572	0.455	0.337	0.178
4년제 졸업 미만	0.193	0.161	0.229	0.154	0.114	0.175
4년제 졸업 이상	0.155	0.164	0.346	0.060	0.117	0.612
가구 소득	0.000	0.000	0.469	0.000	0.000	0.798
가구 순재산	0.000	0.000	0.077	0.000	0.000	0.640
남편 연령	-0.023	0.018	0.205	-0.039	0.012	0.001
남편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255	0.539	0.637	-0.233	0.422	0.581
4년제 졸업 미만	-0.159	0.173	0.356	0.106	0.121	0.380
4년제 졸업 이상	-0.103	0.161	0.522	0.075	0.117	0.521
상수항	4.529	2.228	0.042	2.090	1.400	0.135

제3절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한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은 출산율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되어 온 영향으로 1960년대 이래 현대화,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양성평등 수준은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였는데,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2014년 전부개정을 통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2001년 여성부 출범, 2008년 호적법 폐지 등에서

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 관련 환경의 변화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거시적 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양성평등 수준(여러 지표들로 측정되는)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성 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간 'U' 관계를 주장하는 다중 상태 평형 이론상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속도만큼 노동시장이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관계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등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이미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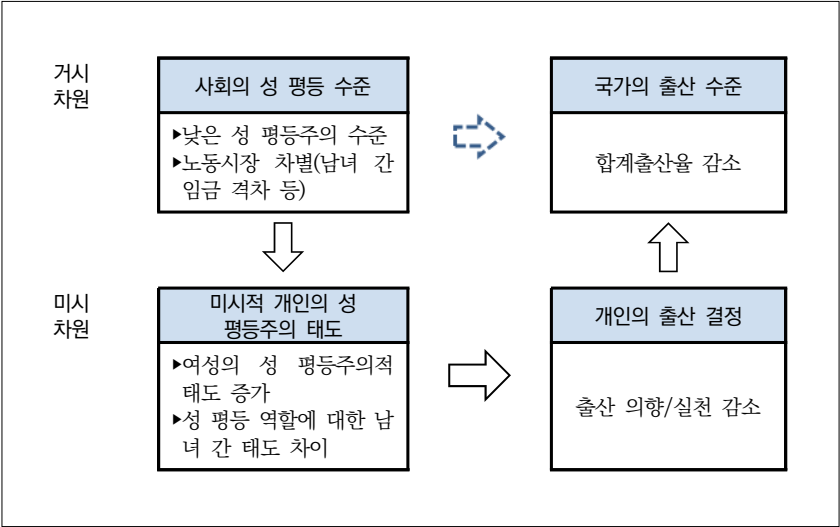
실제 한국 사회에만 한정된 미시 분석 결과에서 개인의 성 역할 태도가 강화될수록 출산율 줄이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성 평등주의와 출산 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취업한 경우에 출산율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더불어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였음을 짐작케 해 준다.

이와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한 성 평등주의 확산과 출산율 변화 간의 연관성은 실제 미시적인 개인의 출산 행태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임계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기 이전으로,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적으로 개인의 성 역할 태도가 높아질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높아지

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도 미래에 성 평등주의 확산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에 성 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출산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합계출산율은 성 평등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유교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성 평등주의가 확산되면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증가하였으나, 성 평등주의가 아직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은 성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실천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그러한 실천을 기피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가정 양립 곤란 등 새로운 규범에 있어서 불안정한 평형 상태(unstable equilibrium)가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미래에 성 평등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성 평등주의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9-5] 성 평등 수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0장

가족가치관과 출산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제2절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1. 이론적 근거

가치관과 출산력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이론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Lesthaeghe and van de Kaa, 1986)과 Fishbein과 Ajzen의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s) 이론(Fishbein and Ajzen 1975; Ajzen and Fishbein, 1980)이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사회적 수준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비해,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결정을 이해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의 핵심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부터 관찰되고 그 이후 지속되어 온 생활 형태에서의 인구학적 변화가 곧 특정한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 가치는 세속적, 반권위적, 평등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며, 자기 실현, 가치 표현, 자기 인식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의 증명을 위해 경험연구에서는 두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첫째, 가치는 중요한가?(Lesthaeghe and Moors, 1994), 둘째,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Lesthaeghe and Surkyn, 2004)이다. Lesthaeghe and Surkyn(2004)은 가치와 제2차 인구변천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세속화, 정치적 신좌파, 평등주의, 시민 윤리 및 도덕성, 가치 표현, 동료 의식을 강조하는 결혼 윤리 등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몇 가지

인구학적 변화를 유인하였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서는 오로지 가치로만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치가 다른 설명 방식들을 보완한다(Lesthaeghe, 2001).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가치들이 인구학적 변화를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밀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서는 광범위한 태도와 가치를 강조하며 1960년대 말 이후 젊은 성인의 생활 형태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가치관에 주목한 반면, Fishbein과 Ajzen가 주창한 계획된 행위 이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Ajzen은 태도를 “사물, 사람, 제도 또는 사건에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1988, p.4).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도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태도라는 개념에 훨씬 더 초점이 모아지고, 연구 대상은 전체 사회 또는 특정 집단이 아닌 특정 행동의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Fishbein과 Ajzen의 틀을 확장시킴으로써, 아이, 결혼, 직업, 자기 실현 및 개인적 자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질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체 인구 내 하위 집단에 주목하면서 다른 방식의 질문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모성으로의 전이가 더 쉬운가?’ 또는 ‘인생에 있어 부모 역할보다 다른 역할을 선호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충분하다면 모성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가치관과 출산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은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과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가족가치관 변화

가. 결혼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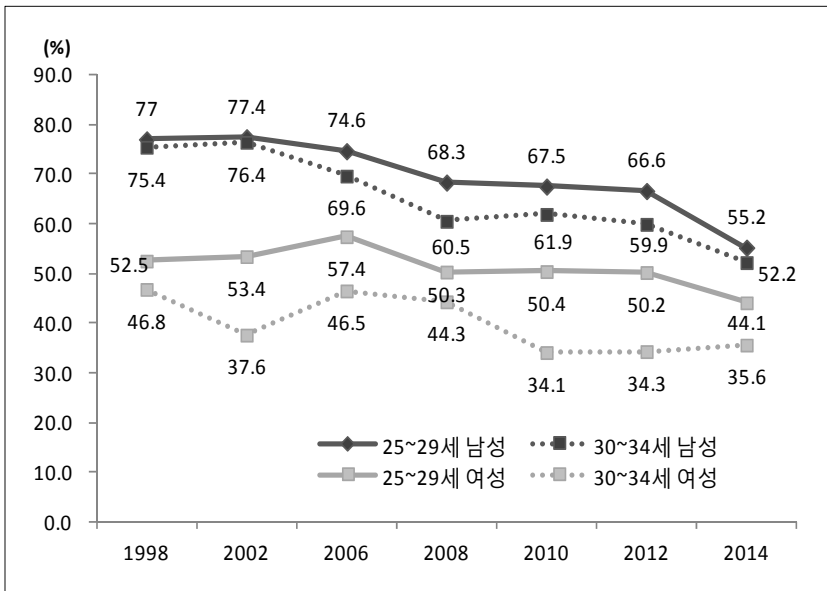
결혼가치관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18,576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 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2006년까지는 4년 주기로)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응답지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가임기(25~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9세 미혼 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1998년 70%대에서 2014년 50%대로 낮아졌다.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의 비율도 미혼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결혼가치관의 긍정적인 정도가 미혼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5~29세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1998년 50%대에서 2014년에 40%대로 낮아졌으며, 30~34세 미혼 여성의 경우에도 4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과거에는 결혼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인생의 의무 사항이었다. 그렇지만 21세기 이후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변화와 궤를 같이해서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 가족적 책임 증

가를 부르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여성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서막에 해당한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은 결혼율을 낮추고, 이는 혼외출산율이 극히 낮은 한국 사회에서 출산력을 낮추는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10-1] 주된 가임기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통계청(1999). 1998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03). 2002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07). 2006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09). 2008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1b). 2010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3b). 2012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2015b). 2014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변화는 가족 중심적 그리고 집단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개인적 선호를 강조하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직업, 취미, 봉사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분야

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 추구가 방해받을 수 있는 출산을 기피하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 인구변천의 핵심적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의 여성들은 이러한 주장이 지적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결혼가치관의 지속적인 약화는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할 대상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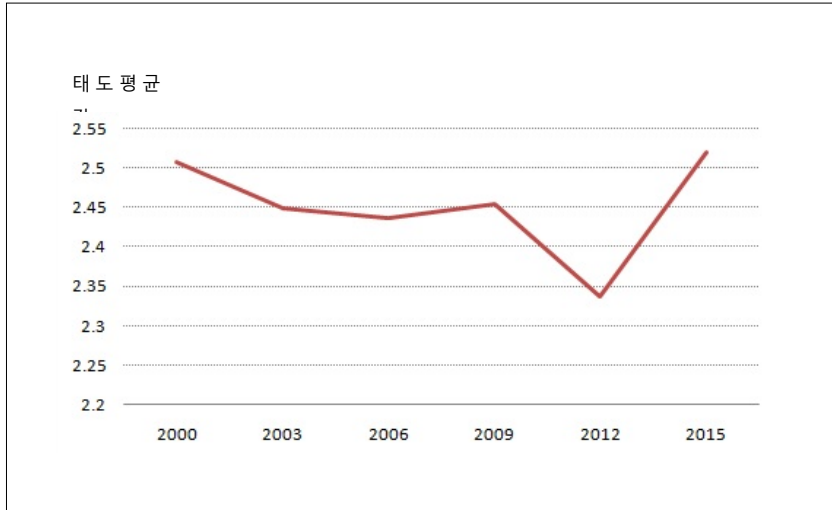
나.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³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횡단적 조사(cross-sectional survey)로 가임기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및 출산 행태와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자녀가치관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2015년에 다시 높아졌다. 국외 사례들에서는 대체로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감소 폭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자녀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래서 2000년 때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30)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임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96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 말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어 가장 최근으로 2015년에 실시되었다.

[그림 10-2]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



주: 1) 자녀가치관은 '결혼을 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로 측정하였다. 1='없어도 상관없다', 2='있는 것이 더 좋다', 3='꼭 필요하다'

2) 가임기 기혼 여성은 15~49세이며, 일부 조사의 경우 15~44세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난 15년간 자녀에 대한 태도는 왜 이렇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을 구성하는 기혼 여성들의 특징이 매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이미 지적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변화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으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매년의 평균값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자녀의 의미이다. 자녀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양과 질로 발현될 수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계획할 수 있고, 동시에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는 남들 못지않게, 또는 남들보다 더욱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안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삶에서 자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을 응답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으로 15년간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표 10-1〉 가임기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 변화

(단위: %)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없어도 상관없다	9.1	12.1	11.5	10.8	14.4	10.0
있는 것이 더 좋다	31.1	31.0	33.3	33.0	37.5	28.2
꼭 필요하다	59.8	56.9	55.2	56.2	48.1	61.9

주: 1) 자녀가치관은 ‘결혼을 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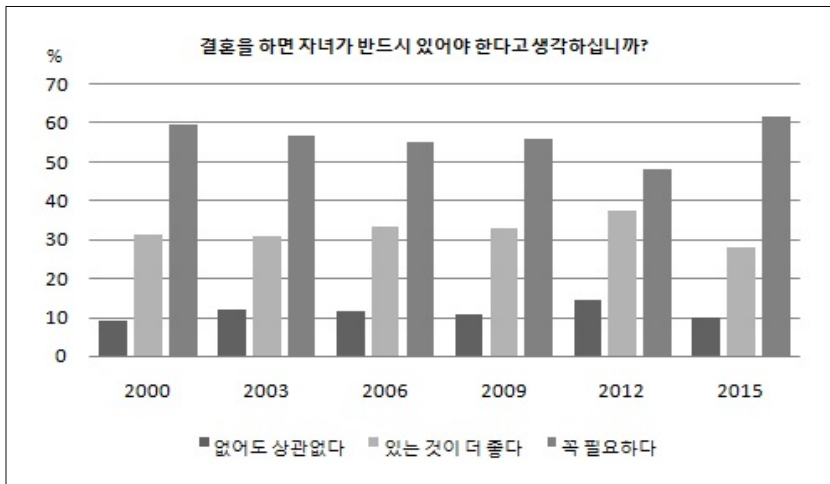
2) 가임기 기혼 여성은 15~49세이며, 일부 조사의 경우 15~44세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러나 두 번째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녀가치관 문항에 대한 각 항목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있는 것이 더 좋다’, ‘꼭 필요하다’라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 2003년 87.9%에서 2009년 89.2%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012년 85.6%로 감소하다 2015년에

90.0%로 다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자녀가 없어도 상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10.8%에서 2012년 14.4%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3] 기혼 여성의 연도별 자녀가치관 분포



주: 1) 자녀가치관은 ‘결혼을 하면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로 측정하였다.
 2) 가임기 기혼 여성은 15~49세이며, 일부 조사의 경우 15~44세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임기 기혼 여성(15~49세)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³¹⁾ 자료이다. 결혼가치관 등의 문항이 3

차 연도(2010)부터 추가된 관계로 3~5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3,128명이 포함되었다. 결혼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4점을 부과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필요성으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 정도에 따라 1~4점을 부과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 결혼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남편 연령 및 고용 상태, 가구 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결혼 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행하다’ 1점~‘매우 행복하다’ 5점을 부과하였다.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 1점~‘조금 나쁜 편이다’ 4점을 부과하였다.

〈모형 1〉에서는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가치관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긍정적 가치관은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4년간(3~5차 자료 생성 기간인 2010~2014년)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후 출산을 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형 2〉에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도 기혼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차후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계획된 행위 이론(planned behavior theory)’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선호가 높으면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31)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19~64세 여성 9,997명을 표본으로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2008년 2차 조사, 2010년 3차 조사, 2012년 4차 조사, 그리고 2015년 5차 조사가 수행되었다. 5차 조사에는 8,987명이 참여하여 72.6%의 표본 유지를 나타냈다(주재선 등, 2015).

〈표 10-2〉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결혼가치관)		모형 2(자녀가치관)	
	Coef.	S. E.	Coef.	S. E.
자녀 수(기준: 없음)				
1명	-0.73	0.34 *	-0.84	0.34 *
2명 이상	-1.68	0.32 ***	-1.79	0.33 ***
연령(기준: 15~29세)				
30~34세	-0.64	0.28 *	-0.70	0.28 *
35~39세	-1.57	0.34 ***	-1.64	0.34 ***
40~49세	-3.93	0.64 ***	-3.95	0.64 ***
학력(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0.05	0.23	0.06	0.22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0.47	0.22 *	0.49	0.22 *
일자리 유무(기준: 없음)	0.16	0.18	0.13	0.18
결혼 만족도(1~5점)	0.08	0.09	0.10	0.09
건강 상태	-0.21	0.14	-0.21	0.14
남편 연령(기준: 15~29세)				
30~34세	-0.09	0.44	-0.06	0.44
35~39세	-0.85	0.47 **	-0.80	0.47
40세 이상	-1.62	0.54	-1.57	0.54 **
남편 고용 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14	0.30	-0.14	0.30
사무 종사자	-0.03	0.28	-0.02	0.28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0.14	0.31	-0.16	0.31
기능원, 단순 노무 종사자	0.07	0.27	0.07	0.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5	0.67	-0.42	0.67
총가구 소득(log)	-0.22	0.09 *	-0.22	0.09 *
결혼가치관(반드시 해야 한다)	0.31	0.12 **		
자녀가치관(반드시 있어야 한다)			0.24	0.12 *
Constant	2.01		2.13	
-2Log Likelihood	-475.44		-477.03	
N	3,083		3,083	

* p<0.05, ** p<0.01 *** p<0.001

기준 출생아 수(parity)에 따른 추가 출산 이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 여성들로 하여금 추가 출산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자녀와 1자녀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이행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의 결과는 일단 결혼을 하면 대부분 결혼가치관에

관계없이 적어도 한 자녀를 두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자의 결과는 1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추가 출산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혼가치관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0-3〉 자녀 수별 결혼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0명 (모형 1-1)		자녀 수		2명 이상 (모형 1-3)	
	Coef.	S.E.	1명 (모형 1-2)	S.E.	Coef.	S.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57	1.29	-0.85	0.50	-0.36	0.38
35~39세	0.47	1.67	-2.11	0.64 ***	-1.41	0.45 ***
40세 이상	-0.99	2.37	-4.30	1.01 ***	-4.60	1.13 ***
학력(기준: 고졸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2.05	1.13	-0.11	0.44	0.2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93	1.22	0.46	0.45	0.67	0.29 *
일자리 유무	-0.33	0.74	0.52	0.35	-0.02	0.24
결혼 생활 만족도	0.49	0.43	0.31	0.18	-0.04	0.12
건강 상태	-1.80	0.93 *	-0.35	0.27	-0.10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23	1.58	-0.84	0.88	-0.24	0.57
35~39세	-0.90	1.81	-1.59	0.95	-1.03	0.61
40세 이상	-3.13	2.24	-1.64	1.05	-1.92	0.70 *
남편 고용 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03	1.20	-1.13	0.62	0.47	0.41
사무 종사자	0.67	1.07	-0.68	0.52	0.34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1.76	1.30	-0.76	0.60	0.39	0.41
기능원, 단순 노무 종사자	-1.80	1.24	0.64	0.49	0.06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73	2.27	0.34	1.32	-0.71	1.09
총가구 소득(log)	-0.11	0.34	-0.14	0.35	-0.28	0.10 *
결혼가치관	0.01	0.43	0.38	0.22	0.31	0.15 *
Constant	4.68		0.95		0.67	
-2Log Likelihood	-31.22		-124.72		-294.54	
N	86		441		2,556	

* p<0.05, ** p<0.01 *** p<0.001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자녀가 삶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이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꼭 아이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에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 선호 사상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호하면 딸만 있을 시 아들을 갖기 위해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첫째가 아들이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도 된다. 다시 말해 아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꼭 아이의 수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표 10-4〉 자녀 수별 자녀가치관과 임신 이행: 로지스틱 회귀분석

	0명 (모형 1-1)		자녀 수		2명 이상 (모형 1-3)	
	Coef.	S.E.	1명 (모형 1-2) Coef.	S.E.	Coef.	S.E.
연령(기준: ~29세)						
30~34세	-0.69	1.32	-0.90	0.50	-0.42	0.38
35~39세	0.73	1.66	-2.26	0.64 ***	-1.46	0.46 ***
40세 이상	-1.20	2.55	-4.32	1.01 ***	-4.60	1.13 ***
학력(기준: 고졸 이하)						
2년제 대학 졸업	-1.73	1.16	-0.07	0.44	0.18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57	1.24	0.45	0.45	0.69	0.29 *
일자리 유무	-0.29	0.80	0.53	0.35	-0.06	0.24
결혼 생활 만족도	0.63	0.47	0.33	0.18	-0.02	0.12
건강 상태	-2.02	0.92 *	-0.34	0.27	-0.09	0.18
남편 연령(기준: ~29세)						
30~34세	1.49	1.63	-0.82	0.88	-0.27	0.58
35~39세	-0.67	1.81	-1.46	0.95	-1.05	0.61
40세 이상	-3.31	2.26	-1.54	1.05	-1.96	0.70 **
남편 고용 상태(기준: 무직)						
관리자 및 전문가	-0.56	1.37	-1.14	0.62	0.49	0.40
사무 종사자	0.03	1.17	-0.67	0.51	0.37	0.39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22	1.40	-0.80	0.61	0.39	0.42
기능원, 단순 노무 종사자	-1.76	1.33	0.59	0.49	0.08	0.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98	2.13	0.32	1.28	-0.71	1.09
총가구 소득(log)	-0.05	0.32	-0.13	0.36	-0.28	0.10 **
자녀가치관	1.17	0.55 *	0.08	0.25	0.26	0.16
Constant	0.72		1.50		0.66	
-2Log Likelihood	-28.45		-126.13		-295.12	
N	86		441		2,556	

* p<0.05, ** p<0.01 *** p<0.001

제3절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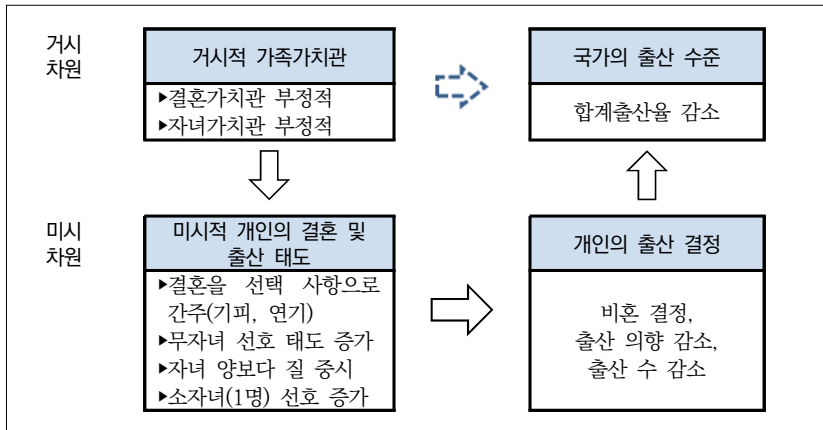
이론적으로 가치관은 사회 환경 변화나 다른 가치(예로 성 평등주의) 등과 연관하여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으로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결혼은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인생의 의무 사항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결혼은 일-가정 양립 곤란, 양육 부담, 가족 부양 책임 등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부담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지어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족 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결혼이 ‘선택’이라는 가치가 보편화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의 출산 선호 내지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개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출산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혼외출산율이 높은 서구 국가들에서와 달리 출산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치관 즉,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제2차 인구변천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갈지자 걸음을 보이면서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자녀의 질과 양에 대한 구분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경제학자 베커의 논의 이후 자녀에 대한 중요성은 양과 질로 분리되어 발현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기혼 여성의 자녀가치관이 최근에 들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가 중요하면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에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자녀의 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서는 자녀를 굳이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녀를 중시하는 태도는 자녀를 많이 낳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녀를 어느 정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 여성들에게 자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비용(시간, 돈)이 드는 상황에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녀의 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한국 기혼 여성들에게 지배적인 특징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10-4]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제11장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종합 논의

제2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종합 논의

1. 거시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 사회는 지난 약 반세기 동안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및 가족의 변화와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전쟁 직후 베이비붐 현상이 발생하는 와중에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개발은 도시의 산업 자본과 농촌의 과잉 인구가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가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시 정부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 의한 가족계획 사업,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 수준 향상, 보건 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이는 부부의 출산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녀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정된 가족 자원을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높은 교육열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실제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등 고등 교육의 보편화를 촉진시켰다. 사회 발전 등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등 교육 참가는 남성의 전유물에서 점차 벗어나 여성 역시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양적인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종래 여성들의 소극적인 취업 활동이 지식 기반의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과거 일인 생계 부양 가구(홀벌이 가구)에서 이인 생계 부양 가구(맞벌이 가구)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한편, IMF 외환 위기 등 경제 위기를 계기로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고 고학력화의 산물로 '3D 일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역으로 학력 인플레이션(대학 진학, 대학 입학 후 더 좋은 대학으로의 재진학, 유학,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 진학, 전공 변경 등)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한 데다가 개발 시대의 산물로 부동산 투자를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금과 월세금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자녀 출산과 양육은 커다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더욱 공고화된 가부장적 문화에 기인한다. 근로자의 출산과 자녀 양육을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행태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만 강요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거시 사회구조와 미시 개인의 출산 결정 연계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또 다른 거시적인 측면인 국가의 출산 수준과 미시적인 개인의 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구조로 대변되는 각 영역은 홀로 개인의 출산 결정이나 거시적 차원의 국가의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영역들과의 직·간접

적인 상호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과 출산을 연계하는 사회구조는 보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로서 높은 교육열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및 학력(학벌) 차별주의(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기회, 고용 안정, 승진, 임금, 지위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는 대학 정원의 확장 등에 힘입어 고학력화를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교육 기간 연장(고학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저성장 기조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특히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명문 대학, 대학원 진학, 유학 등을 위하여 사교육에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적으로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교육열은 노동시장의 상황과 결합하여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개별 가구의 교육비(공교육, 사교육) 부담은 자녀 수와 대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인플레이션은 청년층 당사자의 교육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맞물려 입직 연령을 늦추는 작용을 하여 만혼이나 비혼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고학력화와 더불어 '취업이 필수로 당연시되는' 인식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여성들 사이에 결혼은 더 이상 일차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혼 내 출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는 주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근로 형태 등 질적인 변화를 매개로 출산과 연계되고 있다. 그간 개발 시대를 거쳐 지식 기반의 후기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업의 현대화와 더불어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

장을 특징짓는 고용 문화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 시대의 산물로서 고도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장시간 근로(야근, 휴일 근무 등)가 여전히 관행으로 존재하고 있고, ‘가정 중심’보다는 ‘직장 중심’의 사고관은 회식 문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결혼, 출산 및 양육이 직장 일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사상이 깊게 뿌리 박혀 있고, 이러한 관념은 실제 직장 생활에서 차별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직장 내에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경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접근마저 근로 형태나 지위 등에 따라 차별되고 있다. 예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자 등은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관행 내지 문화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가정 생활(특히, 출산, 양육 등) 간의 조화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경력 단절과 희망 자녀 수 출산을 양자택일의 선택지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국가로 위치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 관념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임대인의 요청 등으로 계속 이동해야 하는 ‘집 없는 설움’은 생활 기반 전체를 불안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시대의 산물로서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마저 상승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화 및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입직 연령이 늦추어지고, 이에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기간은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가족의 보편화로 결혼 후 부모로부터 주거의 공간적 분리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自家)나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신혼집 마련’ 곤란은 결혼 시기를 늦추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신혼집이 주로 전세나 월세 형태로 마련되고 있는 반면, ‘내 집 마련’은 출산과 양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 시기가 이 늦추어질수록³²⁾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자녀 수 증가 및 성장으로 인해 필요 주택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게다가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마련과 희망 자녀 수 출산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출산을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한다. 즉, 주택 매매 가격과 주택 전세 가격 상승, 소규모 주택 거주, 주택 대출금의 상환 부담 등이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학력화, 취업 곤란 및 고용 불안정, 주거 비용 상승 등의 사회 현상으로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법률혼 외 출산이 정당시 되지 않은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취업한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출산을 늦추고 있다. 만산화로 인하여 생물학적 임신 능력이 감퇴됨과 더불어 각종 부인과 질환, 스트레스 등 임신력이 떨어지고 있다. 만혼화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시기와 법률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시기 간 차이가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의 성생활과 혼전 임신은 불안정한 인공임신중절 시술 등으로 이어져 생식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청소년 등의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임신에 대한 남성의 무관심, 직장 등에서 임신에 대한 배려 미흡 등 가부장적인 사회 인식도 개인의 생식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생식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제공 체계의 미흡, 관련 의료기관 부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등도 생식건강에 위협이 된다. 생식건강의 문제는

32)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평균)는 2006 8.1년, 2008년 8.3년, 2010년 8.5년, 2012년 8.0년, 2014년 6.9년 등으로 나타난다(국토교통부, 2014).

개인의 생식건강 유지 및 관리 등의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난임, 인공임신중절, 유·사산 등의 출산율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핵가족은 현재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의 고학력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일인 생계 부양자 가족에서 이인 생계 부양자 가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화, 자동화, 집중화 등으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집과 직장 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모가 주로 집안에 머무르면서 자녀 양육에 전념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취업 모의 경우 거리상 그리고 시간적 유용성 측면에서 주간에 육아 등 가사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종 및 근로 형태 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자녀 양육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육정책을 강화하여 왔다. 보육정책은 보육료의 보편 지원 이전에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 증가와 정책 만족도 제고를 통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보편적 지원으로의 전환으로 보육료 지원에 덜 민감한 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효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니즈가 큰 집단(예로 취업 모)에서 자녀 돌봄의 양적 및 질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보육의 양적 및 질적 사각지대는 자녀 양육 가정에게 금전적 비용(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서비스 구매 등을 위한) 발생뿐만 아니라 시간적 비용(일-가정 양립 곤란) 발생과 정서적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추가 출산을 좌절케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비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대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는 또 다른 사회 현상 즉, 핵가족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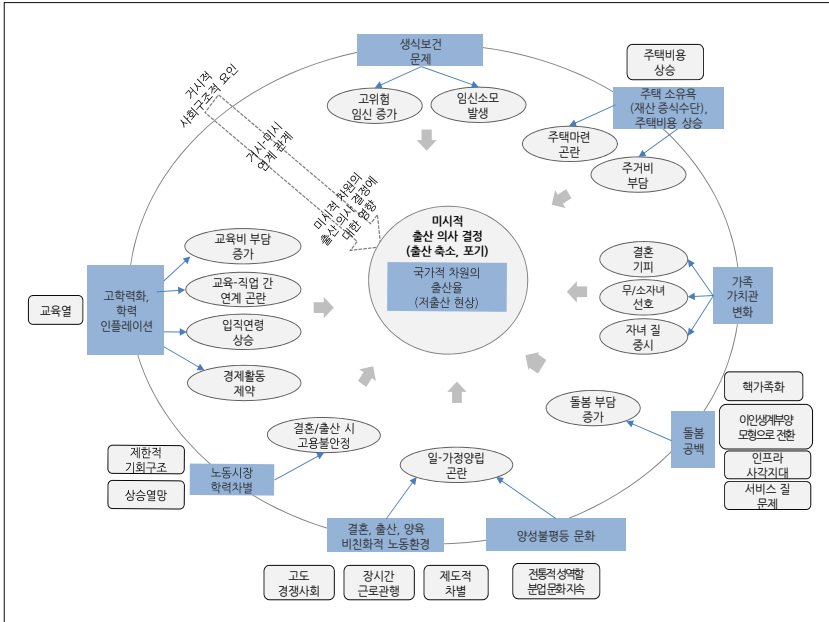
가속화시켰다.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출산을 감소는 한정된 가족 자원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이는 대학 정원의 확대를 계기로 고학력화를 촉진시켰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여건은 개발 시대의 남성 중심적인 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여성에 대해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승진,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적 관행은 그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을지언정 여전히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성 분업적인 구조가 가족 내에서 강하게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탈가족화와 탈상품화가 동시에 빈약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여성들은 여전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함으로써 경제 활동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 단절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기회비용의 대가로서 출산을 축소 또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시장이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사회적으로 성 평등 수준이 낮아 출산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성 평등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일정한 임계점을 넘지 못하여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학력인 경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 취업 중인 여성 등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 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도 향후 성 평등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출산율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출산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 삶에 대한 태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부모 세대처럼 결혼과 자녀를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할수록 이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는 크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만혼화와 소자녀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가치관에 대해 한국 여성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중시하는 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자녀를 키우는 데 비용(시간, 돈)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적은 수의 자녀에게 올인(all-in)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스스로 변화하기보다 다른 거시 사회구조적 요인(영역)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본 연구의 거시-미시 분석틀에 포함된 것으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성 평등 주의 등의 제 영역들이 개인의 선호도(결혼가치관, 출산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치관이 의사 결정과 실천으로 이어져 결국 또 다른 거시적인 영역으로서 출산력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의 가치관은 교육이나 홍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오히려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영역들에 존재하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 갈등 구조에 처해 있는 여건들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림 11-1]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결혼·출산 행태 간의 인과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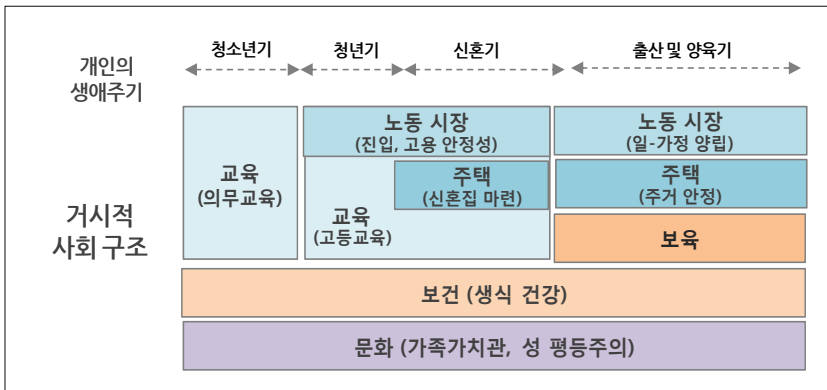
주: 1) 네모 도식은 거시적 차원의 요인, 원 도식은 미시적 차원의 요인을 의미함.
 2) 외곽의 실원은 거시적 사회구조를 의미함.

제2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은 거시적인 사회구조 및 문화 전반에 걸쳐 전환되어야 균형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개인의 출산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와 문화는 교육, 노동시장, 주택, 보건, 보육, 성 평등 및 가족가치관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구조 내지 문화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현재 또는 미래의 출산 결정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청년기에는 교육 이수, 노동시장 진입, 신혼집 마련 등에 대한 욕구의 실현 여부가, 그리고 결혼

후에는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 및 규모 확대, 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욕구의 실현 여부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성 평등 수준이나 가족가치관은 전 생애 기간에 걸쳐 사회구조와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출산 결정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틀을 토대로 각각의 사회구조(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1-2]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1. 교육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가.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회에는 제한적 기회 구조, 불안의 미만으로 인한 교육열, 노동 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등이 개인 혹은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 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있다. 즉, 제 측면에서 작금의 한국 사회는 고학력화를 부추기는 사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 시기

를 늦추는 작용을 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비단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정하지 않고,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기제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요소를 타파하고, 교육 체계가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변용에 적합하도록 학교 서열화 방지와 교육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타파는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필요 이상의 교육(고학력)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할 노동시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 서열화 방지는 개인이 고등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명문 대학을 무조건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전공 중심의 진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기간 단축은 유아 교육 강화, 직업 훈련, ‘선취업 후진학’ 등 고령 사회에 대응한 평생 교육 강화 등을 고려하여 생애에 있어서 전체적인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패러다임 전환 기제

1) ‘대학’ 중심에서 ‘전공’ 중심으로의 대학 교육 전환

대학 진학 시,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적절하게 진학하도록 하여 사회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별로 분야를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대학의 지명도는 학과나 전공과 상관없는 경향이 있고,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도 명문 대학 출신만을 선호하는 것이 전횡되고 있다. 또한 각 대학교가 획일적으로 모든 학과들을 운영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행 대학 교육 체계를 지양하고, 대학교별로 기초 과학 등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특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고등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교육-고용 간 연계를 원활하게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및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에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 체계 개편: 전체 교육 기간 단축 및 의무 교육 기간 증가

유아 교육 강화, 직업 훈련, ‘선취업 후진학’ 등 평생 교육, 고령 사회 대응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에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일정 수준까지 교육을 받은 후 기술을 배우는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생애에서 교육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유아기 교육이 강화 되었으며,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 교육으로의 진학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생애에서 상당 기간을 정규 교육에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대학 또는 그 이상까지 교육을 받은 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하기도 한다. 기업

등에서는 정규 교육 이수만으로 직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긴 교육 기간은 개별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입직 연령을 증가시켜 노동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제를 현실적인 문제들과 미래의 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로 정규 교육을 1년(유치원)-5년(초등)-6년(중·고등)-3년(대학)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학제 개편은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의무 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의무 교육 전 기간 동안 필요 물품(수업료, 육성회비, 교자재, 교복, 체육복 등)을 무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 사회 대비 인구 자질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노동시장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가.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학력과 성을 기준으로 노동 조건을 차별화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 일-가정양립제도(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은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문화와 구조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유발하여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여 교육-고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

을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기제로는 우선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차별을 타파하여 교육-고용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 차별을 불식시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패러다임 전환 기제

1)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 및 학벌주의 타파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학력 및 학벌을 중심으로 고용 기회, 고용 안정(정규직화), 승진, 임금 수준 등에 대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 교육의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강화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물론 저출산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개인이 필요 이상으로 고학력 혹은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불식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러나 뿌리 깊은 고용 문화로 자리 잡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는 상당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

제(청년실업 등)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기제가 필요할 것이다. 예로 ‘학력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력 차별 금지는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지원 자격 기준을 ‘대졸 이상’ 등으로 제한하거나, 승진 및 임금 수준 등에서 학력이나 학벌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력서상에 ‘대학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합격 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대학의 이름(평판)과 동격시켜 선발하지 않고 그 능력 자체만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는 학력별 ‘취업할 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 기관 등에서 모두 대졸 이상만을 선발한다면 이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대학을 반드시 진학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 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에 대해 대졸 미만의 자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사실 한 직장에서도 모든 일이 고학력자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할당제에 의해 선발된 지원들에 대한 부당한 내부 차별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도 그 방향이나 특성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청년 고용 안정화 정책은 대부분 고학력자를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적어도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도만큼 저학력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 불식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은 세 시기에 발생한다. 즉, 일상적인 승진 등의 시기, 출산 시기, 그리고 육아 후 직장 복귀 시기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연기, 출산 축소,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을 선택케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구현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 차별(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고용 기회, 정규직으로의 전환, 승진, 근무지·보직 변경, 임금 등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반 시 집중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별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민·형사소송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상당 등)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3)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

가) 장시간 근로 관행 타파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시간 근로는 여러 행태로 이루어진다. 정상 근로시간 자체가 아주 긴

경우, 정상 근로시간 외 야근을 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 이외로 회식을 하는 경우, 숙직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긴 경우에는 이를 단축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당 임금 수준, 보육 시스템, 학교 교육(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 충원을 통한 직무공유(job sharing)로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자리 부족이나 산업 재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 법제적 조치 이외에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 문화 조성도 중요하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 야근이나 공식적인 회식 등으로 개인의 권한 내에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수당 등의 형태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의 근로자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 등의 책임 내지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식 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 개인이 정상 근무 시간 내에 주어진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 출퇴근 시간과 중식 시간 등을 엄수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도적 접근 강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institution) 접근으로 다양한 일-

가정양립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사회 보험화하고 육아휴직의 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가정양립제도들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등이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거나 자영업자 등 이용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 대체 수준이 낮아 남성 등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아빠의 달’을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등 직장 분위기나 관행으로 인하여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일-가정양립제도의 대상을 정규 상용직에서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자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생활 급여 성격 강화, 제도와 실천 간 일치, 여성 중심 접근에서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부부 중심에서 다양한 행태의 가족 고려, 휴가·휴직제도 이용 시 또는 복귀 후 불이익 근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상 사각지대의 해소, 급여액의 임금 대체 수준 상승 등을 위하여 스웨덴이나 캐나다(퀘벡주)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원(예로 ‘부모보험’)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³³⁾ 직장 등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직장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남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

33) 구체적인 부모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삼식, 윤홍식, 신현웅, 최효진(2013)을 참조하도록 한다.

요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욕구가 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제도는 다양한 가족에게도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빠의 달’과 같은 제도에서 엄마와 아빠 모두의 사용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모자 가정(비혼모, 이혼모 등 포함)이나 부자 가정(비혼부, 이혼부 등 포함)의 경우 그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액을 인상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혼모 등이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해고되는 등 노동권이 박탈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주택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가.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회의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 관념과 더불어 주택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면서 주택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전·월세 임대료마저 높은 실정이다. 주택 시장의 과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 기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거시적인 환경은 개인이나 가구의 주택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생애주기 또는 가족 주기에 따라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필요성)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층은 긴 교육 기간 이후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신혼집 마련을 큰 부담으로 여겨 결과적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기혼층도 자녀 성장과 더불어 자기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나, 늘어나는 양육비와 높아지는 주택 가격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주택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적인 특성으로서 주택 시장을 지배해 온 강한 주택 소유 관념을 약화시키고 투기성 과열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주택 소유 관념은 문화적인 것으로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주택 시장의 과열을 항구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책을 통해 주택을 둘러싼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과 관련하여 주택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상을 위한 부분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주택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선순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 관념을 부추기는 공급 중심에서 주택의 주거 관념을 강화시키기 위한 배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패러다임 전환 기제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는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를 위한 자금 지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추어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면적 등을 다양화하여 결혼, 추가 출산, 다자녀 출산 등 부부(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결혼 단계에 있는 예비 부부를 위해 전체 공급 물량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한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신혼집 마련이 주 목적이므로 비교적 소규모이면서 거주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책

정하도록 한다. 이는 다른 신혼부부의 이용을 위해 순환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단계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이 비교적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중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호수의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한다. 신혼 단계에 있는 부부가 출산이 시작되면 이 단계의 임대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 기간도 막내아의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일정 연령(또는 학교급)까지 양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자녀 출산 단계의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장기화한다. 자녀 수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여 일정 자녀 수 이상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반영구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예로 막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학교까지 마치는 기간 고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거의 자기 집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다.

4. 보건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가.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회에서 만혼과 만산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젊은 연령에 출산하는 것이 산모나 자녀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나, 고학력화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로의 회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도 중요하나 만혼을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만혼을 전제로 하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생식건강 문제들이 청소년기부터 만연하는 등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생식건강의 문제는 청소년기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에 대한 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은 ‘언제 출산해도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혼 시기를 전제로 하는 출산뿐만 아니라 법률혼 외의 출산까지도 포함하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 새로운 지향성을 가진다.

나. 패러다임 전환 기제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수요자(일반 국민), 공급자(보건의료기관), 제도(정부) 등의 삼자 간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1) 수요자 접근: 생식건강 관리 및 실천

모든 개인은 청소년기부터 생식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하며 적절한 관리를 실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며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지양하여야 한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준비에 있어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남성은 임신뿐 아니라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난임 등에 대해서도 여성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급자 접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난임 치료 등 생식건강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 관련 의

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초기 발견, 치료 및 난임 시술 전 과정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 의료기관의 확대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검진 등을 상세하게 실시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모두에게 의사 등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생식건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치료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생식건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 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임신을 고려하거나 임신 중인 상태에서 타 과목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적인 처치가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산부인과와 연계된 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제도적 접근: 생식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가) 생식건강 정보 체계 구축

현재는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원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나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공신력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관마다 상이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난임의 심각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생식건강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전문적인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관련 정보의 내용은 피상적인 것을 지양하고, 개인이나 기관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생애주기(연령별)에 따라 그리고 상황(각종 징후 등) 발생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 보건 의료 방문을 통한 검진 필요성 및 검진 내용, 자가 등에서 필요한 사후 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생식건강 관련 생활 습관(음주와 흡연, 적절한 신체 활동, 영양 섭취 등)과 관련하여 관리의 필요성과 올바른 실천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산, 사산, 인공임신중절 등 불안정한 임신 결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생식건강 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은 국가에서 맡도록 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보건의로 전문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는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일반 국민(수요자)에게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나) 생식건강 교육 제공

생식건강 관련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그리고 일반 사회(직장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청소년 임신의 위험성이나 피임 방법들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생식건강의 문제가 무엇이고 생식건강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여야 하는지, 생식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육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그야말로 성희롱에 관한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교육에서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청소년기부터 생식건강을 관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한다. 사회 교육에서는 홍보와 직장 교육 등을 통해 생식건강의 관리 및 실천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생식건강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과거부터 산부인과는 임신을 하면 가는 곳으로 간주되어 특히 미혼층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임신 외 부인과 질병 등을 겪는 여성들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쉽게 병의원을 찾지 못하고 참게 되고, 그러한 비자발적 방치는 후에 난임 등 생식건강에 중대한 문제들로 귀결되곤 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에 의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생식건강 관련 의료기관의 기능과 접근성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공공 기관 및 일반 직장 등을 통해 필요시 관련 의료기관의 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임신을 하고자 하는 가임기 직장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야근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며, 음주 강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신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 난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자리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 난임 치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성 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장에서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대중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임신에 대한 남성(남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 인식 제고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화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남성의 난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예로 관련 검진 비용에 대한 수가 적용 등)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생식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체계적 지원

고위험 집단 등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정보 및 교육과 더불어 검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건강 보험과 국고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도록 한다.

난임 부부가 임신이나 출산에 성공하기 위해 사전 상담, 난임 상태 사전 검사, 시술 준비 과정에서의 약값, 시술 비용, 시술이 임신까지 유지되도록 할 때 드는 비용, 사후 관리 등 장기간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은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일부 한정된 횟수 내 시술 비용만 지원)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전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이 여전히 있으며, 지원 대상이 아닌 중간 소득 계층도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향후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 보험 외의 국고 지원의 폭을 조정하여 지원하는 절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비용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부당한 비용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산부인과에서의 불

필요한 검진 추가나 비용 과다 청구 등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식건강 프로그램 및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 난임 극복 관련 R&D 투자

만혼 등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신이 어려워지는 가임력 저하 및 난임(불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난임의 원인 규명, 난임 초기 발견, 난임 예방 약제,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난임 등에 관한 연구를 집약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종합연구기관(가칭)’ 설립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보육 부문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가.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구조적으로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고용 문화나 노동시장 구조는 그러한 가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돌봄 공백이나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을 통해 육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첫째, 무상 보육으로의 전환으로 보육 욕구(니즈)에 관계없이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만큼 정책 효과(특히 둘째아로의 출산 이행 효과)가 줄어들었다. 둘째, 무상 보육으로 인하여 민간 보육서비스의 양적 공급은

확대되었으나, 보육의 공공성 등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다양한 돌봄 유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러한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돌봄의 시간적 및 공간적 사각지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이다.

요컨대, 현대 한국 사회는 가족 형태 등의 변화에 따른 자녀 양육 방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와 노동시장 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부부)으로 하여금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금전적 비용, 시간적 비용, 정서적 비용 등을 유발하여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하여 이들은 경력 단절과 (추가)출산 중 양자택일을 하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공급 중심에서 다양한 선택과 욕구에 기반 한 맞춤형 공급(양적, 질적)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는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들 수 있다.

나. 패러다임 전환 기제

1)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

지난 10여 년 동안 보육 인프라는 시장 기제보다는 주로 정책을 통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은 시기마다 그리고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이나 철학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당초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수요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보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사회 복지적 시혜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인 국가 책임의 무상 보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녀 양육 가정의 특성 등에 따라 시설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 비중의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 복지적 시혜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일-가정 양립 제고와 출산을 제고로서 그 목적을 더욱 공고화하고, 이에 따라 취업 모 및 다자녀 등 자녀 양육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 방식의 선택에 따른 대체 수단들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외국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보육서비스의 대체 수단으로 가정 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과 육아휴직(급여)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보육(돌봄)에 대한 대체제이기보다 보육 등 특정 목적 이외 일반적인 양육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시설 보육 이용 욕구(needs)가 큰 집단에 대해서는 '종일형 보육서비스', 시설 보육 이용 욕구(needs)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이용 시간에 반비례한 자녀 양육수당 지급', 그리고 시설 보육 이용 욕구(needs)가 극히 약하거나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급 체계는 아동수당 등의 도입과 무관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중복 급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자녀를 위해 어떠한 돌봄서비스나 자녀 양육수당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편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몇몇 시간대(예로 오전, 오후, 야간 등이나 2시간, 4시간,

6시간 등)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고려하며, 양육수당 급여액은 가정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현행 보육시설의 유형도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2)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판단 근거는 보육서비스 공급 기관의 공공성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등이 모두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질은 물론 서비스의 질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이 담보되므로 그만큼 운영의 지속 가능성, 서비스의 신뢰성 수준 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구조에 입각하여 향후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한다. 그 방식으로 우선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미 어린이집이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민간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공공화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공급 체계의 전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자녀 양육 가정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국민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으로 영유아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더욱 낮아져 발생하는 사회 혼란(도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 한해 시설 보육 서비스 공급을 제한한다면 시설 공급 수요가 줄어들어 민간 어린이집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 지원 보육료만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육의 공공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 활동비 등의 일정한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산 부담을 고려할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6. 성 평등 수준 제고

한국 사회의 낮은 성 평등 수준은 결혼 및 출산과 깊은 인과성을 가진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성 평등 수준의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사회구조와의 복잡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 내에는 전통적 성 분업 역할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직장 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성 차별적인 요소들이 만연하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 따른 인식 변화와 충돌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이는 결혼 연기나 결혼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족 내와 직장 내 성 불평등은 결혼과 출산 시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며, 경력 단절 및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져 여성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좌절케 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성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성 평등 수준이 출산과 연계되는 접점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시적인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돌봄, 보건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 평등은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가족이나 거시적인 사회구조에서 성 평등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적 인식과 관행 불식, 가족 내에서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 등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높은 성 평등 실천은 사회적 생산은 물론 가족의 재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희돈. (1994).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과 전망.” 대학교육, 73, pp.79-90.
-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 오미애, 안형석. (2015).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6차(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4 건강보험통계.
- 국민은행. (2016). 월간 KB주택가격동향_시계열(2016.09).
- 국토교통부. (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 권정현. (2008). 패널연구: 2005년 사업체패널조사로 살펴 본 사업체에서 여성 근로자의 위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8권 11호. pp.78-90.
- 김경근. (1998). 한국에서의 교육수요 결정의 사회적 기제. 교육사회학연구, 8(2), pp.1-32.
- 김경근. (2016). 한국사회 교육열의 동인, 유산, 승화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 교육학연구, 54(1), pp.229-257.
- 김두섭.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0(1), pp.67-95.
- 김두환. (2015). 한국 고등교육팽창의 한계: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 사회사상과 문화, 18(3), pp.139-186.
-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6(1), pp. 118-142.
- 김성준. (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pp.151-223.
- 김정호, 홍석철. (2013). “보육료 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효과 분석”. 현진 권. (편).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중 제3장. 한국경제연구원. pp. 43-75.
- 김주섭, 이상준. (2000). 학력과잉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 실태분석.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류기철, 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pp.1-23.
- 민인식, 최필선. (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민현주, 김현지. (2011). 출산순위별 출산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45(4), pp.198-222.
-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 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 박남기. (1994). 한국인의 교육열 이해를 위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32(5), pp.185-206.
- 박라인, 황승록 (2015). 사업체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 널브리프. 2015년 5월. pp.112-129.
- 박현준, 김경근. (2012). 한국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분석: 1966-2010. 교육사회학연구, 22(4), pp.113-139.
- 배규식. (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95, 2012.9. pp.128-162.

- 백성준. (2010).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건설주택포럼 세미나 자료집.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제3차(200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제4차(2008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자료.
- 보건복지부. (201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한 178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16. 4. 29.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5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서민희, 이해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서정연, 김한곤. (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8(3), pp.1-24.
- 성지미. (2007).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 차별과 그 결정 요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7(3). 2007.9, pp.63-91.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II-1. 동 부서.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4).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4. 동 부서.
- 오창섭, 최성혁. (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혼인율 하락과 초혼연령 상승의 경제적 요인.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2(1), pp.91-215.
- 우석진. (2008). 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14(3), pp.55-105
- 우석진. (2010).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pp.51-74.
- 우석진, 송헌재, 김태우. (20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거시적 성과 실증분

- 석 및 질 제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pp.159-184.
- 윤태림. (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동방도서.
- 이삼식. (1998). 子女의 性構成에 따른 人工妊娠中絶 分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18(2). 1998.12. pp.83-105.
- 이삼식, 조남훈. (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윤여원, 이지혜 (2012).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윤홍식, 신현웅, 최효진. (2013). 취업 부모의 출산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모보험제도 모형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편). (2014).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혁. (2014). 비대칭 사회와 합리적 선택이론 : 제임스 콜만의 사회이론. 사회와이론, 25, pp.153-188
- 이종각. (2002). 교육열의 운동법칙과 결합법칙. 교육사회학연구. 12(1), 173-192.
- 이희연, 노승철. (2014). 고급통계분석론 : 이론과 실습. 경기: 문우사.
- 장지연, 윤자영, 이경희, 강병식, 박혁. (2014). 2013년 고용보험사업 평가 보고서 : 제2부 여성 및 모성지원사업군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평가센터.

- 정은희,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3(1), pp.5-34.
- 정의철. (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p.19.
- 정진호, 이규용, 최강식. (2004). 학력간 임금격차의 변화와 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혜은, 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1(1), pp.151-168.
- 주재선, 문유경, 김영택, 김영란, 송치선, 임연규, 등. (2015). 201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귀순. (2005). Strauss와 Calsser의 근거방법이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pp.82-90.
- 최윤경, 박진아, 우석진, 배지아. (2015).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통계청. (1999). 1998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03). 2002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07). 2006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09). 2008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10). 2009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청. (2011a). 2010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청. (2011b). 2010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11c).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2). 2011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청. (2013a). 2012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청. (2013b). 2012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14). 2013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청. (2015a). 2014 사망원인보완조사.

- 통계청. (2015b). 2014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15c). 2014 건강보험통계.
- 통계청. (2016a). 2015년 출생 통계(확정). 2016. 8. 24일자 보도자료.
- 통계청. (2016b).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하준경. (2012).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39, pp.137-173.
- 한국노사관계학회·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10).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 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6). KDI 부동산시장 동향, 2016년 1/4분기. 동 기관.
- 홍석철 등(2012). 2011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저출산대응 사업군 심층평가: 결혼·출산·육아 지원사업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Chicago, IL: Dorsey Pres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pp.179-211.

- Ajzen, I. and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jzen, I. and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_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8). pp.203-232.
- Alwin, D. F. and Scott, J. (1996). Attitude change: Its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using longitudinal surveys. In: Taylor B and Thomson K (eds) Understanding Change in Social Attitudes. Aldershot: Dartmouth, pp.75-106.
- Anderson, T. and Kohler, H. P. (2013).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9(2), pp.196-215.
- Arellano, M. and Bond, S. (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8(2), pp.277-297.
- Arpino, B., Esping-Andersen, G. and Pessin, L.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pp.370-382.
- Baker, D. (2014). The schooled society: The educational transformation of global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 Baltagi, B. (2008).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John Wiley & Sons.
- Basu, A. M. (1999). Women's education, marriage, and fertility in south Asia: Do men really not matter?. in Critical Perspectives on Schooling and Fertility in the Developing World, (pp. 267-286),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 Basu, A. M. (2002). Why does education lead to lower fertility? A

- critical review of some of the possibilities. *World Development*, 30(10), pp.1779-1790.
- Becker, G. S. (1973). A Theory of Marriage :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pp.813-846.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and Lewis, H. G. (1974). Interaction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In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pp. 81-9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 S., Murphy, K. M. and Tamura, R. (1994).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S. O., Cinnirella, F. and Woessmann, L. (2010). The trade-off between fertility and education: evidence from before the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15(3), pp.177-204.
- Billari, F. and Kohler, H.-P.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leakley, H., and Lange, F. (2009). Chronic disease burden and the interaction of education, fertility, and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1), pp.52-65.
- Blossfeld, H. P., and Jaenichen, U. (1992). Educational expansion and changes in women's entry into marriage and motherhood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2), pp.302-315.
- Bracher, M., and Santow, G. (1998). Economic independence and union

- formation in Sweden. *Population studies*, 52(3), pp.275-294.
- Brewster, K. L. and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271-296.
- Brinton, M. C. (2016). Intentions Into Actions Norms as Mechanisms Linking Macro-and Micro-Level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 Brooks, C. and Bolzendahl, C. (2004). The transformation of US gender role attitudes: Cohort replacement, socio-structural change, and ideological learning. *Social Science Research*, 33, pp.106-133.
- Caldwell, J. C., Reddy, P. H., and Caldwell, P. (1983). The causes of marriage change in South India. *Population Studies*, 37(3), pp.343-361.
- Chamberlain, G. (1980). Analysis of Covariance with Qualitative Data.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 pp.225-238.
- Chamberlain, G. (1982).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for Panel Data. *Journal of Econometrics*, 18, pp.5-46.
- Chesnais, J. C. (2000). Determinants of Below Replacement Fertility. I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Issue 1999, 40/41, pp.126-136.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Y: Academic Press.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 Crompton, R. and Harris, F. (1998).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 the Impact of Occupa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12, pp.297-315.
- Danigelis, N. L., Hardy, M. and Cutler, S. J. (2007). Population aging,

- intracohort aging and sociopolitical 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 pp.812-830.
- Diamond, I., Newby, M., and Varle, S. (1999). Female education and fertility: Examining the evidence. in *Critical perspectives on schooling and fertility in the developing world* (pp. 23-48),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 Dore, R. (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London: Stylus Pub Llc.
- Drori, G. S., Meyer, J. W., and Hwang, H. (2006). *Globalization and organization: World society and organization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and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pp.1-31.
-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oldstein, J. R., and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 pp.506-519.
- Grant, J., Hoorens, S., Sivadasan, S., Loo, M. van het., DaVanzo, J., Hale, L., Gibson, S. and Butz, W. (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Corporation.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Haurin, D., Hendershott, P. and Kim, D. (1993). The impact of real rents and wages on household formation. *Review of Economics*

- and Statistics*. 75(2), pp.284-293.
- Heckman, J. J. (1976). A life-cycle model of earnings, learning, and consump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pp.S11-S44.
- Holtz-Eakin, D., Newey, W., and Rosen, H. S. (1988). Estimating vector autoregressions with panel data.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56(6), pp.1371-1395.
- Hui, E., Zheng, X. and Hu, J. (2012). Housing price, elderly dependency and fertility behaviour. *Habitat International*. 36, pp.304-311.
- Inglehart, R. (1981). Post-materialism in an environment of insecu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 pp.880-900.
- Isen, A., and Stevenson, B. (2010). Women's education and family behavior: Trends in marriage, divorce and fertility (No. w157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ejeebhoy, S. J. (1995). Women's Education, Autonomy, and Reproductive Behavior: Experi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Oxford: Clarendon Press.
- Kraaykamp, G. (2002). Cumulative Advantages and Inequality in Lifestyle: a Dutch Description of Distinction in Taste. *The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ciences*, 38, pp.121-143.
- Kulu, H. and A. Vikat. (2007). Fertility differences by housing type: an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r of selective moves? *Demographic Research*. 17(26), pp.775-802.
- Lam, D. (1988). Marriage markets and assortative mating with household public goods: Theoretical results and empirical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 pp.462-487.
- Lappegård, T. (2010),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6, pp.99-116.
-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pp.457-479.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p.17-62.
- Lesthaeghe, R. (2001).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Recent fertility trends and forecasts in six Western European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IUSSP Seminar 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rch, pp.21-23.
- Lesthaeghe, R. and Surkyn, J. (2004). Value orientations an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in northern, western and southern Europe: An update. Demographic Research, Special Collection, 3, pp.45-86.
- Lesthaeghe, R. and Moors, G. (1994). Living arrangements and parenthood: Do values matter? VUB Brussels, IPD Working Paper No. 1994-2.
- Lesthaeghe, R., and van de Kaa, D. J. (1986). Twee Demografische Transitities? (Two Demographic transitions?). pp.9-24 in: D. J. van de Kaa and R. Lesthaeghe (eds.), Bevolking: Groei en Krimp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Deventer, Van Loghum Slaterus.
- Liu, M. and Clark, J. (2016). The effect of the price or rental cost of housing on family size: a theoretical analysis with reference to New Zealand. New Zealand Economic Papers.
- Lundberg, S., and Pollak, R. A. (2007). The American family and family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2), pp.3-26.
- Matysiak, A. and Vignoli, D. (2012). Methods for reconciling the micro

- and the macro in family demography research: A systematisation. In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Analysis of Large Data-Sets* (pp. 475-484).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eyer, J. W. (1977). The Effects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1), 55-77.
- McDonald, P. (2002).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l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57 (3), pp.417-446.
- McRae, S. (2003). Constraints and choices in mothers' employment careers: a consideration of Hakim's preference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3), pp.317-338.
- Meyer, J. W. (1977). The Effects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1), pp.55-77.
- Mills. (2015). Chapter 9. The Dutch Fertility Paradox : How the Netherlands Has Managed to Sustain Near-Replacement Fertility. Rindfuss and Choe(Eds.) (2015). *Low and Lower Fertility : variations across developed countries*, pp.161-188. Springer.
- Mincer, J. (1984).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3), pp.195-205.
- Misra, G. D., Cooper R., and Kuh, D. (2010). A life course approach to reproductive health: theory and methods. *Maturitas*, 65, pp.92-7
- Moffitt, R. (1984). The estimation of a joint wage-hours labor supply model.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 pp.550-566.
- Murphy, T. E. (2010). Old Habits Die Hard (Sometimes). Can département heterogeneity tell us something about the French fertility decline. Bocconi University Innocenzo Gasparini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p.364.
- Murtin, F. (2009). *On the Demographic Transition*. OECD Publishing.
- Myrskylä, M., Kohler, H.-P. and Billari, F. C. (2009). *Nature* 460,

- pp.741-743.
- OECD(2015). 2015 Education at a Glance.
- OECD(2016). 2016 Education at a Glance.
- Park, H. and Smits, J. (2005).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South Korea: Trends 1930-1998.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3, pp.103-127.
- Parr, N., and Guest, R. (2011), "The contribution of increases in family benefits to Australia's early 21st-century fertility increase: An empirical analysis," *Demographic Research*, 25(6), pp.215-244.
- Philipov, D., Thevenon, O., Klobas, J. Bernardi, L. and Liefbroer, A. C. (20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 Rabe-Hesketh, S. and Skrondal, A. (2012).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Volume II: Categorical Responses, Counts, and Survival. 3rd edition. STATA Press.
- Raub, W., Buskens, V. and Van Assen, Marcel A. L. M. (2011). Micro-Macro Links and Microfoundations in Sociology,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5:1-3, 1-25, DOI: 10.1080/0022250X.2010.532263
- Requena, M., and Salazar, L. (2014). Education, Marriage, and Fertility The Spanish Case. *Journal of Family History*, 39(3), pp.283-302.
- Scott, J. and Braun, M. (2006). "Individualization of family values?" in P. Ester, M. Braun, and P. Mohler (eds.), *Globalization, Value Changes and Generations*. Brill Academic Publishers.
- Simon, C. and Tamura, R. (2008).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 pp.33-42.
- Steel, A, Frawley J, Dobson A, Jackson C, Lucke J, Tooth L, Brown W,

- Byle J, and Mishra G. (2013). Women's health in NSW - a life course approach: a rapid review.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CREWH21.
- Strauss, A. L., and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d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 Ström, S. (2010). Housing and first births in Sweden, 1972-2005. *Housing Studies*. 25(4), pp.509-526.
- Tomlinson, J. (2006). "Women's work-life balance trajectories in the UK: Reformulating choice and constraint in transitions through part-time work across the life-cours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4(3), pp.365-382.
- UN. (1995).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ume1: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ST/ESA/SER.A/149, 1995.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pp.1-59.
- Vikat, A. (2004),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and childbearing in Finland, *Demographic Research*, Special collection 3.
- Walker, J. R. (1995).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on recent Swedish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8(3), pp. 223-251.
- Wooldridge, J. M. (2013). Nonlinear Models : Correlated Random Effects Panel Data Model. IZA Summer School in Labor Economics. Michigan State University.
- World Bank. (2011). Gender Statistics Database.
- Yi, J., and Zhang, J. (2010). The effect of house price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g Kong. *Economic Inquiry*, 48(3), pp.635-65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결혼,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태통계: 출산.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0=100).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OECD Family Database(2014).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Stat. <http://stats.oecd.org/>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